

연구보고서 2018-46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데이터 주도의 혁신적 포용 사회안전망 개편 방안



최현수 · 백승호 · 진재현 · 고금지

【책임연구자】

최현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주요 저서】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 개편방안의 효과성 분석 및
소득보장체계 연계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0(연구책임)

공간정보 연계를 통한 보육서비스 인프라 적정성 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6(연구책임)

한국의 노인빈곤실태 및 정책적 시사점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6(연구책임)

【공동연구진】

백승호 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진재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문연구원

고금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원

연구보고서 2018-46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데이터 주도의 혁신적 포용 사회안전망 개편 방안

발 행 일 2018년 12월

저 자 최 현 수

발 행 인 조 흥 식

발 행 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주 소 [30147]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1층~5층)

전 화 대표전화: 044)287-8000

홈페이지 <http://www.kihasa.re.kr>

등 록 1994년 7월 1일(제8-142호)

인 쇄 처 (주)한디자인코퍼레이션

목 차

Abstract	1
요약	3
제1장 서론	11
제1절 연구 배경 및 연구 목적	13
제2절 연구 범위 및 주요 연구 내용	17
제3절 연구 방법 및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26
제2장 4차 산업혁명과 혁신적 포용 사회안전망 개편 필요성 및 추진 방향	33
제1절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새로운 사회적 위험과 데이터 주도의 정책 혁신 필요성	36
제2절 데이터 주도의 혁신적 포용 사회안전망 개편 필요성 및 추진 방향: 혁신적 포용국가	46
제3장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사회적 위험과 사회안전망 개편 관련 국민 인식조사	73
제1절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사회적 변화와 새로운 사회적 위험에 대한 인식	76
제2절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사회안전망 개편 필요성과 방향에 대한 인식 ...	89
제4장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데이터 기반 포용과 혁신의 소득보장체계 개편 방안	107

제1절 RTI(Real-Time Information) 시스템 기반 사회보험 운영 패러다임	
개편 및 사각지대 해소	110
제2절 정책실험 데이터 기반 대안적 소득보장제도로서의 기본소득 도입	
가능성 모색	134
 제5장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데이터 기반 포용과 혁신의	
복지서비스 패러다임 전환 방안	169
제1절 빅데이터와 위험예측 모형(PRM) 기반 정책 사각지대 발굴 및	
예방적 복지서비스 제공	172
제2절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기반 찾아주는 복지서비스 지원체계로의	
패러다임 전환	187
 제6장 결론: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혁신적 포용 사회안전망	
구축 방향	199
제1절 요약: 주요 연구 내용 및 연구 결과	201
제2절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데이터 주도의 혁신적 포용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하여	209
 참고문헌	215
 부 록: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사회적 위험과 사회안전망 대응 필요성	
관련 국민 인식조사 설문지	225

표 목차

〈표 3-1〉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사회적 변화와 사회안전망 인식조사 개요	76
〈표 3-2〉 국민 인식조사 응답자 특성별 분포	77
〈표 3-3〉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인지 정도	81
〈표 3-4〉 4차 산업혁명 관련 주요 개념과 이슈에 대한 인지 정도	82
〈표 3-5〉 4차 산업혁명이 자신의 삶과 우리 사회에 미칠 것으로 예상하는 영향 정도에 대한 인식(1~10점)	87
〈표 3-6〉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해 혁신적 변화가 필요한 정책 우선순위	89
〈표 3-7〉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정책 영역별 중요도 및 우리나라의 정책적 대응 수준에 대한 인식(1~10점)	92
〈표 3-8〉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기본소득 도입과 기존 복지제도 조정 및 증세 관련 인식(1~4점)	95
〈표 3-9〉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사회안전망 개편 방향에 대한 인식(1~10점)	97
〈표 3-10〉 복지급여 수혜 경험 및 납세 여부에 따른 집단 유형 구분	100
〈표 3-11〉 복지급여 수혜 경험 및 납세 여부에 따른 집단별 기본소득 도입 및 기존 복지제도 조정과 증세에 대한 인식(1~4점)	102
〈표 3-12〉 복지급여 수혜 및 납세 여부에 따른 집단별 사회안전망 개편 방향(기본생활보장) 에 대한 인식(1~10점)	104
〈표 3-13〉 복지급여 수혜 및 납세 여부에 따른 집단별 사회안전망 개편 방향(보편적 복지 확대)에 대한 인식(1~10점)	104
〈표 3-14〉 복지급여 수혜 및 납세 여부에 따른 집단별 사회안전망 개편 방향(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증세)에 대한 인식(1~10점)	104
〈표 3-15〉 복지급여 수혜 및 납세 여부에 따른 집단별 사회안전망 개편 방향(포용적 사회안전망을 통한 혁신 가능성)에 대한 인식(1~10점)	106
〈표 3-16〉 복지급여 수혜 및 납세 여부에 따른 집단별 사회안전망 개편 방향(찾아주는 복지서비스 지원체계)에 대한 인식(1~10점)	106

그림 목차

[그림 1-1] 연구 목적 및 주요 연구 내용 구성	20
[그림 2-1] 4차 산업혁명의 개념과 혁신적 변화	37
[그림 2-2] 데이터 주도 혁신 메커니즘의 개념적 구조	44
[그림 2-3] 데이터 주도 정책 추진을 위한 데이터 분석의 최적화 발전 단계	45
[그림 2-4] 우리 사회의 고착화된 위기와 새로운 도전	49
[그림 2-5] 우리 사회에서 가계의 지속 가능성 위기	51
[그림 2-6] 노후, 의료, 교육 등 일상생활의 비용에 대한 가계의 사적 부담	53
[그림 2-7] 우리 사회의 노동시장 불평등	54
[그림 2-8] 우리 사회 불평등의 원인과 순환 구조	55
[그림 2-9] 현재 우리 사회정책의 재분배 효과	55
[그림 2-10] 우리나라 사회정책의 역사적 흐름(1961~2018)	57
[그림 2-11] GDP 대비 사회지출(교육비 제외) 비중 추이	58
[그림 2-12] GDP 대비 사회정책 관련 공적 사회지출(교육비 포함) 비교	59
[그림 2-13] 과거 정부별 사회정책 패러다임의 흐름과 특징	60
[그림 2-14] 최소주의 사회정책의 현 주소: 경제수준과 사회수준의 괴리	62
[그림 2-15] 문재인 정부 사회정책의 시대적 사명과 의미	63
[그림 2-16] 포용과 혁신을 위한 국제기구의 정책 동향	65
[그림 2-17] 문재인 정부 포용과 혁신의 사회정책 비전과 전략	67
[그림 2-18] 문재인 정부 경제패러다임과 사회정책의 관계	68
[그림 2-19] 포용적 사회정책이 사회의 혁신 능력 향상에 미치는 경로	70
[그림 2-20] 혁신적 포용국가를 위한 사회정책의 추진 방향	72
[그림 3-1] 4차 산업혁명과 사회안전망 관련 국민 인식조사 주요 내용 구성	78
[그림 3-2]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인지 여부	79
[그림 3-3]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국민의 인식 변화	80
[그림 3-4] 4차 산업혁명과 다양한 사회적 변화에 대한 관심 정도	83

[그림 3-5]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사회적 변화가 자신의 삶에 미치는 영향	84
[그림 3-6] 복지급여 수혜 경험 및 현재 수혜 여부	98
[그림 3-7] 소득세 납부 및 환급에 따른 실질적 납세 여부	99
[그림 4-1] 참여정부의 근로장려세제 도입 결정 당시(2005. 8.) 제시된 근로장려세제(EITC) 정책목표 및 기대효과	120
[그림 4-2]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사회보험 운영 패러다임 혁신적 개편 방안	128
[그림 4-3] 기본소득 정책실험 운영 프로세스 개요	166
[그림 5-1] 사회보장 빅데이터 기반 잠재적 위험예측 모형(Predictive Risk Modeling) 활용 프로세스	173
[그림 5-2]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공공데이터 연계를 통한 복지사각지대 발굴관리시스템 개요 및 운영 프로세스	178
[그림 5-3]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공공데이터 연계를 통한 e아동행복지원시스템 개요 및 운영 프로세스	180
[그림 5-4] e아동행복지원시스템 운영 프로세스별 구축사업 및 연구 범위	181
[그림 5-5] e아동행복지원시스템 연계정보 및 활용 프로세스	182
[그림 5-6] 신청주의에서 찾아주는 복지서비스 지원 패러다임으로의 전환	188
[그림 5-7] 찾아주는 복지서비스 지원시스템 개요 및 운영 프로세스 제안	196
[그림 6-1] 사람 중심의 4차 산업혁명 구현을 위한 데이터 주도의 혁신적 포용 사회안전망 구축 방향	213

Abstract <<

The Data-driven restructuring strategy of inclusive and innovative social policy for the era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Project Head: Hyunsoo Choi

- Research Purpose
 - ☞ The Data-driven Restructuring Strategy of Inclusive & Innovative Social Policy for the era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 Research Outline and Content



- Key Word ☞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Intelligent Information Society, Data-driven Policy Innovation, Inclusive & Innovative Social Policy, Welfare Paradigm Shift

요약 <<

-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우리 사회 전반의 다양한 변화 양상, 일자리 대체 및 감소 등 노동시장의 변화를 중심으로 새로운 사회적 위험들이 제시되고 있으나,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포용적 사회안전망 강화 또는 혁신적인 개편 방안 등 다양한 전략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상황임.
-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새로운 사회적 위험 요인을 도출하고, 기존의 사회적 위험에 대응해 왔던 사회보장체계의 혁신적 변화와 개편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람 중심의 4차 산업혁명을 구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함.
-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국내에서도 플랫폼 기반의 카풀제도 시행을 둘러싼 택시산업 종사 노동자들과의 대립과 갈등, 정책적인 혼란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향후 우리 사회 각 분야에서 직면할 수 있고 극복해야 하는 4차 산업혁명의 기술발전과 적용으로 인한 부정적인 단면이라고 할 수 있음.
- 2017년 세계경제포럼에서도 2016년 이후 모든 분야에서 커다란 반향을 일으켰던 4차 산업혁명이 향후 초래할 다양한 위험(global risk)에 대한 대응 전략 모색이 강조되었음.
- 이러한 배경에 따라 본 연구는 ‘사람 중심의 4차 산업혁명 구현’을 위하여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사회적 위험에 대응함과 동시에 핵심 기술을 적극 활용하여 데이터 주도의 혁신적 사회안전망 개편 방

4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데이터 주도의 혁신적 포용 사회안전망 개편 방안

안을 제안하고 이를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 가능한 ‘혁신적 포용 사회안전망’ 구축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였음.

-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다양한 종류의 데이터를 연계 구축하여 미래를 예측함으로써 새로운 지식과 가치를 창출할 수 있으며, 과거와 전혀 다른 새로운 시장과 상품들이 최근 들어 등장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동안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보다 나은 정책이나 서비스를 국민들에게 제공하는 방식을 제안하였음.
- 이는 기존 근거 기반 정책 수립을 넘어서는 것으로 4차 산업혁명의 발전된 기술을 포용적 사회안전망 구축과 혁신을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식으로, 이러한 과정을 데이터 주도 혁신(Data-driven Innovation) 또는 데이터 주도 정책(Data-driven Policy)의 개념으로 본 연구에 활용하였음.

<연구목적>

4차 산업혁명 대응과 동시에 지능정보기술 활용을 위한
데이터 주도의 혁신적 사회 안전망 개편방안을 통해
모두가 행복한 포용적인 사회 안전망을 구축함으로써
‘사람 중심의 4차 산업혁명 시대’와
‘다 함께 잘 사는 혁신적 포용국가’ 실현에 기여

- 이를 반영하여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제도적 관점에서 제시되어 왔던 사회안전망 개편 방안을 넘어서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사회적 변화와 새로운 사회적 문제에 적극 대응하면서 동시에 발전된 지능정보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데이터 주도의 정책 인프라 구축 및 활용 방안을 강조함.

- 이를 기반으로 혁신적 사회안전망 개편과 운영 패러다임의 전환을 추진함으로써 보다 포용적인 사회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였음.
- 연구 목적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새로운 사회적 변화와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데이터 주도의 혁신적 개편 방안을 통해 기존의 사회안전망이 지닌 한계를 개선함과 동시에 대안적 소득보장체계인 기본소득과 복지서비스 패러다임의 전환 방안 제안을 통해 보다 포용적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방향을 모색하는 내용을 핵심적인 연구 범위로 설정하였음.
- 지난 20여 년 동안 우리나라의 공공과 민간 영역에서 구축된 다양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최근 4차 산업혁명의 핵심적인 기술을 활용함으로써, 데이터 주도 또는 데이터 기반의 혁신적 사회안전망 패러다임 개편을 통해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새로운 변화와 일자리 및 소득 감소 문제에 대응하면서 동시에 사회안전망의 포용성을 제고하기 위한 전략을 본 연구에서 중점적으로 다루었음.
- 특히 최근 정책기획위원회가 포용국가 전략회의(2018. 9. 6.)를 통해 발표한 ‘문재인 정부 포용국가 비전과 전략’을 중심으로 사회정책 추진 필요성 및 방향성을 제시함.
- 기존의 국정과제나 사회보장 기본계획의 포괄적이고 다양한 정책 영역별 제도 중심 개편 방안과는 차별화하여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데이터 주도의 혁신적 사회안전망 개편 방안을 통해 포용성을 동시에 제고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였음.

□ 요컨대 최근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거시적 관점의 비전이 ‘혁신적 포용국가’라면, 본 연구에서 제안하고자 하는 혁신적 포용 사회안전망 개편 방안은 미시적 측면에서 이러한 혁신적 포용국가를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것임.

□ 이러한 연구 배경 및 목적에 따라 연구 목차를 아래와 같이 구성하였으며, 각 장에서 수행한 연구 내용은 다음과 같음.

제2장 4차 산업혁명과 혁신적 포용 사회안전망 개편 필요성 및 추진방향

(제1절)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새로운 사회적 위험

(제2절) 데이터 주도 혁신적 포용 사회안전망 개편 필요성 및 추진방향

제3장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사회적 위험과 사회안전망 개편 관련 국민 인식조사

(제1절)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사회적 변화와 새로운 사회적 위험에 대한 인식

(제2절)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사회안전망 개편에 대한 인식

**제4장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포용과 혁신의 소득보장제도
개편 방안**

(제1절) RTI(Real-time Information) 시스템 기반 사회보험 운영 패러다임 개편 및 사각지대 해

(제2절) 정책 실험 데이터 기반 대안적 소득보장제도로써 기본소득 제도 도입 가능성 모색

**제5장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포용과 혁신의 복지서비스
패러다임 전환 방안**

(제1절) 빅데이터와 위험 예측 모형(PRM) 기반 정책 사각지대 발굴 및 예방적 복지서비스 제공

(제2절)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기반 찾아주는 복지서비스 지원체계로의 복지패러다임 전환

제6장 결 론: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혁신적 포용 사회안전망 구축방향

□ 본 연구에서는 4장(소득보장)과 5장(사회서비스)에서 4차 산업혁명의 새로운 사회적 위험에 대한 대응과 동시에 사람 중심의 4차 산업혁명을 구현하기 위한 ‘혁신적 포용 사회안전망 개편 방안’으로 다

음의 4가지 구체적 정책 추진 방안을 제안함.

-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데이터 주도의 포용과 혁신의 소득보장체계 개편을 위해서, 첫 번째로 기존 사회안전망의 혁신적 개편 방안으로 실시간 소득 파악 정보시스템(RTI) 기반의 사회보험 운영 패러다임 개편 및 사각지대 해소 방안을, 두 번째로 대안적 소득보장제도로써 정책실험 데이터 기반 기본소득 도입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안함.
-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데이터 기반 포용과 혁신의 사회서비스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서는 첫 번째로, 빅데이터와 위험예측 모형 기반 정책 사각지대 발굴 및 예방적 복지서비스 제공 방안을, 두 번째로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기반 찾아주는 복지서비스 지원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을 위한 구체적 대안을 제시함.
- 본 연구의 핵심적인 개념은 4차 산업혁명, 지능 정보사회, 데이터 주도 정책 혁신, 지능정보기술로 인한 새로운 사회적 위험, 포용과 혁신의 사회안전망, 복지 패러다임 전환임.

8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데이터 주도의 혁신적 포용 사회안전망 개편 방안

□ 요컨대 사회정책 강화로 한국 사회의 포용성을 높이고, 혁신적 사회로 이행하기 위한 기반 구축을 위해서 “경제정책 우선주의 & 최소주의 사회정책”으로 요약할 수 있는 과거 우리나라의 국정 기조 및 경제-사회정책 또는 성장-분배 패러다임에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회정책을 경제정책과 균형적으로 추진해야 하며, 이러한 사회정책 추진하에 포용과 혁신의 상호작용을 바탕으로 포용과 혁신의 수준을 동시에 제고할 수 있는 방향으로 보다 강화되어야 함.

○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사회경제적 변화와 이로 인한 완전히 새로운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는 동시에 4차 산업혁명의 핵심적인 지능정보기술을 사람 중심의 관점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포용적이면서 혁신적인 사회안전망을 바탕으로 삶의 안정과 자유로운 선택을 통해 소외되거나 배제되지 않고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기술발전의 성과를 모두가 참여하면서 누릴 수 있는 “사람 중심의 4차 산업혁명, 다 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를 실천해야 함.

□ 사람 중심의 4차 산업혁명 구현을 위한 데이터 주도의 혁신적 포용
사회안전망 구축 방향



*주요 용어: 4차 산업혁명, 지능정보사회, 빅데이터, 인공지능, 데이터 주도 정책
혁신, 혁신적 포용 사회안전망, 복지 패러다임 전환

제 1 장

서론

제1절 연구 배경 및 연구 목적

제2절 연구 범위 및 주요 연구 내용

제3절 연구 방법 및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 또는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사회경제적 변화와 이슈에 대한 우리 사회의 관심은 2016년 1월에 개최된 다보스 세계경제포럼 이후 시작되어 알파고 신드롬과 함께 우리 국민 모두의 평범한 일상생활 속으로 매우 빠르게 확산되었다.

지난 정부에서 국정과제로 추진되었던 ‘정부 3.0’은 알파고로 인한 사회적 이슈와 대중적 관심을 바탕으로 민간 영역뿐만 아니라 공공 정책 영역에서도 중요한 화두가 되었다. 이러한 분위기를 바탕으로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중심으로 한 4차 산업혁명의 핵심적 기술이 가져올 우리 사회의 변화 양상 및 대응 전략과 관련하여 탄핵 국면이 한창 진행되던 2017년 1월에 당시 미래창조과학부와 관계부처 합동으로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중장기 지능정보사회 종합대책’이 발표된 바 있다. 대통령 탄핵 이후 실시된 2017년 5월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모든 후보들은 4차 산업혁명 관련 공약을 제시하였으며,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설치된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는 2017년 11월 ‘사람 중심의 4차 산업혁명 대응계획’을 발표하고 이와 관련된 대응 전략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처럼 불과 3년도 채 되지 않은 시간 동안 4차 산업혁명은 우리 일상과 삶의 모습들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또한, 4차 산업혁명은 이제 모든 분야에서 누구든지 받아들이는 현재이자 가까운 미래에 대한 수

식어 또는 전제조건이다. 그러나 이처럼 빅데이터, 인공지능, 블록체인 등 핵심적 지능정보기술로 인해 변화되고 있는 우리의 일상생활에는 삶의 편리함이나 새로운 일자리와 같은 희망적 변화와 함께 새로운 형태의 소외와 사회적 배제라는 어두운 모습이 공존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하여 빠르게 발전하는 다양한 기술을 활용하기 위한 각 분야별 전략들이 수립되어 구체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반면, 사람이 배제된 기술 적용에 의한 부정적 측면으로 비정형 플랫폼 노동자의 증가 등 노동시장의 급격한 변화, 일자리와 소득 감소, 양극화, 프라이버시 침해 등의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하지만 이에 대응하기 위한 포용적 사회안전망 강화 등 정책적 대응 전략은 구체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동안 발표된 정부 및 위원회의 4차 산업혁명 대응 전략 마련을 위한 계획이나 최근 수행된 4차 산업혁명 관련 연구들은 주로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들을 활용하기 위한 전략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으며, 특히 보건복지 분야는 대부분 보건의료 영역에서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헬스케어, 치매예방 등 전략에 집중되어 있다. 2017년 11월 4차 산업혁명위원회에서 발표한 대응계획에는 노동시장 및 일자리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서 지능화 핵심인재 양성, 고용구조 변화에 대응한 전직교육 강화, 고용보험 확대 등 일자리 안전망 확충, 사이버 안전망과 인간 중심 윤리체계 확립을 대응 전략으로 제시하고 있다(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 2017). 또한 최근 발표된 4차 산업혁명위원회의 주요 성과 및 추진 방향에 따르면, 출범 1년 만에 국민적인 공감대는 형성되고 변화하기 시작하였으며, 국민적 공감대를 기초로 4차 산업혁명에 선제적·능동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며 ‘모두가 행복한 사람 중심의 4차 산업혁명’을 지향한다고 제시(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 2018)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연구 및

자료들은 4차 산업혁명 관련 데이터 및 기술 활용 확산, 신성장 동력으로서 다양한 산업 혁신 등을 다루고 있으며, 4차 산업혁명의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 또는 기술 활용을 통한 혁신적인 개편 방안 등 사회정책 측면의 대응과 관련하여 구체적 대안들이 제시된 연구는 많지 않다. 반면, 2010년 지방선거 이후 여전히 선별적 복지 대 보편적 복지에 대한 논쟁이 지속되고 있고 정부가 국정과제를 통해 단계적 기본생활보장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재정소요나 기존 제도와의 조정 등 실현 가능성 측면에서 주목받지 못한 기본소득이 4차 산업혁명의 지능정보기술에 의한 일자리 대체와 소득 감소 등 위험 요인과 기존 사회보장체계의 한계가 부각되면서 대중적으로 큰 관심을 끌고 있다. 특히, 해외의 정책실험 사례를 통해 대안적 소득보장체제로 주목받으면서 기본소득 도입 필요성과 관련된 연구들과 일부 지자체를 통한 정치적 실험 논의가 중심을 이루고 있다.

요컨대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우리 사회 전반의 다양한 변화 양상, 일자리 대체 및 감소 등 노동시장의 변화를 중심으로 새로운 사회적 위험들이 제시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포용적 사회안전망 강화 또는 혁신적인 개편 방안 등 다양한 전략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새로운 사회적 위험 요인을 도출하고, 기존의 사회적 위험에 대응해 왔던 기존 사회보장체계의 혁신적 변화와 개편 방안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람 중심의 4차 산업혁명을 구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국내에서도 플랫폼 기반의 카풀제도 시행을 둘러싼 택시산업 종사 노동자들과의 대립과 갈등, 정책적인 혼란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향후 우리 사회 각 분야에서 직면할 수 있고 극복해야 하는 4차 산업혁명의 기술발전과 적용으로 인한 부정적인 단면이라고 할

수 있다. 2017년 세계경제포럼에서도 2016년 이후 모든 분야에서 커다란 반향을 일으켰던 4차 산업혁명이 향후 초래할 다양한 위험(global risk)에 대한 대응 전략 모색이 강조되었다.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위험을 5가지의 영역(economic, environmental, geopolitical, societal, technological)으로 구분하고, 생애주기적 관점(whole-of-life approach)에서 새로운 사회보장체계 추진 필요성을 제시한 바 있다(WEF, 2017a; WEF, 2017b).

이러한 배경에 따라, 본 연구는 ‘사람 중심의 4차 산업혁명 구현’을 위하여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사회적 위험에 대응함과 동시에 핵심 기술을 적극 활용하여 데이터 주도의 혁신적 사회안전망 개편 방안을 제안하고 이를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 가능한 ‘혁신적 포용 사회안전망’ 구축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였다.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다양한 종류의 데이터를 연계 구축하여 미래를 예측함으로써 새로운 지식과 가치를 창출할 수 있으며, 과거와 전혀 다른 새로운 시장과 상품들이 최근 들어 등장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동안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보다 나은 정책이나 서비스를 국민들에게 제공하는 방식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는 기존 근거 기반 정책 수립을 넘어서는 것으로 4차 산업혁명의 발전된 기술을 포용적 사회안전망 구축과 혁신을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식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이러한 과정을 데이터 주도 혁신(Data-driven Innovation) 또는 데이터 주도 정책(Data-driven Policy)의 개념으로 제시하였으며(OECD, 2014), 최근 정부에서도 혁신성장, 정부 혁신을 위한 데이터 주도의 정책을 강조하고 있다.

이를 반영하여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제도적 관점에서 제시되어 왔던 사회안전망 개편 방안을 넘어서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사회적 변화와

새로운 사회적 문제에 적극 대응하면서 동시에 발전된 지능정보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데이터 주도의 정책 인프라 구축 및 활용 방안을 강조한다. 이를 기반으로 혁신적 사회안전망 개편과 운영 패러다임의 전환을 추진함으로써 보다 포용적인 사회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목적〉

4차 산업혁명 대응과 동시에 지능정보기술 활용을 위한
데이터 주도의 혁신적 사회 안전망 개편방안을 통해
모두가 행복한 포용적인 사회 안전망을 구축함으로써
‘사람 중심의 4차 산업혁명 시대’ 와
‘다 함께 잘 사는 혁신적 포용국가’ 실현에 기여

제2절 연구 범위 및 주요 연구 내용

1. 연구 범위

이상에서 제시한 연구 목적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새로운 사회적 변화와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데이터 주도의 혁신적 개편 방안을 통해 기존의 사회안전망이 지닌 한계를 개선함과 동시에 대안적 소득보장체계인 기본소득과 복지서비스 패러다임의 전환 방안 제안을 통해 보다 포용적인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방향을 모색하는 내용을 핵심적인 연구 범위로 설정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이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근로장려제 도입 등 다양한 사회안전망 확대와 더불어, 2010년 행복e음, 2013년

범정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행정데이터 구축, 정부 3.0 추진에 따른 건강보험 등 공공 영역의 다양한 빅데이터가 구축 및 활용되고 있다. 이처럼 지난 20여 년 동안 우리나라의 공공과 민간 영역에서 구축된 다양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최근 4차 산업혁명의 핵심적인 기술을 활용함으로써, 데이터 주도 또는 데이터 기반의 혁신적 사회안전망 패러다임 개편을 통해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새로운 변화와 일자리 및 소득 감소의 문제에 대응하면서 동시에 사회안전망의 포용성을 제고하기 위한 전략을 본 연구에서 중점적으로 다루고자 한다.

최근 정책기획위원회와 각 부처가 합동으로 포용국가 전략회의(2018. 9. 6.)를 통해 ‘문재인 정부 포용국가 비전과 전략’을 발표한 바 있다. 여기서 제시한 ‘국민의 삶을 바꾸는 포용과 혁신의 사회정책’ 추진 방향은 포용국가의 비전과 전략하에 보다 포괄적인 범위에서 포용과 혁신을 위해 우리 사회정책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본 연구에서도 이러한 사회정책 추진 필요성 및 방향성을 2장에서 제시하되, 기존 국정과제나 사회보장 기본계획의 포괄적이고 다양한 정책 영역별 제도 중심의 개편 방안과는 차별화하여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데이터 주도의 혁신적 사회안전망 개편 방안을 통해 포용성을 동시에 제고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다시 말해서, 최근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거시적 관점의 비전이 ‘혁신적 포용국가’라면, 본 연구에서 제안하고자 하는 ‘혁신적 포용 사회안전망’ 개편 방안은 미시적 측면에서 이러한 혁신적 포용국가를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현 정부의 국정전략과 국정과제 중에 ‘더불어 잘 사는 경제-소득 주도 성장을 위한 일자리 경제’, ‘더불어 잘 사는 경제-과학기술 발전이 선도하는 4차 산업혁명’,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모두가 누리는 포용적

복지국가-국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맞춤형 사회보장'과 관련된다. 또한 보건복지부(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중장기 복지정책 개편 방향 및 대안 모색), 기획재정부(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데이터 주도의 성장 추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차 산업혁명위원회(사람 중심의 4차 산업혁명 대응계획), 행정안전부(공공 데이터 개방 및 활용을 통한 전자정부 구현) 등 각 부처별 주요 정책과제와 연계된다.

2. 주요 연구 내용 및 목차 구성

연구 배경 및 목적에 따라 연구 목차를 아래와 같이 구성하였으며, 각 장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림 1-1] 연구 목적 및 주요 연구 내용 구성

〈연구목적〉

4차 산업혁명 대응과 동시에 지능정보기술 활용을 위한
데이터 주도의 혁신적 사회 안전망 개편방안을 통해
모두가 행복한 포용적인 사회 안전망을 구축함으로써
‘사람 중심의 4차 산업혁명 시대’ 와
‘다 함께 잘 사는 혁신적 포용국가’ 실현에 기여

제2장 4차 산업혁명과 혁신적 포용 사회안전망 개편 필요성 및 추진방향

(제1절)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새로운 사회적 위험

(제2절) 데이터 주도 혁신적 포용 사회안전망 개편 필요성 및 추진방향

제3장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사회적 위험과 사회안전망 개편 관련 국민 인식조사

(제1절)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사회적 변화와 새로운 사회적 위험에 대한 인식

(제2절)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사회안전망 개편에 대한 인식

제4장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포용과 혁신의 소득보장제도 개편 방안

(제1절) RTI(Real-time Information)
시스템 기반 사회보험 운영 패러다임 개편
및 사각지대 해

(제2절) 정책 실험 데이터 기반
대안적 소득보장제로서 기본소득 제도
도입 가능성 모색

제5장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포용과 혁신의 복지서비스 패러다임 전환 방안

(제1절) 빅데이터와 위험 예측 모형(PRM)
기반 정책 사각지대 발굴 및
예방적 복지서비스 제공

(제2절)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기반
찾아주는 복지서비스 지원체계로의
복지패러다임 전환

제6장 결 론: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혁신적 포용 사회안전망 구축방향

먼저, 2장에서는 ‘4차 산업혁명과 혁신적 포용 사회안전망 개편의 필요성 및 추진 방향’을 주제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사회적 변화 및 완전히 새로운 사회적 위험, 데이터 주도 정책 혁신 필요성, 그리고 최근 정책기획위원회와 각 부처가 합동으로 발표한 문재인 정부의 포용국가 비전과 전략의 주요 내용을 바탕으로 포용과 혁신을 위한 사회안전망 개편 필요성 및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1절에서는 다양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우리 삶의 변화와 새로운 사회적 위험을 살펴보고,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한 데이터 주도의 정책 추진과 혁신적 사회안전망 개편을 통한 포용적 복지와 사람 중심의 4차 산업혁명 구현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2절에서는 포용과 혁신을 위한 중장기 사회정책 전략 추진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정책기획위원회 작업팀²⁾을 중심으로 작성되고 포용국가 전략회의(2018. 9. 6.)를 통해서 발표된 ‘문재인 정부 포용국가 비전과 전략: 국민의 삶을 바꾸는 포용과 혁신의 사회정책’의 주요 내용을 제시한다.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 위기를 거시적 차원에서 고착된 구조적 문제와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노동시장 변화 등의 새로운 위기로 구분하였으며, 미시적 차원에서 최소주의 사회정책의 한계로 인한 시장 영역의 확대와 사적 부담 증가로 인한 가계의 지속 가능성 위기를 제시하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기존의 경제정책 중심의 패러다임을 전환하여 포용과 혁신을 위한 사회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2) 본 연구와 관련하여 2018년 3월부터 ‘포용국가 비전과 전략: 국민의 삶을 바꾸는 포용과 혁신의 사회정책’ 보고서 작성을 위해 참여하였으며, 이를 기초로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한 포용과 혁신의 사회안전망 개편 필요성 및 방향을 제시함.

다음으로 3장에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예상되는 사회경제적 변화와 새로운 사회적 위험, 사회안전망 개편 필요성과 방향에 대한 국민 인식조사 결과를 제시하고자 한다.

조사 대상 모집단은 전국에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 국민이며, 표본규모는 2000명이다. 표집 틀은 2018년 9월 기준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현황이며, 이를 기초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을 통해 표본을 추출하였으며, 95% 신뢰수준에 최대허용 표집오차는 $\pm 2.2\%$ 포인트였다. 조사는 2018년 10월 면접원에 의한 대면면접조사(PI: Personal Interview) 방법으로 실시되었다.

조사 내용³⁾은 4차 산업혁명과 핵심 개념에 대한 인지 여부 및 관심 정도, 4차 산업혁명으로 예상되는 사회적 변화와 위험에 대한 인식,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정책 영역별 중요성 및 우리나라의 정책적 대응 수준에 대한 인식,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기본소득 도입 등 사회안전망 개편 방향과 증세에 대한 인식을 중심으로 구성하였다.

주요 조사 내용에 따라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사회경제적 변화와 새로운 사회적 위험에 대한 인식(1절)과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사회안전망 개편의 필요성 및 방향에 대한 인식(2절)으로 구성하여 조사 결과를 살펴본다.

먼저, 1절에서는 4차 산업혁명과 주요 개념에 대한 인지 여부와 4차 산업혁명과 그로 인한 다양한 변화에 대해 관심 정도, 4차 산업혁명으로 예상되는 사회적 변화 양상별로 자신의 삶과 우리 사회 전반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지(새로운 사회적 위험에 대한 인식)에 대한 조사 결과를 제시한다.

3) 본 연구에서 2018년 10월 수행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사회적 변화와 사회안전망 개편 필요성에 대한 국민 인식조사” 설문지는 부록 참조.

2절에서는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사회정책 영역별 중요성 및 우리나라의 정책 대응 수준에 대한 인식,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해 사회정책 영역⁴⁾ 중 정책 혁신 우선순위, 그리고 복지급여 수혜 경험 및 납세 여부에 따라 5가지 사회안전망 개편 방향(①생애주기별 기본생활보장 ②중산층을 포괄하는 보편적 복지의 확대 ③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증세 ④포용적 사회안전망의 혁신 역량 제고 가능성, ⑤수요자 맞춤형 찾아주는 복지서비스 지원체계)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를 제시한다.

다음으로, 4장에서는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노동시장의 변화와 일자리 및 소득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핵심적인 전략으로서 데이터 주도의 혁신적인 소득보장체계 개편을 통한 포용적 사회안전망 구축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먼저, 1절에서는 전통적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복지국가의 소득보장체계 중 핵심 정책인 사회보험제도가 지닌 사각지대 문제,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노동시장의 변화 대응의 한계를 극복하고 포용성을 제고하기 위한 혁신적 개편 대안으로 실시간 소득 파악 정보시스템(RTI: Real-time Information)을 기반으로 한 데이터 주도의 사회보험 운영체계 개편 방안을 제안한다. 이는 기존의 사회안전망 운영 패러다임의 혁신적 재구조화를 위한 데이터 기반의 소득 파악 정보 연계 및 사각지대 해소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근로장려세제 도입 과정에서 구축된

4) 문재인 정부 포용국가 비전과 전략: 국민의 삶을 바꾸는 포용과 혁신의 사회정책과 관련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관계부처합동, 2018. 9.)하여 6가지 정책 영역을 “①미래 사회에 필요한 인재 양성을 위한 초·중·고·대학 교육과정 혁신 ② 일자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고용서비스 및 평생 교육프로그램 혁신 ③ 소득 감소 및 불평등에 대응하기 위한 기본소득 등 소득보장제도 강화 ④ 가계부담 완화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일상생활 관련 다양한 사회복지서비스 확대 ⑤ 건강수명 연장과 여가시간 확대에 따른 문화여가정책 다양성 확대 ⑥ 기술발전으로 인한 새로운 문제 해결과 일상의 안전과 생명 존중을 위한 예방적 정책 강화”로 구성하였다.

소득 파악 인프라와 일용근로소득 자료를 활용한 사회보험료 지원과 사각지대 해소 노력에도 불구하고, 기존 특수고용형태 근로자와 함께 최근 증가하는 비정형 플랫폼 노동자로 인한 새로운 사각지대가 발생하였다.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RTI 시스템을 기반으로 사회보험의 적용 대상 기준 중에 근로일수와 근로시간 기준 폐지 및 소득 발생 중심의 사회보험료 징수체계와 환급 방식을 통한 사회보험 사각지대의 획기적인 해소 방안을 제시한다.

다음으로 2절에서는 대안적 소득보장제도로서 정책실험 데이터 기반의 기본소득 도입 가능성을 살펴본다. 이는 현행 소득보장체계개편을 넘어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일자리 대체와 소득의 감소로 인해 심화될 소득과 부의 양극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는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는 그동안의 기본소득 도입 필요성에 대한 논의와 더불어, 정책실험을 통한 데이터 기반의 기본소득 도입 가능성 검토를 통해 사회안전망의 포용성 강화를 위한 대안을 모색한다.

5장에서는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데이터 기반 포용과 혁신의 복지서비스 패러다임 전환’이라는 주제로 4차 산업혁명 핵심 기술을 활용하여 수요자인 국민의 삶의 영역에서 다양하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혁신적인 개편대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먼저, 1절에서는 다양한 공공·민간 영역의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잠재적 위험예측 모형(PRM: Predictive Risk Modeling)을 적용하여 정책사각지대 발굴 및 잠재적 위험집단별 복지서비스 수요 예측을 통해 예방적 복지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제공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다음으로, 2절에서는 현행 행복e음을 전면 재구조화하여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전통적인 신청주의 복지 패러

다임을, 수요자에게 적합한 맞춤형 서비스를 찾아 제공하고 수요자의 편의성과 선택권을 확대하는 ‘찾아주는 복지서비스 제공 패러다임’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이러한 복지서비스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다양한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면서 동시에 4차 산업혁명의 핵심적인 기술인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적용한 위험예측 모형 및 추천시스템 등을 적극 활용하여 혁신적으로 사회안전망을 개편하는 대안이다. 빅데이터와 위험예측 모형을 통한 정책 사각지대의 발굴 및 예방적·선제적 복지서비스 제공이 상대적으로 낮은 단계에서 4차 산업혁명 대응과 포용적 복지 구현을 위한 개편 대안이라면, 차세대 정보시스템 기반의 찾아주는 복지서비스 지원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은 우리나라 사회보장체계 전반을 포괄할 수 있는 보다 근본적이고 적극적인 개편 대안이라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6장에서는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혁신적 포용 사회안전망 구축 방향을 제안하고, 소득보장과 복지서비스 패러다임 전환 등 데이터 주도의 개편 대안을 요약 제시한다. 그리고 데이터 주도의 사회안전망 개편 추진을 위해 필수적인 통계 인프라 구축 및 기본소득 등 다양한 혁신적 정책실험을 시행할 수 있는 정부의 법적·제도적 지원 방안 등을 제안하고자 한다.

제3절 연구 방법 및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1. 연구 방법

본 연구는 다양한 선행연구와 최근 발표된 정부의 종합대책 등을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4차 산업혁명 대응과 핵심적 기술 활용을 위한 데이터 주도의 혁신적 사회안전망 개편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4차 산업혁명과 지능정보사회의 사회경제적 변화와 대응 전략에 대한 국내외 선행연구 및 다양한 이슈 페이퍼를 우선 검토하고,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등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하여 최근 추진된 다양한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혁신적 사회안전망 개편 및 수요자 중심의 복지서비스 제공 기반 마련을 위해 데이터 연계 및 위험예측 모형 등을 활용한 개편 대안을 모색한다.

또한 4차 산업혁명과 지능정보사회가 초래할 사회경제적 변화와 새로운 사회적 위험, 이에 대응하기 위한 사회안전망 개편 방향 관련 국민 인식조사(2000명)를 실시하고 조사 결과를 연구에 활용한다. 마지막으로, 사회안전망 개편전략 가운데 대안적 소득보장체계로서 기본소득 도입 가능성 검토를 위한 방안으로 해외의 기본소득 정책실험 등 다양한 사례를 벤치마킹한다.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및 한계

4차 산업혁명의 새로운 기술 발전과 그로 인한 다양한 삶의 변화, 그리고 새로운 위험과 기회 등에 대한 선행연구와 단행본 등은 최근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또한 4차 산업혁명의 핵심적인 기술을 새로운 성장 동

력의 기반으로 활용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은 분야마다 계속되고 있다. 특히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대응 전략의 필요성과 방향 등을 제시한 선행연구 또는 정부의 정책 방향을 제시한 종합계획은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 지난 정부 당시 미래창조과학부, 현 정부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최근 협동 연구가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다.

먼저, 세계경제포럼(2017)의 ‘The Global Risk Report’에서는 4차 산업혁명의 개념과 흐름, 그로 인한 다양한 변화를 주요 이슈로 제기했던 2016년 포럼과 달리, 모든 영역에 커다란 반향을 일으킨 4차 산업혁명이 향후 초래할 다양한 위험 요인(global risk)에 대한 대응 전략들을 모색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위험 요인을 5가지 영역(economic, environmental, geopolitical, societal, technological)으로 구분하고, 생애주기적인 관점(whole-of-life approach)에서 새로운 사회보장 체계의 추진 필요성을 제시하였다(WEF, 2017a; WEF, 2017b).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정부 당시 미래창조과학부가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지능정보사회 중장기 종합대책’을 발표한 바 있으며, 여기서는 지능정보사회의 개념과 변화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서 정책 방향 및 추진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4차 산업혁명의 동인으로 지능정보기술의 개념 및 내용, 지능정보기술로 인한 변화 전망, 비전과 추진전략 제시, 중장기 정책 방향과 추진과제를 도출한 바 있다(미래창조과학부, 2017).

다음으로, 문재인 정부 들어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의 출범과 함께 2017년 11월 발표한 ‘혁신성장을 위한 사람 중심의 4차 산업혁명 대응계획’이 대표적이며 이러한 계획을 바탕으로 2022년까지 분야별로 다양한 지능화 혁신 프로젝트가 추진되고 있다. 여기서는 지능화 혁신 기반의 산업 혁신 영역에서 보건 의료 분야와 관련하여 진료정보 전자교

류 확대, 맞춤형 정밀진단·치료 확산, 인공지능(AI) 기반 신약개발 혁신 등을 통해 건강수명 연장, 미래 신성장 동력으로서 보건산업 확대 등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사회문제 해결 기반 삶의 질 개선과 신성장 촉진 영역에서는 해결하지 못한 사회문제 해결을 목표로 사회 및 공공분야의 지능화 혁신을 통해 국민 삶을 책임지는 국가를 구현하고 혁신성장으로 연결한다는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여기에는 스마트시티, 교통, 환경, 안전 분야와 함께 간병·간호 지원 로봇 도입, 치매노인 등 사회적 약자 일상생활 불편 해소 및 스마트 생활복지 산업 육성, 그리고 복지사각지대 해소가 복지 분야 목표로 반영되어 있다. 한편, 미래사회 변화에 대한 대응 전략으로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고용변화에 선제 대응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회로 활용하고, 사이버 안전망과 인간 중심 윤리체계를 확립하며, 지능화 핵심인재 양성, 고용구조 변화에 대응한 전직교육 강화, 고용보험 확대 등 일자리 안전망 확충 전략이 제시되어 있다(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 2017). 그리고 최근 발표된 4차 산업혁명위원회 주요 성과 및 추진 방향에 따르면, 4차 산업혁명위원회 출범 1년 동안 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되고 변화하기 시작하였다고 평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국민적 공감대를 기초로 4차 산업혁명에 선제적·능동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며 ‘모두가 행복한 사람 중심의 4차 산업혁명’을 지향한다고 제시하고 있다(4차 산업혁명위원회, 2018).

마지막으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중심으로 15개 국책연구기관이 공동으로 수행한 협동 연구인 ‘4차 산업혁명의 경제사회적 충격과 대응 방안: 기술과 사회의 동반 발전을 위한 정책 과제’(장윤종, 김석관 외, 2017)에서는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이를 한국 산업과 사회의 발전 기회로 삼기 위해서 기술과 사회의 양방향 상호작용을 전제로 양자가 동반 발전하기 위한 조건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언급하

고 있다. 이를 전제로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산업적, 사회적 충격을 종합적으로 전망하고 기술, 산업, 사회 부문에서의 대응 방안을 제시하였다. 특히 보건사회 분야에서는 주로 보건의료 분야 중심으로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활용한 건강서비스 등을 제안하고 있다.

본 연구가 이러한 대표적인 선행연구와 차별화되는 부분은 크게 두 가지라고 할 수 있다. 대부분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우리 사회의 다양한 변화, 일자리 대체 및 감소 중심의 노동시장 변화를 중심으로 제시되고 있으나 이러한 변화에 따른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구체적인 사회안전망 대응 전략은 부족한 상황이다. 기존 연구에서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으로 가장 많이 언급되고 있는 고용 관련 안전망 이외에 본격적으로 다루어지지 않은 소득보장 및 복지서비스 중심의 혁신적인 사회안전망 개편 방안을 본 연구에서 집중적으로 제안하고 있다는 것이 첫 번째 차별화되는 점이다.

다음으로, 대부분의 사회안전망 개편 관련 선행연구에서 언급된 제도 중심의 보편성 확대 및 보장수준 강화 방안이 아니라,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과 다양한 공공·민간 영역의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데이터 주도의 혁신적인 사회안전망 개편을 추진하고자 한다.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새로운 사회적 위험인 비정형 플랫폼 노동자의 증가 또는 일자리와 소득 감소에 대응하여 기존 사회안전망이 해결하지 못했던 사각지대 문제를 해소하고 적극적으로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수요자 중심에서 제공함으로써 사회안전망의 포용성을 제고하고, 이와 동시에 소득보장 관련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본소득 도입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사회안전망을 소득보장(4장)과 복지서비스(5장)로 구분하여 데이터 주도의 개편 대안을 제시하였으며, 포용적 사회안전

망은 보편성과 보장수준 등 제도적 기준의 확대와 더불어 엄격한 기준으로 인한 제도적 사각지대 이외에 신청주의 또는 제도 운영상 한계로 인해 상존하는 사각지대 해소를 통한 포용성 제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또한 혁신적인 사회안전망은 행정데이터 또는 빅데이터 기반 혁신적 운영체계의 개편, 정책실험에 의한 데이터 주도의 정책 추진뿐만 아니라, 기본소득 등 대안적 소득보장체계와 복지서비스 패러다임의 전환을 통한 포용성 제고가 혁신 역량 제고에도 기여한다는 의미를 동시에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최근 발간되고 있는 수많은 선행연구나 단행본에서 제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모든 분야를 다루지 못하고 있으며,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사회적 변화에 대한 세부적인 일차리 전망이나 예측되는 변화 결과를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지 못하다는 한계를 안고 있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정부의 종합계획 또는 선행연구에 제시된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새로운 사회적 변화와 위험을 전제로 받아들이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혁신적 포용 사회안전망 개편 대안을 모색하여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연구 제목으로 인해 ‘포용국가 비전과 전략’, ‘사회보장 2040 기본계획’ 등 정부의 종합계획과 관련하여 정책 영역별로 세부 개편 방안을 제시하는 종합적인 연구로 생각될 수 있으나, 연구 범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본 연구는 4차 산업혁명 관련 연구자의 다양한 연구 경험과 정책수립 과정에 참여한 경험을 바탕으로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른 혁신적인 사회안전망 개편 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현재 문제인 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혁신적 포용국가’와 관련된 경제정책 방향(소득주도 성장 및 포용 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과 조응할 수 있는 포용과 혁신의 사회정책 필요성과 방향의 주요 내용은 2장에서 보완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또한 4차 산업혁

명 시대의 새로운 위험에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 영역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 결과 중에 우선순위가 높게 나타난 교육혁신 또는 고용안전망과 평생교육체계 등에 대해서 이번 연구의 4장과 5장에서 주요 연구 내용으로 다루지 못하는 것은 연구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한계라고 할 수 있다. 다만, 2장에서 제시한 혁신적 포용국가 비전과 전략에 대한 소개를 통해서 이러한 정책 영역의 추진 방향에 대해 참고할 수 있도록 제시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다양한 변화와 새로운 위험에 대해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혁신적 포용국가’를 구현하기 위해 거시적 차원의 경제정책과 사회정책의 관계, 사회정책의 구조적인 개편 및 대응 전략 등에 초점을 맞추어 4차 산업혁명위원회와 관계부처 합동으로 후속 연구 또는 종합계획 수립이 필요하다, 이것은 최근 들어 논의되고 있는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기술 발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분야별 대응 전략과는 별도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

제 2 장

4차 산업혁명과 혁신적 포용 사회안전망 개편 필요성 및 추진 방향

- 제1절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새로운 사회적 위험과
데이터 주도의 정책 혁신 필요성
- 제2절 데이터 주도의 혁신적 포용 사회안전망
개편 필요성 및 추진 방향: 혁신적 포용국가

2

4차 산업혁명과 《 혁신적 포용 사회안전망 개편 필요성 및 추진 방향

여기서는 ‘4차 산업혁명과 혁신적 포용 사회안전망 개편 필요성 및 추진 방향’을 주제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사회적 변화 및 완전히 새로운 사회적 위험, 데이터 주도 정책 혁신 필요성, 그리고 최근에 정책기획위원회와 각 부처가 합동으로 발표한 현 정부의 포용국가 비전과 전략의 주요 내용을 바탕으로 포용과 혁신을 위한 사회안전망 개편 필요성 및 방향을 제시한다.

1절에서는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변화와 새로운 사회적 위험을 살펴보고, 4차 산업혁명의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한 데이터 주도의 정책 추진과 사회안전망 개편 필요성을 강조한다.

다음으로, 2절에서는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의 위기를 거시적 차원에서 고착된 구조적 문제와 4차 산업혁명과 같은 새로운 위기로 규정하고, 미시적 차원에서 최소주의 사회정책의 한계로 인한 사적영역의 확대와 가계부담으로 인한 가계의 지속 가능성 위기를 살펴본다.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고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한 방향으로 기존의 경제정책 중심의 패러다임을 전환하여 포용과 혁신의 사회정책 추진을 통해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고, 사람 중심의 4차 산업혁명 구현과 다 함께 잘 사는 혁신적 포용국가를 제안한다.

제1절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새로운 사회적 위험과 데이터 주도의 정책 혁신의 필요성⁵⁾

여기서는 다양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4차 산업혁명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우리 삶의 변화와 새로운 사회적 위험을 살펴보고, 4차 산업혁명의 핵심적인 기술인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등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한 데이터 주도의 정책 추진과 사회안전망 개편을 통한 사람 중심의 4차 산업혁명 구현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1. 4차 산업혁명과 지능정보사회

4차 산업혁명의 개념 정의는 다양하나, 2016년 1월 세계경제포럼에서 제시된 정의에 따르면 4차 산업혁명은 정보통신기술(ICT)의 융합을 기반으로 한 혁명의 시대를 의미한다. 1784년 영국에서 시작된 증기기관과 기계화에 의한 1차 산업혁명, 1879년 전기 이용과 노동력의 분화를 통한 대량생산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2차 산업혁명에 이어, 3차 산업혁명은 1969년 정보기술(IT)과 인터넷 기반 정보화 및 자동생산시스템이 주도한 것이라면, 최근 모든 영역에서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는 4차 산업혁명은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중심으로 급격하게 진행되는 우리 미래의 혁신적인 변화를 의미한다(World Economic Forum, 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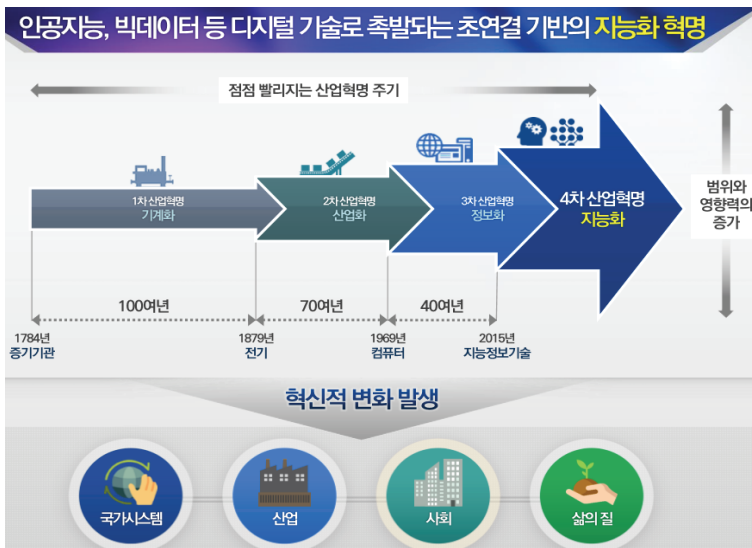
한편 지능정보사회(Intelligent Information Society)란 고도화된 정

5) 최현수, 오미애(2017b). 보건복지 분야 데이터 주도 정책 추진 필요성 및 방향. 보건복지포럼 2017년 8월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최현수, 오미애(2017a). 4차 산업혁명 및 지능정보사회의 새로운 사회적 위험과 복지 패러다임 전환 필요성. 보건복지 ISSUE & FOCUS 제333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중심으로 재구성함.

보통신기술(ICT) 인프라 기반으로 생성·수집·축적된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이 결합한 지능정보기술이 삶의 모든 분야에서 보편적으로 활용됨에 따라 새로운 가치가 창출되고 발전하는 사회를 의미한다(미래창조과학부, 2017).

이러한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은 인공지능, 로봇공학, 사물인터넷(IoT), 무인운송수단(자율주행차량, 무인항공기), 3차원 인쇄(3D 프린팅), 나노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는 기술 혁신이다. 4차 산업혁명은 사회, 경제, 산업 등 우리 삶의 모든 분야에서 다양한 영향을 미쳐 새로운 변화를 일으키고 이를 통해 새로운 기회와 위험을 가져올 수 있다.

[그림 2-1] 4차 산업혁명의 개념과 혁신적 변화



자료: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2017)

한편 정부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우리 사회를 정의한 지능정보사회(Intelligent Information Society)에서도 정보통신기술 인프라(ICBM:

IoT, Cloud, Big data, Mobile)를 통해 생성·수집·축적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인공지능과 같은 새로운 기술이 결합해 데이터와 지식이 기존 생산 요소(노동과 자본)보다 더욱 중요해지고, 다양한 제품·서비스 융합에 따라 이종(異種) 산업 간 경계가 붕괴되며, 지능화된 기계를 이용한 자동화가 지적 노동 영역으로까지 확장되는 등 경제·사회 전반에서 데이터가 주도하는 혁신적 변화가 발생한다(미래창조과학부, 2017).

이처럼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다양한 종류의 데이터를 연계하여 미래를 예측함으로써 새로운 지식과 가치를 창출하며, 기존과 다른 새로운 시장과 상품을 만들고, 보다 나은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과정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와 같은 경향이 바로 OECD에서 언급한 데이터 주도의 혁신(Data-driven Innovation) 또는 데이터 주도의 정책(data-driven policy)의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OECD, 2014). 사회정책 분야에서도 이와 같은 다양한 행정데이터와 민간 영역의 빅데이터 등을 기반으로 데이터 주도의 정책 수립 및 추진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이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2.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사회적 변화와 새로운 사회적 위험

4차 산업혁명과 지능정보사회의 핵심 기술은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로, 대규모로 빠르게 축적되는 데이터에 대한 기계학습(Machine Learning) 기반 자가 진화를 통한 알고리즘 성능의 지속적인 강화가 모든 분야에서 중요한 원천 기술이라고 할 수 있다. 인공지능이란 인간의 지능으로 가능한 인식, 판단, 추론, 문제 해결, 그 결과로서 언어나 행동, 나아가 학습 기능과 같은 인간의 두뇌 작용을 컴퓨터가 수행할 수 있도록 실현하는 기술을 의미한다. 인공지능은 1950년대 후반 등장하였으며 시대적 상황과

여건에 따라 발전과 후퇴를 반복하여 왔다. 1990년대 후반부터 최근까지는 데이터에서 지식을 추출하는 기계학습과 함께 발전해 왔으며, 알파고 이후 이러한 기계학습 기반의 인공지능은 모든 분야에서 최근 핵심기술로 주목받고 있다. 빅데이터는 기존의 데이터베이스 관리 도구로 데이터를 수집, 저장, 관리, 분석할 수 있는 역량을 넘어서는 대용량의 정형·비정형 데이터 집합과 이러한 데이터에서 가치를 추출하고 결과를 분석하는 기술을 의미하며, 빅데이터 구축과 분석의 중요성은 매우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국가 또는 기업 간 기술 격차의 감소로 인하여 경쟁이 치열한 환경 속에서 빅데이터의 활용은 데이터로부터 얼마나 많은 새로운 부가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될 것이다.

이와 같은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하여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변화는 보건복지 분야를 포함한 사회안전망과 관련하여 매우 다양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데이터 주도 정책과 관련하여 최근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는 사회적 변화는 미래 일자리의 변화와 이로 인한 소득 감소와 관련하여 기존 소득보장제도의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는 기본소득 도입 관련 논의의 확산이다. 그 밖에 보건복지 분야에서 대표적인 전략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보건의료 관련 서비스의 혁신적 변화는 사회적 위험에 대한 대응이 필요한 문제라기보다는 4차 산업혁명의 발전된 기술을 적극 활용하여 다양한 헬스케어 서비스 등을 제공하기 위한 혁신성장 전략이라고 할 수 있으며, 소득보장과 복지서비스 등 사회안전망 관련 영역에서도 이와 같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의 활용을 바탕으로 혁신적 개편을 통하여 우리 사회에서 포용과 혁신의 수준을 높이고 국민의 삶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다양한 정책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

서 나타날 수 있는 사회경제적 변화와 관련된 그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사회적 위험에 대한 대응은 우리 사회를 보다 포용적 복지국가로 만드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복지국가의 사회적 위험과 관련된 기존 연구들은 그 동안 전통적 사회적 위험(old social risk)과 새로운 사회적 위험(new social risk)으로 구분하였으며, 각 국가마다 이러한 위험 요인에 대응하기 위해 복지정책을 발전시켜 왔다고 할 수 있다. 복지국가의 황금기와 시대를 함께하고 있는 20세기의 전통적 사회적 위험은 실업, 노령, 질병, 산업재해 등으로 인한 소득 중단과 빈곤, 예외적인 지출 부담 발생에 따른 위험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와 같은 전통적인 사회적 위험에 대한 대응으로서 남성 가장 모델을 기반으로 한 사회보험과 공공부조 등 복지국가의 사회보장제도가 확립되었다고 할 수 있다. 전통적 사회적 위험에 대비되며 2000년 전후 강조된 새로운 사회적 위험은 주로 저출산·고령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 노동시장의 구조적 변화와 불안정, 1인 가구 증가로 대표되는 가족구조 변화와 더불어 노동력 부족과 잠재성장률 감소, 양육·돌봄 부담 증가에 따른 일·가족 양립의 어려움, 장기 실업과 근로빈곤층, 청년실업, 주거비 부담 등의 다차원적 빈곤과 사회적 배제 등을 의미하며 이와 관련된 새로운 사회문제에 대한 정책적 대응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그러나 전통적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설계된 사회보험과 공공부조 중심의 소득보장체계만으로는 이러한 새로운 위험에 대응함에 있어 한계가 나타났다. 이에 따라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와 지속 가능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노력(사회보험료 지원 등), 근로 빈곤층을 지원하기 위한 공공부조 개편 등을 통해 대응 방안을 모색하였으며, 새로운 사회적 위험에 대응할 수 있도록 삶의 다양한 영역에서 사회서비스 확대, 인적자본 향상과 사회참여 기회 확대 등이 추진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2015년 전후 급격하게 진행된 4차 산업혁명의 지능 정보기술 확산은 사회적 가치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전문성과 함께 융합·협업·유연성·창의성·다양성이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으며, 성장·효율 등 경제적 지속 가능성 중심에서 인권·형평·분배 등 사람 중심 가치로, 생산·공급·근로 중심에서 소비·수요·여가 및 사회참여 중심으로, 그리고 물질·자원에 대한 소유 중심에서 빅데이터와 같은 정보·네트워크를 중심으로 공유 경제(우버, 에어비앤비 등)가 중시되는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은 사회적 가치의 변화와 더불어 그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완전히 새로운 사회적 위험, 더 이상 미래의 상상만이 아닌 현실이 되는 사회적 변화와 위험이 나타나고 있다. 평균 수명과 건강 수명의 연장에 따라 근로 가능한 연령이 획기적으로 높아져 은퇴 이후의 새로운 삶이 중요하게 되었으며, 인공지능 확산으로 인하여 일자리는 직무의 반복성, 일상성, 전문성, 자동화 가능성 등에 따라 대체되거나 확대되어 노동시장 영역별 일자리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특히 비정형 일자리 증가와 소득 창출 기회의 양극화, 소득과 부의 양극화 등은 최근 우리 사회의 새로운 위험으로 다가오고 있다. 또한 시간·공간적으로 유연한 근로 형태 증가와 일·가족 양립 환경 변화는 개인의 일과 삶에 위기이면서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나아가 다양한 오픈 소스와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근로자와 1인 기업 증가는 노사 관계의 변화뿐만 아니라 사회보험 등 소득보장체계의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있으며, 소유 경제에서 공유 경제로의 전환에 따른 자본주의 생산·분배·소비체계의 변화는 최근의 플랫폼 기반 카풀제, 돌봄 서비스 연계, 공유숙박 등 해당 시장 영역별로 기존 종사자와 스타트업 기업, 그리고 서비스 이용자인 국민들 사이에서 4차 산업혁명의 기술 발전으로 인한 새로운 갈등과 사회적 위험을 양산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디지털이 지배하는 스마트 세상, 인간과 로봇이 함께 생활하는 사회, 현

실과 가상이 혼재된 가상현실(VR) 사회로의 빠른 전환은 새로운 윤리적 갈등과 폭력의 문제를 가져오고 있다.

요컨대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사회적 가치 변화와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중심의 지능정보기술의 활용으로 인해 나타나는 다양한 사회적 변화는 ‘상상이 현실이 되는 완전히 새로운 사회적 위험’에 대한 정책적 대응의 필요성을 더욱 증가시키고 있다.

우리나라는 IMF 이후 나타난 노동시장의 양극화, 저출산·고령화, 양극돌봄 부담 증가에 따른 일·가족 양립의 어려움 등 새로운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불과 20년이 지난 현재 우리 사회는 기존의 문제들을 해결하지도 못한 채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사회적 가치의 변화와 ‘상상이 현실이 되는 완전히 새로운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사회보장체계의 혁신적 개편과 더불어 데이터를 기반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기 위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우리 사회는 현재의 문제와 미래에 닥쳐올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보편적 사회수당 확대 또는 기본소득 도입 가능성 모색, 사회서비스의 확대 등과 더불어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을 활용한 데이터 주도의 혁신적 사회안전망 개편과 복지 패러다임 전환 등을 통해 사람 중심의 4차 산업혁명과 혁신적 포용국가를 구현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다.

3. 4차 산업혁명과 데이터 주도의 정책 혁신 필요성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와 함께 빠르게 증가하는 데이터 생산과 개방·공유 추세는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주요 국가의 정부와 공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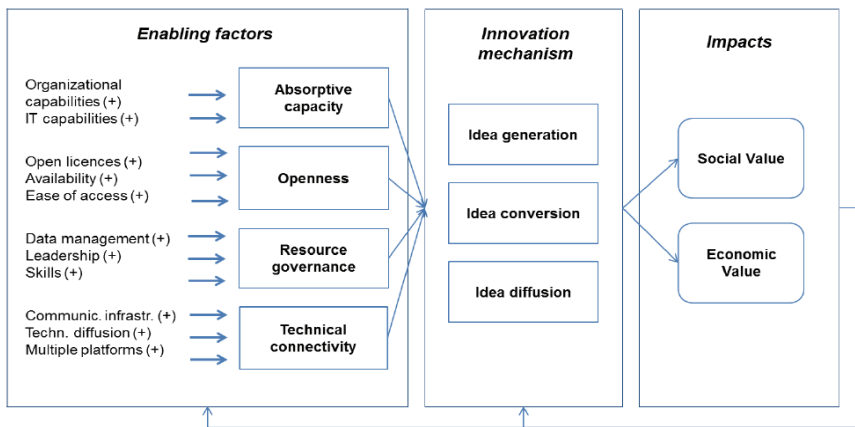
부문도 ‘열린 정부(Open Government)’와 ‘오픈 데이터(Open Data)’를 표방하며 데이터 기반 행정은 물론 데이터 공유와 활용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과 경제 활성화에 사활을 걸고 있다. 영국의 데이터 역량 강화 전략(Strategic for UK data capability, 2013)과 오픈 데이터 로드맵(Open Data Road map, 2015), 미국의 오픈 데이터 정책(Open Data Policy, 2013)과 빅데이터 활용 전략(Big Data: Seizing Opportunities, Preserving Values, 2014) 등은 모두 이러한 노력의 일환이다. 또한 유럽연합(EU)은 ‘Building a European Data Economy 2017’을 선언하고, 데이터를 경제성장과 사회 발전을 위한 필수적 자원으로 간주하여 데이터 접근권과 이전을 강화하며, 법적 책임 명시, 기술표준 제정 등 데이터의 유통을 보장하고 새로운 데이터 비즈니스 모델을 육성하는데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EU는 이 같은 경제 생태계의 변화 양상을 디지털 경제(Digital Economy), 데이터 주도 경제(Data-driven Economy) 등으로 표현했으며 최근 데이터 경제(Data Economy)로 지칭하여 본격적인 데이터 시대가 열리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정용찬, 2017).

이와 같은 데이터 중심 또는 데이터 주도 사회로의 이행은 산업사회에서 정보화 사회로의 이행 같은 패러다임의 변화를 의미하며, 이를 위해서는 국가 전략이 필요하다. 주요 국가에서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이 디지털로 양산되는 데이터 활용에 있음을 인식하고 이를 위한 전략을 마련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다양한 종류의 데이터를 연계 구축하여 미래를 예측함으로써 새로운 지식과 가치를 창출할 수 있으며, 공공정책 영역에서도 이러한 데이터와 새로운 기술을 활용하여 보다 나은 정책이나 서비스를 국민들에게 제공하는 방식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다. 이는 기존의 근거 기반 정책 추진의 수준을 넘어서는 것으로 OECD는 이를 데이터 주도 혁신(Data-driven Innovation) 또는 데이

터 주도 정책(Data-driven Policy)의 개념으로 제시하고 있다(OECD, 2014). 이처럼 4차 산업혁명의 다양한 데이터와 기술을 활용하여 데이터 주도의 혁신적인 사회안전망 개편을 통해 포용국가를 구현하는 것이 중요하다.

데이터 주도의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데이터 기반 혁신 메커니즘의 개념적 구조는 그림과 같다. 4가지 다차원적 요인은 다양한 환경과 맥락에 따라 상이하지만 데이터 주도 혁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데이터 주도 혁신의 영향은 경제적 가치 창출부터 사회적 가치 제고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나타난다. 이러한 영향이 나타나도록 하는 핵심적인 요소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새로운 아이디어 창출, 전환, 확산의 3단계로 구성된 혁신 메커니즘이다. 다양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도출된 새로운 정보와 아이디어를 활용함으로써 혁신적 방향으로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할 수 있으며, 사회 전반에 혁신을 촉진하고 새로운 종류의 가치를 창출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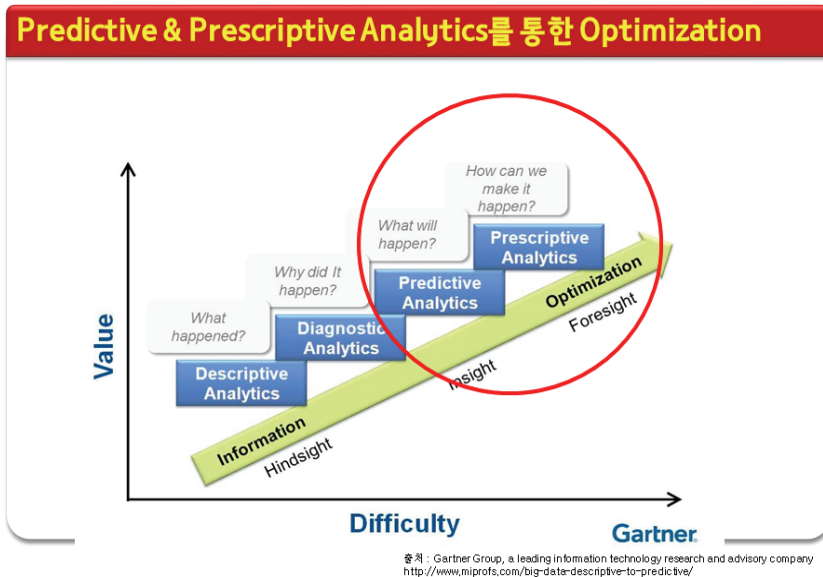
[그림 2-2] 데이터 주도 혁신 메커니즘의 개념적 구조



자료: Thorhildur Jetzek, Michel Avital, and Niels Bjorn-Andersen(2014)

사회정책 분야에서도 이와 같은 데이터 주도 정책 혁신을 통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적 정책 수립 및 서비스 제공에 적극 활용해야 한다. 공공 및 민간 영역의 다양한 빅데이터를 연계 및 구축하고, 이를 활용하여 미래를 예측함으로써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것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요구되는 핵심적 역량이다. 기존의 근거 기반 정책 수립에서의 데이터 분석은 현상에 대한 단순한 통계 정보를 제공하거나 원인을 진단하는 것이었다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데이터 주도 정책 혁신은 미래 예측을 통해서 그동안 해결하지 못한 사회문제 또는 새로운 사회적 위험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한 최적화(optimization)된 해법을 도출하여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림 2-3] 데이터 주도 정책 추진을 위한 데이터 분석의 최적화 발전 단계



자료: 최현수, 오미애(2017a)

보건복지 분야를 포함한 사회정책 영역에서 구축되고 있는 다양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현재 운영 중인 행복e음을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새로이 구축하고, 인공지능과 기계학습 등 다양한 방법을 적용한 미래 예측을 통해 시간, 공간, 인간에 대한 최적화된 사회문제 해결 방안을 제시하여 이를 새로운 정책으로 추진하거나 수요자 입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국민들에게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이 본 연구에서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는 데이터 주도의 정책 혁신 또는 혁신적 사회안전망 개편의 핵심이다. 이를 통해 우리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긍정적 변화와 새로운 가치를 창출함으로써 ‘사람 중심의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혁신적 포용국가’를 구현할 수 있을 것이다.

제2절 데이터 주도의 혁신적 포용 사회안전망 개편 필요성 및 추진 방향: 혁신적 포용국가⁶⁾

여기서는 2018년 9월 포용국가 전략회의를 통하여 발표된 ‘문재인 정부의 포용국가 비전과 전략: 국민의 삶을 바꾸는 포용과 혁신의 사회정책’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보고서를 통하여 현 정부의 국가비전으로 제시하고 있는 ‘혁신적 포용국가’는 그동안 성장과 분배 전략을 중심으로 논의되어 왔던 구조를 최근 국제기구 등에서 강조하고 있는 포용과 혁신의 개념으로 전환하여 사회정책을 매개로 선순환 구조로 연계

6) 연구책임자가 포용국가 추진 실무위원회 위원으로, 2018년 3월부터 보고서 작성에 참여한 정책기획위원회·관계부처 합동(2018. 9. 6.). 문재인 정부의 포용국가 비전과 전략: 국민의 삶을 바꾸는 포용과 혁신의 사회정책의 내용을 중심으로 재구성함.

시키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포용국가 전략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혁신적 포용국가’에 대해서 “국민이면 누구나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고, 함께 공존하는 포용국가(2018. 9.)”라고 언급하였으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발언에서는 “다 함께 잘 사는 혁신적 포용국가를 지향하는 것이 현 정부의 국가비전(2018. 11.)”이라고 천명하였다.⁷⁾ 이는 본 연구에서 제안하고 있는 데이터 주도 혁신적 포용 사회안전망 개편 필요성과 추진 방향을 거시적 차원에서 보여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소득보장 및 사회서비스 영역과 관련하여 제안한 데이터 주도 혁신적 개편 방안은 ‘사람 중심의 4차 산업혁명 시대’와 ‘혁신적 포용국가’를 구현하기 위해 사회보장정책 영역에서 추진이 필요한 구체적인 실천과제라고 할 수 있다.

1.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 위기와 원인

가. 거시적 차원의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른 지속 가능성 위기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 위기와 원인은 크게 거시적 차원에서의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른 지속 가능성의 위기와 미시적 차원에서의 가계의 지속 가능성 위기로 구분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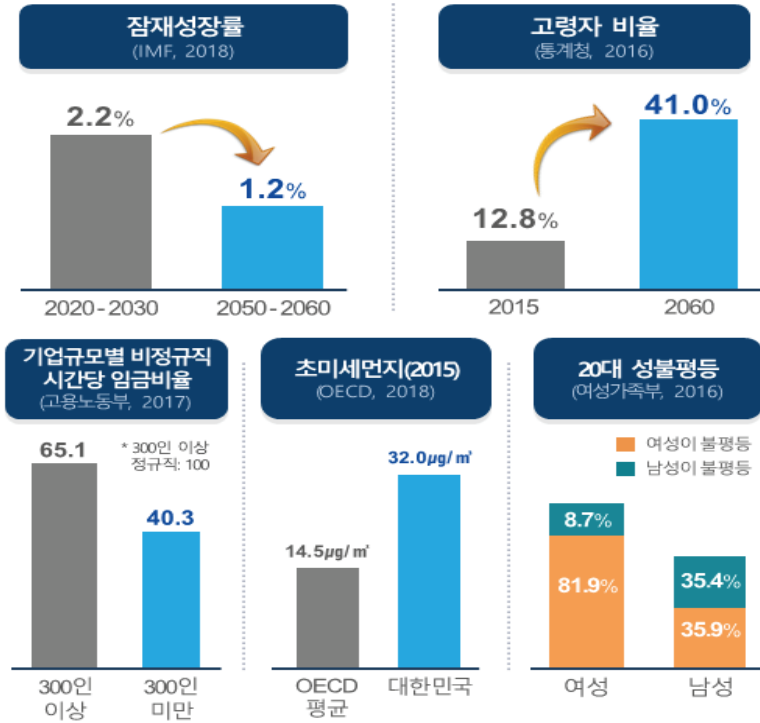
먼저, 우리 사회는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 ‘고착화된 위기’와 더불어 4차 산업혁명 등으로 인한 미래의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른 ‘새로운 도전’에 동시에 직면하고 있다. 우리 사회에 고착화된 위기는 성장률의 감소와 저성장 고착화로 인한 지속 가능성의 위기와 재원조달 능력의 하락, 저출

7) 포용국가 비전과 전략과 관련된 포용국가 전략회의 모두 발언과 보고서 발표 이후 APEC 정상회의 연설, 국회 시정연설 등에서 언급된 대통령의 발언 내용은 청와대 홈페이지(<http://www.president.go.kr>)에 공개된 내용을 참조함.

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빠른 고령화의 진행에 따른 내수 위축과 노인 의료비 등 복지비용 증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로 인한 양극화와 격차의 심화, 그리고 우리 사회 전반의 성차별적 관행 등을 생각할 수 있다.

한편으로는 우리 사회가 그동안 전혀 경험하지 못하였거나, 크게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새로운 문제들의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이처럼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새로운 도전 중 하나가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변화와 일자리 감소 및 대체 등 노동시장 변화에 따른 새로운 사회적 위험과 고용불안의 확산이다. 이는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우리 삶의 긍정적인 변화와 더불어 일자리 변화 및 기술 혁신으로 인한 소외 현상과 배제의 심화가 가져올 수 있는 새로운 위기이다. 4차 산업혁명과 공유경제의 확산에 따른 비정형 노동 증가 및 소득과 부의 불평등 확대 가능성에 대비한 사회안전망 개편과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이유이다. 독일 아르바이텐(Arbeiten) 4.0의 경우,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기술 진보에 따른 노동의 미래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위해 노사 대표 및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기구를 구성하여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속 가능한 목표를 개발하기도 하였다.

[그림 2-4] 우리 사회의 고착화된 위기와 새로운 도전



자료: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관계부처 합동(2018)에서 재인용

최근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또 다른 새로운 도전 중 하나는 미세먼지 등 환경 이슈와 이에 대한 국민적인 민감도의 증가이다. OECD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초미세먼지는 OECD 평균의 2배를 상회하며, 의료비용, 노동생산성, 농업생산량 등을 고려할 때 2060년의 대기 오염으로 인해 예상되는 경제적 손실은 OECD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OECD, 2018).

이어서, 최근 우리 사회에 새로운 도전으로 다가오고 있는 위기는 친밀성과 돌봄의 위기라고 할 수 있으며, 이는 최근 성 평등적 사회질서로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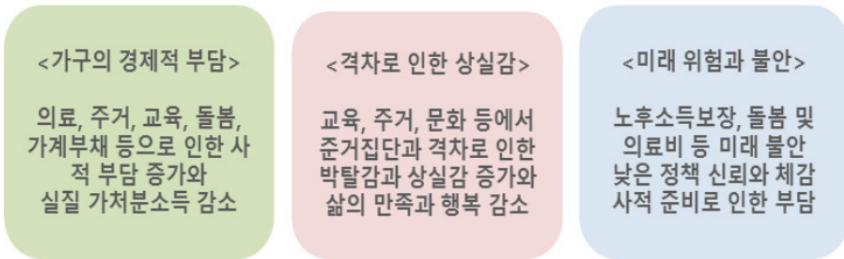
재편에 대한 요구로 강력하게 나타나고 있다. ‘남성 생계 부양자, 여성 돌봄 제공자’라는 전통적 성 역할 분업과 젠더 위계는 균열하고 있지만, 성평등이 정착하지 못한 우리 사회에서는 친밀한 관계와 돌봄의 위기로 나타나고 있다. 1인 가구 증가로 인한 다양한 사회문제와 더불어 청년층을 중심으로 심화되고 있는 성 평등 인식 차이에 따른 갈등은 심각하며 결혼 등 가족 구성에 대한 인식이 크게 변화되고 있다. 20대의 성별 불평등에 대한 인식조사(최유진 외, 2016)에 따르면, 여성의 경우 우리 사회에서 여성이 불평등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비율이 81.9%로 매우 높고 남성들의 경우에도 남성이 불평등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비율이 35.4%로 여성이 불평등하다고 인식하는 비율(35.9%)과 거의 유사한 수준에 이를 정도로 최근 높아지면서 청년층 남성과 여성 사이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인식은 청년층의 결혼 회피 심화로 나타나고 있는데, 결혼을 해야 한다는 미혼자의 비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며 특히 여성 중 반드시 결혼을 해야 한다는 인구 비율은 31.0%로 남성 42.9%보다 낮다. 미래가 불투명한 현실 속에 성별에 따라 고착화된 의무와 책임의 제도로써 가족에 대한 부담이 결혼을 회피하게 하는 주된 이유(남성 중 41.4%가 경제적 이유, 여성의 36.6%가 결혼으로 인한 구속과 제약) 중 하나로 인식되고 있다.

한편 이러한 친밀감의 위기와 더불어 돌봄의 위기는 1인 가구의 증가, 경제적 어려움, 가족 가치관 변화 등으로 인해 가족이 더 이상 안정적인 돌봄을 제공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이로 인해 고독사, 아동학대, 노인학대가 증가하고 있고, 우리 사회는 저임금, 불안정 고용 등 사회화된 돌봄의 가치가 평가 절하되고 있으며, 돌봄 노동자의 높은 이직률과 인력난 문제와 안전하고 좋은 돌봄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는 등 돌봄의 위기가 심화되고 있다.

나. 미시적 차원의 가계의 지속 가능성 위기

최근 들어 한국 사회의 지속 가능성 위기와 관련하여 우리 삶의 일상과 밀접한 미시적 차원에서 가계의 지속 가능성의 위기가 심화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더욱 더 포용적 사회안전망의 강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우리 사회의 가계 부담으로 인한 가계의 지속 가능성 위기는 일상생활의 소비 영역에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사회정책의 공공성 부족으로 인한 가구의 사적 부담 증가와 미래에 대한 불안 증가라고 할 수 있다.

[그림 2-5] 우리 사회에서 가계의 지속 가능성 위기



먼저, 국민이 체감하는 생활 영역에서의 가구의 과도한 사적 부담 증가 및 가계 부채 등으로 인한 실질 가처분소득 감소는 가계의 지속 가능성 위기를 심화시키고 있다. 또한 교육, 주거, 문화 등 생활 영역에서의 준거 집단과의 삶의 질 격차 확대로 인한 상실감과 상대적 박탈감은 삶의 만족도와 행복감을 감소시킬 수 있다. 다음으로, 이러한 경제적 부담 이외에도 심리사회적 불안 심화, 사회계층 이동 가능성의 감소, 노후소득보장, 돌봄 및 의료비 등 미래 위험에 대한 불확실성 증가는 사교육비와 민간 보험료(의료 영역의 실손 보험과 사적연금 등)의 부담 증가와 주택 보유와 관련된 가계부채의 확대 등 불합리한 가계지출 구조의 확대로 연결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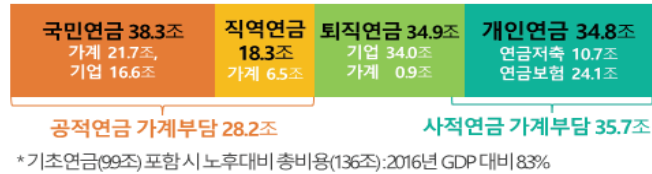
으로써 가계의 지속 가능성 위기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우리 사회의 공공성 부족과 사적 시장의 과잉 현상은 공공의 사회정책이 미흡한 상황에서 삶의 불안을 민간보험, 사교육 지출, 전월세 부담 등 가계의 사적 부담을 통해 대응하는 구조가 역사적으로 고착되었기 때문이다. 국민들은 노후, 건강, 교육, 주거 등 다양한 위험에 대한 대응을 시장을 통해 해결하며, 생활체계 전반에 걸친 사회정책 영역에서 상대적으로 시장의 기능이 과도하게 확장되어 있다. 예를 들어, 실손 보험 가입으로 인한 실질적인 의료비 부담은 크게 증가(전체 가구의 86.9%가 실손 보험 가입, 월평균 보험료는 28만 7000원 수준)하는 반면, 2017년 가구당 평균 건강보험료는 10만 4000원 수준에 불과하다. 민간 연금은 최근 금융회사에서 원리금 보장상품을 중심으로 운용함에 따라 노후의 소득원으로 기능하는 데 한계가 있으며(2012~2016년 평균수익률, 국민연금 5.2%, 퇴직연금 3.1%, 개인연금 3.3%), 사교육비에 대한 가계 부담은 소비지출을 경직시키고 있다. 민간 전월세의 과도한 비중은 임차가구, 주로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성을 해치고, 필수적인 주거비 지출 부담을 높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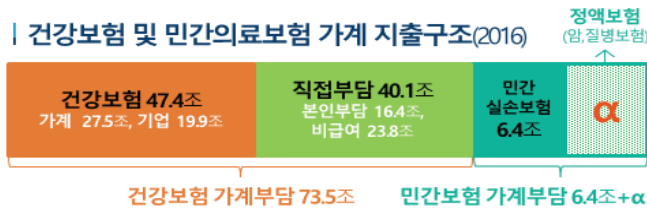
공공 사회정책의 부족으로 인해 필수적인 지출 영역별로 가계가 부담하는 비중이 크며, 이로 인해 가계의 합리적 자원의 배분이 왜곡되고 복지정책 확대를 위한 공공성 강화 과정에서 갈등관계를 형성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

[그림 2-6] 노후, 의료, 교육 등 일상생활의 비용에 대한 가계의 사적 부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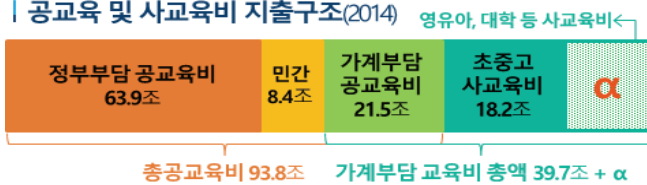
| 공적연금 및 사적연금 가계부담구조(2016)



| 건강보험 및 민간의료보험 가계 지출구조(2016)



| 공교육 및 사교육비 지출구조(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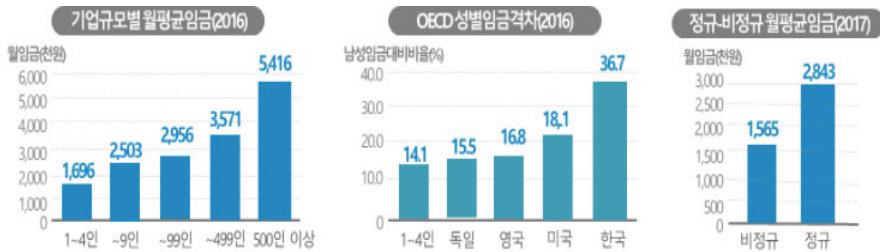
자료: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관계부처 합동(2018)에서 재인용

요컨대 사회정책 공공성 부족은 국가복지 책임에 대한 낮은 신뢰 수준과 정책 체감, 복지 혜택에 대한 긍정적 경험 부족, 삶의 만족과 행복 저하로 나타나고, 이것은 중산층 조세 저항으로 인한 사회정책 확대를 위한 증세 관련 사회적 합의에 제약조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는 3장에서 사회안전망 개편 방향과 증세 필요성에 대한 인식조사 및 선행연구(최현수 외, 2015) 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최근 기초연금, 보육료 지원, 국가장학금 등 복지 수급 경험에 있는 납세가구의 경우 복지 확대를 위한 증세에 동의하는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다. 지속 가능성 위기의 원인

우리 사회의 불평등은 여러 가지 환경 변화와 이에 대응한 선택의 결과로, 세계화, 기술변화, 탈산업화, 외환위기, 저출산·고령화 등의 환경 변화와 대기업 중심의 경제, 정규직 중심 노조, 여성 중심 돌봄, 조직 내 유리천장 등 사회구조에 대응한 정책들이 부족하였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로 인한 우리 사회의 노동시장 불평등은 주로 대기업-중소기업 격차, 정규직-비정규직 격차, 성별 격차 심화로 나타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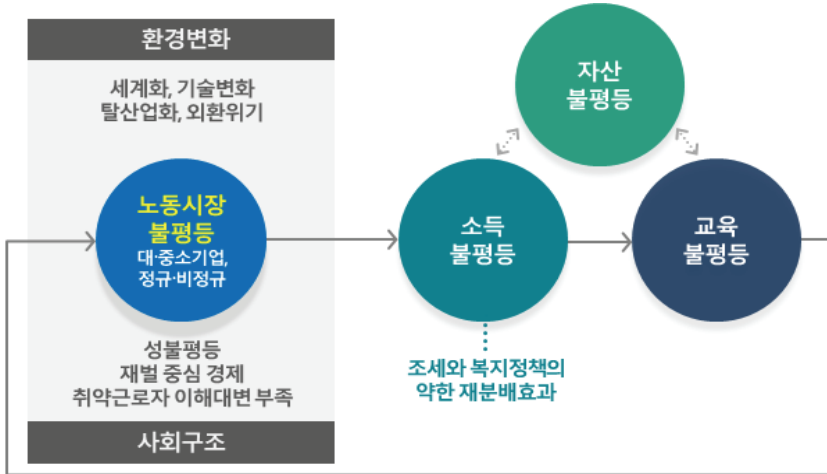
[그림 2-7] 우리 사회의 노동시장 불평등



자료: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관계부처 합동(2018)에서 재인용

이러한 노동시장의 불평등이 우리 사회 불평등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노동시장 불평등의 확대가 소득, 자산, 교육 등의 불평등으로 이어지고 이것이 다시 노동시장에서 격차를 재생산하는 악순환의 고리가 고착되어 왔다. 다양한 불평등 현상이 연관되어 중첩적으로 존재하며 반복적으로 악순환을 재생산하고 있으며,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다가오고 있는 기술의 변화는 우리 사회 일자리 전반에 영향을 미쳐 일자리와 소득, 부의 불평등을 증가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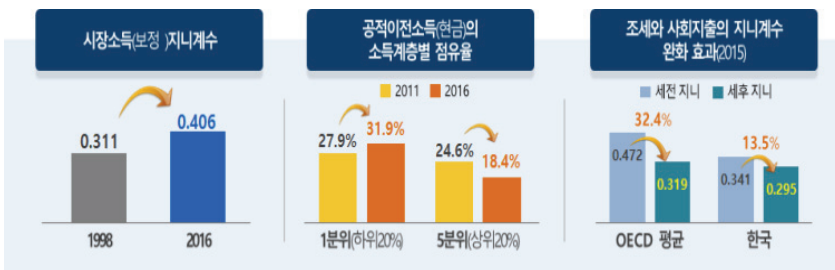
[그림 2-8] 우리 사회 불평등의 원인과 순환 구조



자료: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관계부처 합동(2018)

한편으로는 이처럼 악화되는 시장소득의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사회 정책의 기능이 OECD 국가에 비해 부족하기 때문에, 총량적으로 충분하지 않은 사회복지 지출은 저소득층에게 더 많이 배분되지만 절대적으로 규모가 부족하기 때문에 정부지출에 의한 시장소득 조정 및 소득재분배 효과 등은 OECD 평균보다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그림 2-9] 현재 우리 사회정책의 재분배 효과



자료: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관계부처 합동(2018)에서 재인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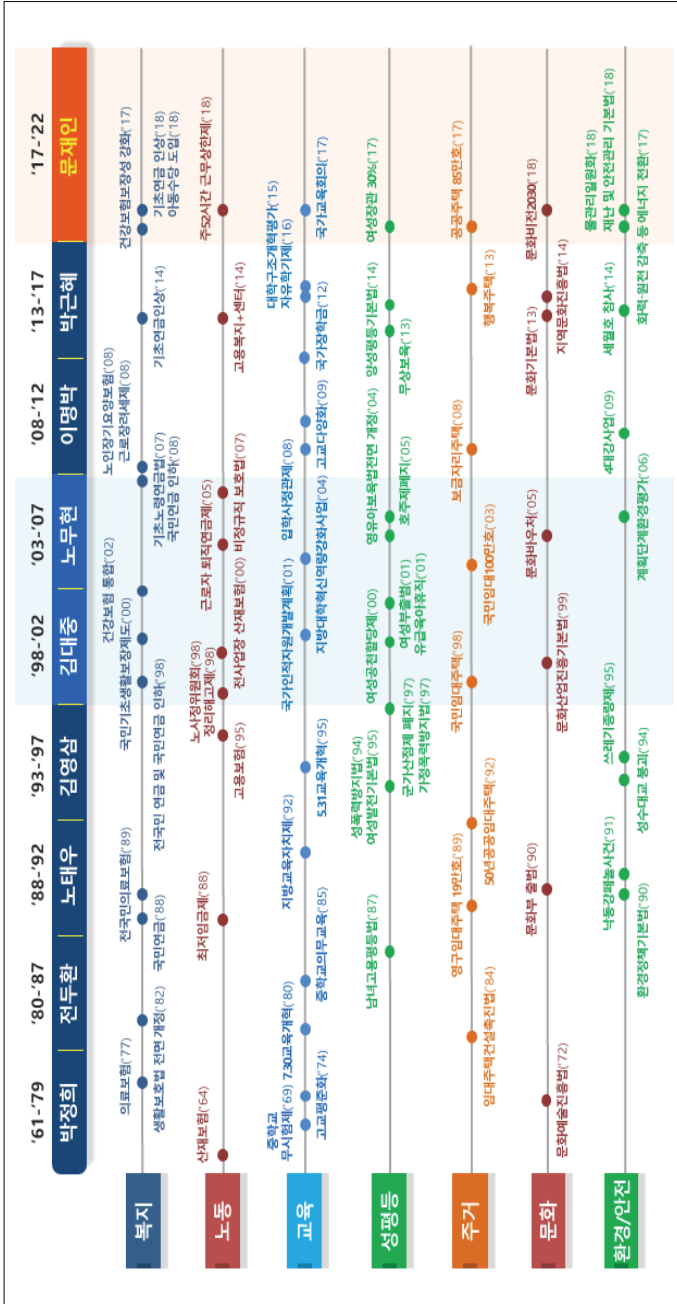
2. 우리나라의 기존 사회정책 패러다임과 한계

가. 사회정책의 성과와 현주소: 복지국가 ‘초기 단계’ 진입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다양한 자속 가능성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으며, 그동안 추진되어 왔던 경제정책 중심의 패러다임 속에서 사회정책은 한계를 나타내고 있다.

우리나라의 역대 정부의 복지 비전과 관련하여 각 정부가 유지해 온 사회정책 패러다임과 정책 영역별로 도입했던 주요 제도를 중심으로 우리나라 사회정책의 발전 과정의 경로를 살펴보면 그림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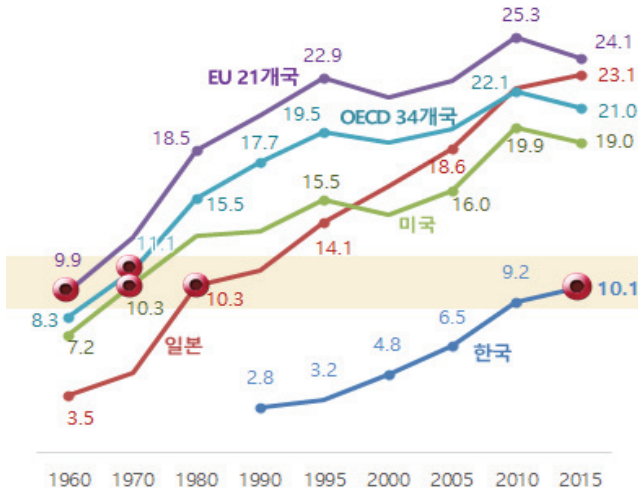
[그림 2-10] 우리나라 사회정책의 역사적 흐름(1961~2018)



자료: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관계부처 합동(2018)

이와 같은 우리나라 사회정책의 역사적 발전 과정에 의한 성과는 우리나라가 2010년 이후 GDP 대비 사회지출의 비율이 10% 수준에 도달함으로써, 여러 가지 제약조건과 한계에도 불구하고 복지국가 초기 단계에 진입했다는 것으로, 이는 유럽 복지국가들이 전후 복지황금기인 1960~70년대에 도달했던 수준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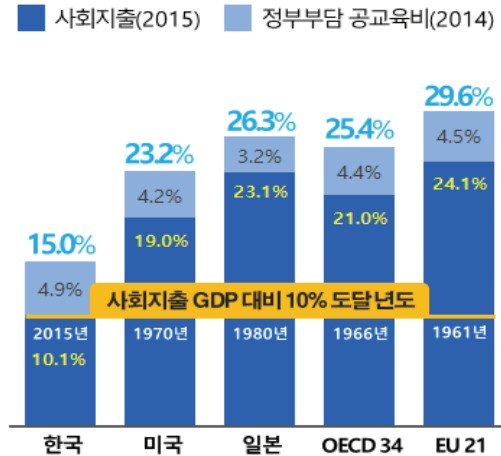
[그림 2-11] GDP 대비 사회지출(교육비 제외) 비중 추이



자료: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관계부처 합동(2018)에서 재인용

한편 우리나라 GDP 대비 사회지출 비중이 계속 늘어나고 있으나, OECD 전체 평균과 유사한 공교육비 지출을 포함해도 사회정책 관련 총 사회지출 비중은 15.0%로 OECD 평균 25.4%에 비해서 여전히 상당히 낮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림 2-12] GDP 대비 사회정책 관련 공적 사회지출(교육비 포함) 비교



자료: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관계부처 합동(2018)에서 재인용

나. 기존 사회정책 패러다임과 한계: 최소주의 사회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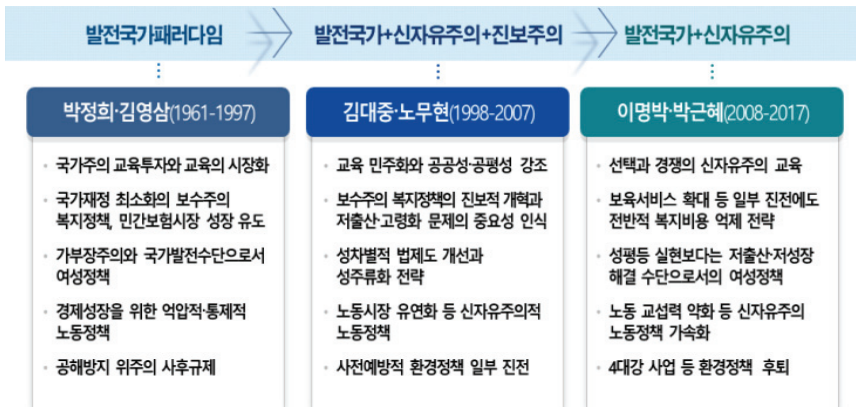
우리나라의 역대 정부에서 추진한 사회정책의 근간은 개발시대에 성장에 필요한 최소한의 사회정책 제공, 국가 재정의 최소화과 시장 영역에 대한 의존, 가계의 사적 부담 확대 등으로 대표될 수 있다. IMF 외환위기 직후인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에서 경제위기를 극복함과 동시에 사회정책을 확대하기 위해 이러한 패러다임 극복을 시도하였으나 문재인 정부의 출범에 이르기까지 ‘경제정책 중심의 최소주의 사회정책’이라는 패러다임에 있어서 근본적인 전환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각 정부별로 사회정책 패러다임의 변화와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박정희 정부~김영삼 정부(1961~1997)에 이르기까지 경제성장 중심의 발전국가 패러다임으로 인해, 사회정책의 역할은 최소한에 머물

렸으며 국가주의적 교육투자와 교육의 시장화가 나타났다. 국가재정의 최소화를 통한 보수주의 복지정책, 민간보험시장 성장 유도 등 시장 영역에 대한 의존 심화, 가부장주의와 국가발전의 수단으로서의 여성정책, 경제성장을 위한 억압적이고 통제적인 노동정책, 환경정책 역시 성장을 위한 공해 방지 위주의 사후적인 규제 중심으로 추진되었다고 할 수 있다.

반면, 김대중 정부~노무현 정부(1998~2007)에 이르는 10년간 외환위기 극복과 더불어 새로운 사회정책 추진을 통해 사회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할 수 있다. 교육의 민주화와 공공성 강조, 보수주의 복지정책의 진보적 개혁과 새로운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정책의 도입 및 확대, 저출산·고령화 문제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성차별적 법 제도 개선 노력과 성 주류화 전략, 노동시장 유연화 등 신자유주의적 노동정책 수용, 사전 예방적 환경정책 일부 진전 등으로 특징을 요약할 수 있다.

[그림 2-13] 과거 정부별 사회정책 패러다임의 흐름과 특징



자료: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관계부처 합동(2018)

다음으로, 이명박 정부~박근혜 정부(2008~2017)에 이르는 지난 10년은 글로벌 경제위기로 시작된 신자유주의 강화로 선택과 경쟁 중심의 신자유주의 교육정책, 보육서비스 확대 등 일부 사회서비스 정책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복지비용 억제 및 효율화 전략, 성 평등 실현보다는 저출산·저성장 해결 수단으로써 여성정책 추진, 노동 교섭력 약화 등 신자유주의적 노동정책 가속화, 4대강 사업 등 환경정책 후퇴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요컨대 그동안 우리나라 사회정책의 패러다임은 ‘최소주의 사회정책’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는 경제 개발시대 성장에 필요했던 최소한의 사회정책 제공, 국가재정의 최소화화 시장 영역에의 의존, 수익자 부담원칙 강조, 그리고 선별적 복지와 근로유인의 저하 방지 등을 중심으로 설계된 경제정책 중심의 패러다임이라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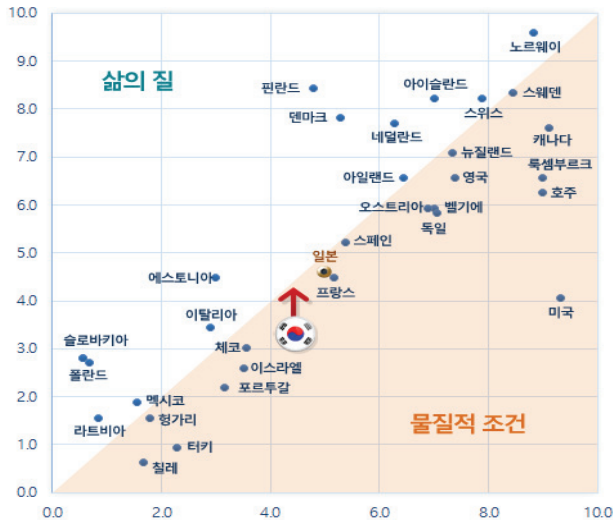
이로 인해 경제수준에 있어 전 세계 상위권에 도달한 우리 사회의 현주소와 한계는, 사회정책 부문 낙후 또는 지체로 인한 경제수준과 사회수준 또는 삶의 질 간의 괴리 현상으로 요약할 수 있다.

1인당 GDP 규모 등 경제수준은 비약적으로 발전하였으나 복지, 젠더, 교육, 문화, 환경 등 국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사회정책은 OECD 평균보다 낮은 하위권으로 낙후되어 있으며, 경제정책과 사회정책의 불균형 심화는 우리 사회 전반의 경제적 발전 수준과 사회적 삶의 질 사이의 심각한 괴리로 다양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수출 주도의 대기업 중심 성장을 통한 낙수효과가 약화된 1990년대 이후에도 여전히 사회안전망이 부족해 중산층이 민간 영역을 통해 사적인 안전망을 구축하는 현상이 가속화됨에 따라 다양한 정책에도 불구하고 가계의 부담은 증가하고 복지에 대한 체감 정도는 지체되고 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에서 사회정책의 중요

성을 인식하였으며, 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 보육서비스 확대, 성 평등정책 등에서 일부의 성과가 있었으나 개발주의 시대를 거치며 관료와 사회지도층 등 우리 사회에 깊이 각인된 경제정책 중심의 ‘최소주의 사회정책’ 패러다임은 근본적으로 전환되지 않았다. 특히 노동시장 및 성별 격차 해소, 경제수준에 부합한 공공 사회복지정책의 확대는 지체되었다. 이로 인하여 일부 지표를 제외한 대부분의 사회정책 관련 지표가 OECD 중하위권에 위치하며, 경제규모 등 물질적 조건에 비해 삶의 질 수준이 상당히 지체된 상황으로, 경제정책과 사회정책의 불균형을 개선하기 위해서 사회정책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전환하기 위한 사회정책 부문의 국가비전과 전략 수립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림 2-14] 최소주의 사회정책의 현주소: 경제수준과 사회수준의 괴리



자료: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관계부처 합동(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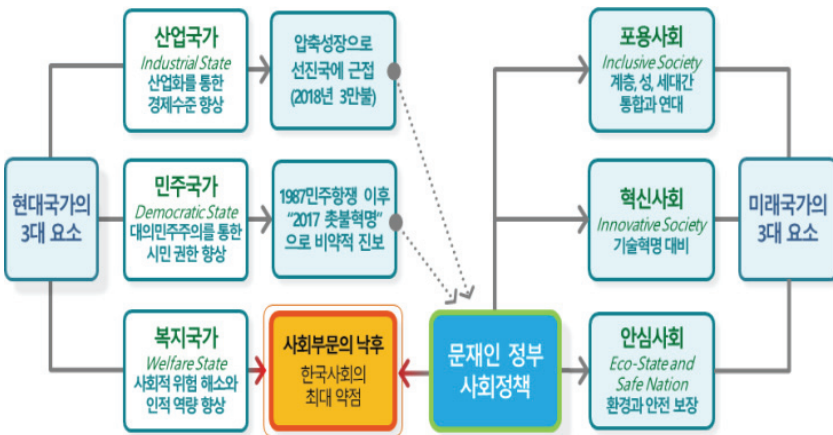
3. 사회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비전: 혁신적 포용국가

가. 문재인 정부 사회정책의 과제

문재인 정부가 당면한 사회정책의 역사적 사명과 과제는 지체된 복지국가 완성과 4차 산업혁명으로 변화되는 미래 사회에 대비하여 혁신적 포용국가를 추진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산업화와 민주화에 있어서 성공한 대표적인 국가이나 사회정책의 낙후로 현대국가의 모습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상황이다. 현대국가의 3요소라고 할 수 있는 산업국가(경제 영역), 민주국가(정치 영역), 복지국가(사회 영역) 중에서 사회정책 분야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경제적 발전에 비해 낙후된 삶의 질 수준으로 인해 우리 사회의 가장 큰 약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림 2-15] 문재인 정부 사회정책의 시대적 사명과 의미



자료: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관계부처 합동(2018)

압축 성장으로 인한 산업화와 1987년 민주항쟁 이후 30년 만에 나타난 2017년 촛불혁명으로 민주화의 진전을 이루었으나, 일정 기간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은 지체되어 왔다. 복지국가를 완성하고 미래 사회의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기술 발전과 새로운 사회적 위험에 대비하여 계층, 성별, 세대 간 통합과 사회 전반의 혁신을 제고하기 위한 사회정책을 추진함으로써 미래 국가의 3가지 축인 포용사회, 혁신사회, 안심사회를 구축하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역사적인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혁신적 포용국가’라는 국가비전을 설정하고 이러한 방향에서 사회안전망 개편 등 구체적 사회정책들을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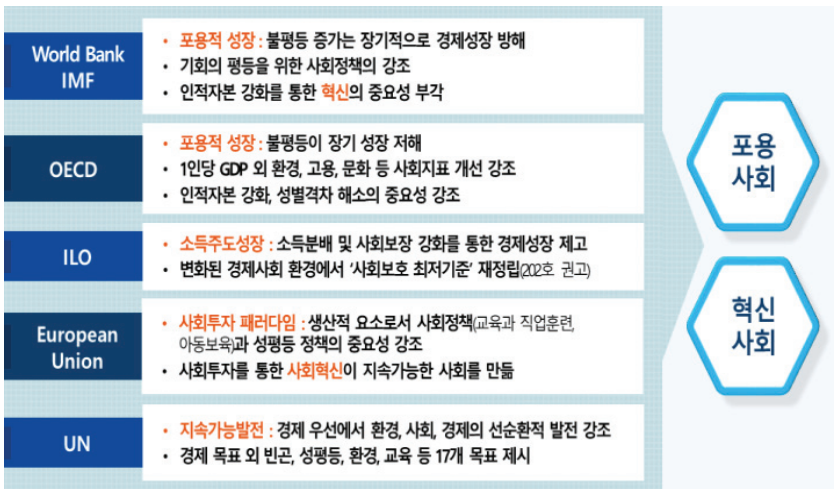
이러한 혁신적 포용국가의 핵심적 개념은 포용과 혁신이며, 이와 관련된 사회정책의 동향과 관련하여 국제기구에서도 포용과 혁신을 최근 강조하고 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신자유주의 성장전략 재검토와 함께 사회정책의 중요성을 재조명하고 있으며, 사회정책을 통한 ‘포용성’의 제고와 사회 전반의 ‘혁신 능력’ 강화가 사회발전 전략의 핵심으로 부상하고 있다.

각 국제기구는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포용과 혁신을 위한 성장 및 사회정책 전략 추진을 위하여 주요 개념 및 특징을 제시하고 정책적 강조점을 제안하고 있다. 세계은행(World Bank)과 IMF는 불평등 증가는 장기적으로 경제성장을 불가능하게 하기 때문에 ‘포용적 성장’이 필요하며, 기회의 평등을 위한 사회정책을 강조하고 동시에 인적자본의 강화를 통한 혁신의 중요성 강조하고 있다. 이와 함께 OECD 역시 ‘포용적 성장’을 강조하며, 불평등이 장기 성장을 저해한다는 인식하에 1인당 GDP 이외에 환경, 고용, 문화 등 사회정책 관련 삶의 질 지표(BLI: Better Life Index)를 통해 인적자본 강화, 성별 격차 해소 등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국제노동기구(ILO)는 최근 우리나라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소득주도

성장과 관련하여 ‘임금주도 성장’을 강조하고 있으며, 노동시장에서의 임금 및 소득분배, 사회보장 강화를 통한 경제성장을 강조하고 변화된 경제사회 환경에서 ‘사회적 보호 최저기준’ 재정립 등을 권고하고 있다. EU는 ‘사회투자 패러다임’을 중시하며, 생산적 요소로서 사회정책(교육, 직업훈련, 아동보육)과 성 평등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사회투자를 통한 사회 혁신이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한편 유엔(UN)은 SDGs(지속가능 발전)을 통해 경제 영역 우선에서 전환하여 환경, 사회, 경제의 선순환적 발전을 강조한다. 경제적인 목표 이외에 빈곤, 성 평등, 환경, 교육 등 17개 영역별로 목표를 제시하고 이에 대한 개선을 위한 노력을 강조하고 있다.

[그림 2-16] 포용과 혁신을 위한 국제기구의 정책 동향



자료: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관계부처 합동(2018)

나. 혁신적 포용국가 사회정책 비전과 전략

2018년 9월 포용국가 전략회의를 통해 발표된 ‘문재인 정부 포용국가 비전과 전략: 국민의 삶을 바꾸는 포용과 혁신의 사회정책’에서는 현 정부의 국가비전으로 ‘혁신적 포용국가’를 제시하고 있다. 이는 그동안 성장과 분배 전략 중심으로 논의되어 왔던 구조를 최근 국제기구 등에서 강조하고 있는 포용과 혁신의 개념으로 전환하여 사회정책을 매개로 선순환 구조로 포용과 혁신을 연계시키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포용국가 전략회의의 모두 발언을 통해 ‘혁신적 포용국가’에 대해 “국민이면 누구나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고, 함께 공존하는 포용국가(2018. 9.)”라고 언급하였으며, APEC 정상회의의 발언에서는 보다 명확하게 “다 함께 잘 사는 혁신적 포용국가를 지향하는 것이 현 정부의 국가비전(2018. 11.)”이라고 천명하였다.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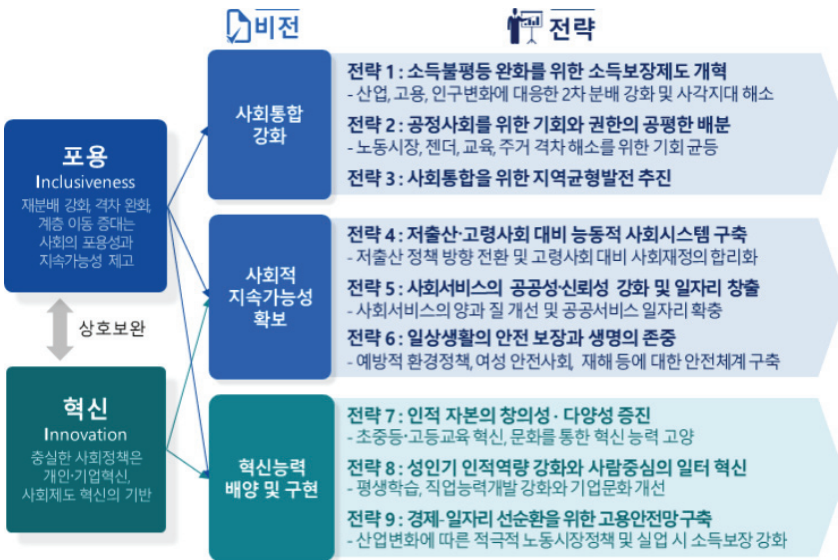
이와 같은 혁신적 포용국가의 사회정책이 추구하고 있는 비전과 전략은 사회정책의 강화를 통해 한국 사회 전반의 포용성을 높이고, 혁신적 사회로 이행하기 위한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혁신성장을 통해 ‘다 함께 잘 사는, 지속 가능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궁극적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여기서 포용(Inclusiveness)의 개념은 재분배 강화, 격차 해소 및 계층 이동 확대, 다양성과 선택에 대한 인정 등을 통해 우리 사회의 포용성과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한다는 것이다. 한편 혁신(Innovation)은 기존의 기술 중심의 혁신이 아닌, 충실한 사회정책을 통해 개인 및 기업 혁신뿐만 아니라, 사회제도 전반의 혁신을 위한 기반으로 작용하며, 포용적 사회정책을 통한 국민의 삶의 안정성은 혁신을 위한 새로운 도전

8) 포용국가 비전과 전략과 관련된 포용국가 전략회의 모두 발언과 보고서 발표 이후 APEC 정상회의 연설, 국회 시정연설 등에서 언급된 대통령의 발언 내용은 청와대 홈페이지(<http://www.president.go.kr>)에 공개된 내용을 참조함.

과 변화에 대한 안전망으로서 작용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요컨대 포용은 혁신 역량을 높이고 기술 혁신으로 인하여 나타날 수 있는 사회적 배제를 보완할 수 있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로, 문재인 정부의 사회정책은 이러한 포용과 혁신을 위한 사회정책을 통해 지속 가능한 사회와 사람 중심의 자유와 다양성이 보장되는 ‘혁신적 포용국가’를 지향한다. 이러한 지향은 포용과 혁신의 사회정책 비전과 전략에 제시되어 있으며, 2019년에 발표될 예정인 ‘포용국가 사회정책 추진계획’을 통해 더욱 구체화될 것이다.

[그림 2-17] 문재인 정부 포용과 혁신의 사회정책 비전과 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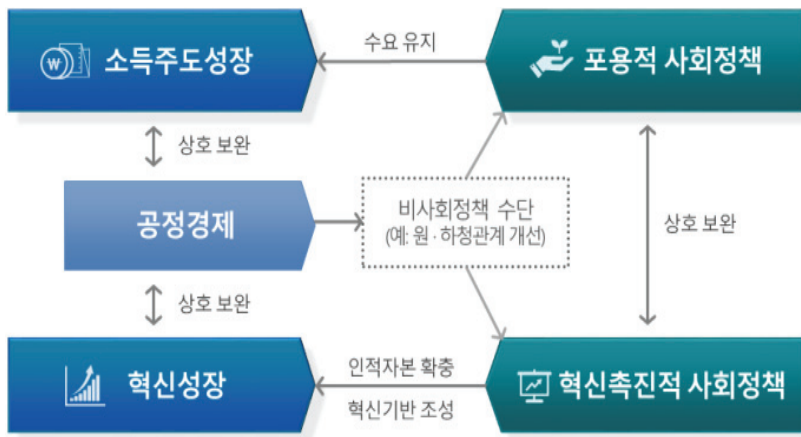
자료: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관계부처 합동(2018)

특히 혁신적 포용국가의 비전과 전략으로서, 포용과 혁신의 사회정책 수립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현 정부의 경제정책과의 관계이다.

공적·개인소득 확대를 통한 소득분배 개선 등 포용적 사회정책은 소득 주도 성장과 포용적 성장의 핵심적인 요소이다. 또한 인적자본 확충 등

사회정책을 통한 기술 중심이 아닌 사람 중심의 혁신 역량 강화와 사회 전반의 혁신 기반 조성은 현 정부 3대 경제정책 기조 중 4차 산업혁명과 연결되는 ‘혁신 성장’의 촉매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한편 공정 경제가 지향하는 ‘비사회정책 수단’은 우리 사회 전반의 포용성과 혁신성을 높이는 중요한 수단으로, 공정 경제가 소득주도 성장 및 포용 성장, 혁신 성장과 상호보완인 관계인 것처럼, 포용과 혁신의 사회정책의 효과를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림 2-18] 문재인 정부 경제패러다임과 사회정책의 관계



자료: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관계부처 합동(2018)

다. 포용적 사회정책과 혁신의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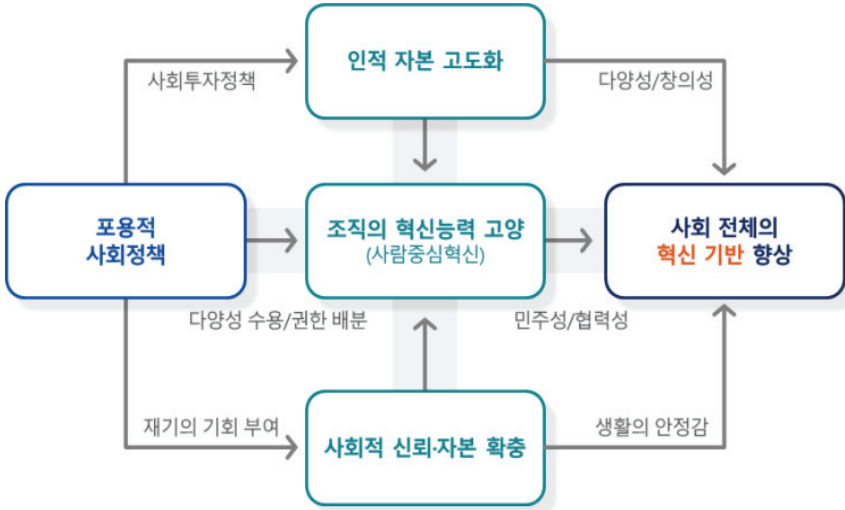
그동안 우리 사회는 사회정책을 성장의 방해물로 인식하여 경제정책에 대한 사회정책의 순기능에 주목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이번 혁신적 포용 국가의 비전과 전략에서는 사회발전에 있어 사회정책의 역할에 대한 재인식을 토대로 사회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사회정책은 소득 분

배와 기회 평등의 제공을 넘어 우리 사회의 경제 및 사회문제 해결을 가능하게 하는 광범위한 기능을 갖고 있다. 사회정책은 내수 촉진을 통해서 수출 주도의 개방경제를 안정화시킨다. 특히 본 연구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한국 사회에서 나타날 새로운 사회경제적 변화와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사회안전망 개편 등 포용적 사회정책 전략을 통해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인적자본 및 사회자본을 향상시켜 사회 전반의 혁신능력 향상에도 기여하면서 동시에 개인에게 삶의 안정성을 통한 혁신적 도전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다양한 스타트업 등을 통한 새로운 부가가치와 일자리를 창출해 혁신 성장에도 기여할 수 있다.

이처럼 혁신적 포용국가 비전과 전략에서는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회정책의 역할을 재조명하면서, 특히 포용적 사회정책이 우리 사회 전반의 혁신능력 향상에 미치는 영향에 새롭게 주목하고 있다. 포용적 사회정책은 소득보장을 통한 사회안전망을 제공하고 사회투자 정책의 핵심인 인적자본 고도화를 통해서 혁신의 기반을 구축하는 데 기여한다. 이때 기술 중심의 노동 배제적 혁신이 아닌, 사람 중심의 혁신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조직 내 의사결정이 독점되지 않고 공유되어야 하며, 일터 혁신이 이루어져야 한다.

포용적인 사회정책과 의사결정권 참여 및 공유가 전제되지 않을 경우 기술 혁신은 인간의 역량과 기술을 보완하는 것이 아니라 대체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따라서 이러한 민주적인 의사결정 참여는 포용적 사회정책과 함께 사람 중심의 혁신 기반을 구축하게 만들며, 이는 다시 사람 중심의 성장(혁신성장, 포용성장, 소득주도 성장)과 일자리의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요컨대 사람 중심 혁신은 포용적 사회정책을 통해 달성되는 혁신 친화적 사회를 기반으로 개인, 조직, 사회 3가지 차원에서 모두 작동되어야 한다.

[그림 2-19] 포용적 사회정책이 사회의 혁신 능력 향상에 미치는 경로



자료: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관계부처 합동(2018)

한편 포용적 사회정책을 통한 우리 삶의 안정성과 자유로운 선택 기회의 제공은 사회적 자본과 신뢰를 강화하고, 이를 통해 우리 사회 구성원의 안정을 통한 혁신의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 사적 부담을 통한 사회적 위험의 개인적 대응처럼 각자도생 형태의 지나친 경쟁으로부터 벗어나 공공성과 포용성을 바탕으로 한 안정성과 여유가 개인의 창조성과 도전정신을 자극하여 혁신의 역량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동안 우리 사회는 현재의 일상생활과 미래에 대한 지나친 불안으로 인해 심리적 안정감이 낮고, 생존을 위한 각자도생으로 인해 다양한 문제 해결을 위한 창조적 활동에 제약이 있었으며, 협력과 신뢰 기반의 집단 지성의 활용도 부족하였다. 그러나 포용적 사회정책이 사회적 자본 강화로 이어지면 협력의 과정을 통해서 공동체 전체의 혁신 역량은 커지고, 사람 중심 혁신이 일터를 역량 중심으로 변화시키고, 이를 통해 사회 전반의 혁신의 기반이 마

련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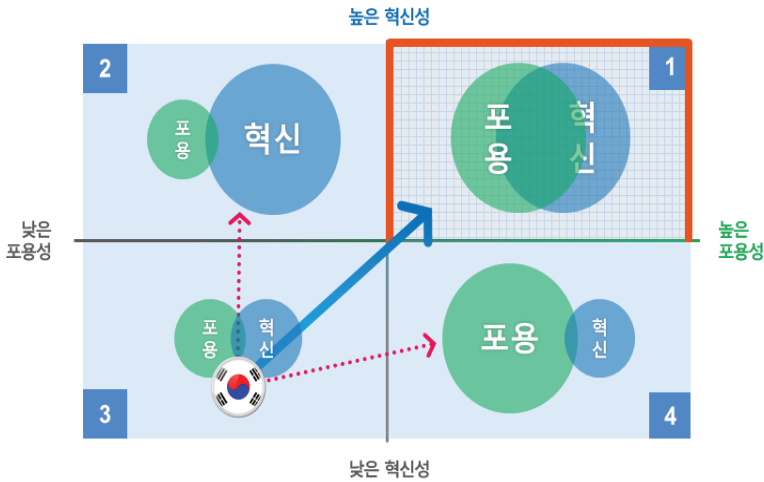
한편으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정책을 혁신하고 평생학습과 문화에 대한 사회투자를 확대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창의성과 다양성을 제고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다양성에 대한 경험을 토대로 상대방을 존중하고 다양성과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을 인정하는 것은, 우리 사회 전반의 진정한 포용성을 제고하여 혁신적 포용국가를 완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한 포용적 사회안전망의 강화는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포용과 혁신의 상호관계 및 수준을 기초로 복지국가 유형을 구분한다면, 한국 사회는 노동시장 격차 심화와 낙후된 사회정책으로 인해 포용과 혁신 역량이 모두 낮은 상태라고 할 수 있다. 향후 포용성은 낮고 혁신 능력은 좋은 사회([그림 2-20]의 2사분면, 미국, 영국 등) 또는 조직 노동자를 중심으로 포용성은 높고 혁신 능력은 낮은 사회(4사분면, 남유럽 등)로는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빠르게 변화되는 미래 사회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포용적 사회안전망과 사람 중심의 혁신 역량 강화와 일터 민주화 등 조직 혁신을 통해서 우리 사회가 추구해야 하는 바람직한 미래 사회 모습은 충실한 사회정책을 통해 높은 수준의 포용성을 가지는 동시에 높은 수준의 사회 혁신 능력을 갖춘 “혁신적 포용 국가”이다.

요컨대 혁신적 포용국가에서는 ‘경제정책 우선주의 & 최소주의 사회 정책’으로 표현될 수 있는 과거 우리나라의 국정기조 및 경제 & 사회정책, 성장 & 분배 패러다임의 근본적인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사회정책을 경제정책과 균형적으로 추진하는 포용과 혁신의 사회정책 패러다임으로 전환을 추진하고자 한다. 특히 이와 같은 혁신적 포용국가의 사회정책 패러다임하에서 포용과 혁신의 상호작용을 바탕

으로 한 사회안전망은 우리 사회 전반에서 포용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혁신 역량 제고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이 추진되고, 이를 통해 우리 사회가 높은 수준의 포용성과 혁신을 동시에 지닌 ‘혁신적 포용국가’로 나아가는 것을 지향한다고 할 수 있다.

[그림 2-20] 혁신적 포용국가를 위한 사회정책의 추진 방향



자료: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관계부처 합동(2018)

제 3 장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사회적 위험과 사회안전망 개편 관련 국민 인식조사

제1절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사회적 변화와 새로운 사회적
위험에 대한 인식

제2절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사회안전망 개편 필요성과
방향에 대한 인식

3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사회적 위험과 사회안전망 개편 관련 국민 인식조사

여기서는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인지 여부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예상되는 사회경제적 변화와 새로운 사회적 위험, 사회안전망 개편 필요성과 방향에 대한 국민 인식조사 결과를 제시한다.

주요 조사 내용에 따라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사회경제적 변화와 새로운 사회적 위험에 대한 인식(1절)과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사회안전망 개편 방향과 증세에 대한 인식(2절)으로 구분하여 조사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먼저, 1절에서는 4차 산업혁명과 주요 개념에 대한 인지 여부와 4차 산업혁명과 그로 인한 다양한 변화에 대해 관심 정도, 4차 산업혁명으로 예상되는 사회경제적 변화와 새로운 사회적 위험의 영향 정도에 대한 인식을 살펴본다.

다음으로, 2절에서는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정책별 중요성 및 우리나라의 정책적 대응 수준,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해 사회정책 영역 중 정책 혁신 우선순위, 복지급여 수혜 경험 및 납세 여부에 따라 5가지 사회안전망 개편 방향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를 제시한다.

제1절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사회적 변화와 새로운 사회적 위험에 대한 인식

1. 조사 개요

조사 대상 모집단은 전국에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 국민이며, 표본규모는 2000명이다. 표집 틀은 2018년 9월 기준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현황이며, 이를 기초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을 통해 표본을 추출하였으며, 95% 신뢰수준에 최대허용 표집오차는 $\pm 2.2\%$ 포인트였다. 조사는 2018년 10월 면접원에 의한 대면 면접조사(PI: Personal Interview) 방법으로 실시되었고, 조사 완료 응답자 2000명의 일반적 특성(성별, 연령, 학력, 지역, 직종, 가구소득)에 따른 구성비중은 아래 표와 같다.

〈표 3-1〉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사회적 변화와 사회안전망 인식조사 개요

구 분	내 용
모집단	· 전국에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 성인 남녀
표집 틀	· 2018년 9월 기준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자료
표집 방법	· 2018년 9월 주민등록인구현황에 따라 성별, 연령별, 지역별 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표본 크기	· 2000명
표본오차	· 무작위추출을 전제할 경우, 95% 신뢰수준에 최대허용 표집오차는 $\pm 2.2\%$ 포인트
조사 방법	· 면접원에 의한 대면면접조사(PI: Personal Interview)
조사 일시	· 2018년 10월 18일~10월 29일
조사 기관	(주)한국리서치

〈표 3-2〉 국민 인식조사 응답자 특성별 분포

구분	사례 수(명)	비율(%)	구분	사례 수(명)	비율(%)
전체	(2000)	100.0	전체	(2000)	100.0
남자	(992)	49.6	농/임/어업	(52)	2.6
여자	(1008)	50.4	판매/영업/서비스직	(341)	17.0
20~29세	(321)	16.0	생산/기능/노무직	(150)	7.5
30~39세	(347)	17.3	사무/관리/전문직	(830)	41.5
40~49세	(405)	20.3	전업주부	(329)	16.4
50~59세	(403)	20.1	군인/학생	(134)	6.7
60세 이상	(524)	26.2	무직/퇴직/기타	(164)	8.2
서울	(389)	19.4	99만 원 이하	(77)	3.9
인천/경기	(605)	30.2	100만~199만 원	(159)	8.0
대전/충청/세종	(212)	10.6	200만~299만 원	(223)	11.2
광주/전라	(199)	9.9	300만~399만 원	(296)	14.8
대구/경북	(199)	9.9	400만~499만 원	(268)	13.4
부산/울산/경남	(309)	15.4	500만 원 이상	(845)	42.2
강원/제주	(87)	4.3	모름/무응답	(132)	6.6
고졸 이하	(616)	30.8			
대학 이상	(1370)	68.5			
모름/무응답	(14)	0.7			

나. 조사 내용

조사 내용⁹⁾은 4차 산업혁명과 핵심 개념에 대한 인지 여부 및 관심 정도, 4차 산업혁명으로 예상되는 사회적 변화와 위험에 대한 인식,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정책 영역별 중요성 및 우리나라의 정책적 대응 수준에 대한 인식,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기본소득 도입 등 사회안전망 개편 방향과 증세에 대한 인식으로 구성하였다.

9) 본 연구에서 2018년 10월 수행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사회적 변화와 사회안전망 개편 필요성에 대한 국민 인식조사” 설문지는 부록 참조.

[그림 3-1] 4차 산업혁명과 사회안전망 관련 국민 인식조사 주요 내용 구성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사회적 변화와 사회안전망 대응 필요성에 대한 국민 인식조사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인지여부 및 관심정도

4차 산업혁명으로 예상되는 사회적 변화와 위험에 대한 인식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기 위한 사회안전망의 중요성 및 대응 수준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사회안전망 개편 방향 및 증세 인식

먼저, 4차 산업혁명과 주요 개념에 대한 인지 여부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다양한 변화에 대한 관심 정도, 4차 산업혁명으로 예상되는 사회적 변화가 자신의 삶과 우리 사회 전반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지 조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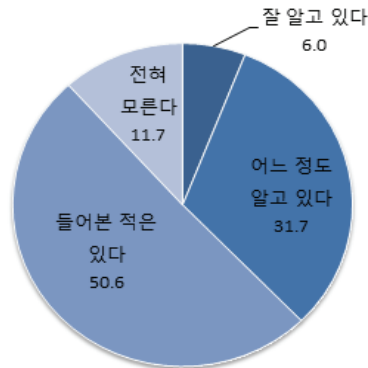
다음으로,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정책 영역별 중요성 및 대응 수준에 대한 인식,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사회정책 영역¹⁰⁾ 중에 정책 혁신 우선순위, 그리고 복지급여 수혜 경험 및 납세 여부에 따라 5가지 사회안전망 개편 방향(①생애주기별 기본생활보장 ②보편적 복지 확대 ③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증세 ④포용적 사회안전망의 혁신 역량 제고 가능성 ⑤수요자 맞춤형 찾아주는 복지서비스 지원체계)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였다.

10) 문재인 정부 포용국가 비전과 전략: 국민의 삶을 바꾸는 포용과 혁신의 사회정책 관련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관계부처합동, 2018. 9.)하여 “①미래사회에 필요한 인재 양성을 위한 초·중·고·대학 교육과정 혁신 ② 일자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고용서비스 및 평생 교육프로그램 혁신 ③ 소득 감소 및 불평등에 대응하기 위한 기본소득 등 소득보장 제도 강화 ④ 가계부담 완화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일상생활 관련 다양한 사회복지서비스 확대 ⑤ 건강수명 연장과 여가시간 확대에 따른 문화여가정책 다양성 확대 ⑥ 기술발전으로 인한 새로운 문제 해결과 일상의 안전과 생명 존중을 위한 예방적 정책 강화” 등 6가지로 구성하였다.

2.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사회적 변화에 대한 인식

먼저,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인지 여부를 살펴보면, 전혀 모른다는 응답이 11.7%에 불과할 정도로 대부분의 국민들이 4차 산업혁명에 대해 인지하고 있다. 그러나 응답자 중 약 50%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용어나 관련된 내용을 단순히 들어 본 적이 있는 정도인 것으로 나타나 향후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다양한 변화, 특히 우리 삶의 영향을 미치는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림 3-2]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인지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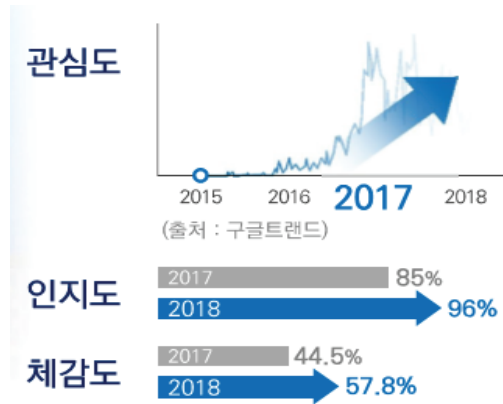


평균 2.32

최근 발표된 4차 산업혁명위원회 주요 성과 및 추진 방향에 따르면, 4차 산업혁명위원회 출범 1년 동안 구글 트렌드 검색 기준으로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관심 정도가 2017년부터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인지도와 체감도 역시 2017년에 85.0%와 44.5%에서 2018년에는 96.0%와 57.8%로 높아졌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를 바탕으로 4차 산업혁명위원회

에서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변화하기 시작하였다고 평가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사람 중심의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구현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림 3-3]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국민의 인식 변화



자료: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2018)

한편 응답자의 특성에 따른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인지 정도 조사 결과를 비교해보면, 남성(2.44)이 여성(2.20)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20~50대 (2.37, 2.40, 2.40, 2.39)는 비슷한 반면 60대의 경우 4점 만점에 2.12 점으로 가장 낮았다. 또한 대학 이상(2.46)이 고졸 이하(2.02)보다 높았으며 성별이나 연령에 비해 학력에 따른 차이가 상대적으로 더 크게 나타났다. 사무직/전문직(2.49)이 생산직 종사자(2.25)나 서비스업 종사자 (2.20)에 비해 높고, 학생(2.50)의 경우 인지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한편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인지도가 높아지는 경향을 보여 주고 있다.

〈표 3-3〉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인지 정도

(단위: %)

구분	사례 수 (명)	평균 (1~4점)	④ 잘 알고 있다	③ 어느 정도 알고 있다	② 들어본 적은 있다	① 전혀 모른다	합계
전체	(2,000)	2.32	6.0	31.7	50.6	11.7	100.0
남자	(992)	2.44	9.5	34.4	46.8	9.3	100.0
여자	(1,008)	2.20	2.5	29.0	54.3	14.2	100.0
20~29세	(321)	2.37	6.2	35.3	47.8	10.7	100.0
30~39세	(347)	2.40	7.9	33.3	49.6	9.2	100.0
40~49세	(405)	2.40	6.5	35.1	50.8	7.6	100.0
50~59세	(403)	2.39	7.1	34.9	47.6	10.4	100.0
60세 이상	(524)	2.12	3.4	23.3	55.1	18.2	100.0
고졸 이하	(616)	2.02	2.7	18.5	57.0	21.7	100.0
대학 이상	(1,370)	2.46	7.5	37.7	47.8	7.0	100.0
농림어업	(52)	2.06	1.9	22.5	55.4	20.1	100.0
판매/영업/서비스	(341)	2.20	3.6	26.5	55.9	14.0	100.0
생산/기능/노무직	(150)	2.25	3.6	30.4	53.3	12.8	100.0
사무/관리/전문직	(830)	2.49	9.3	37.6	45.7	7.4	100.0
전업주부	(329)	2.10	1.0	24.5	57.6	16.9	100.0
군인/학생	(134)	2.50	10.7	38.1	42.1	9.1	100.0
무직/퇴직/기타	(164)	2.17	4.0	25.8	53.0	17.2	100.0
99만 원 이하	(77)	2.09	4.1	26.6	43.1	26.2	100.0
100만~199만 원	(159)	2.06	2.6	21.5	55.0	20.9	100.0
200만~299만 원	(223)	2.24	3.9	29.7	52.9	13.5	100.0
300만~399만 원	(296)	2.24	4.0	29.4	52.9	13.8	100.0
400만~499만 원	(268)	2.33	4.9	30.3	57.2	7.6	100.0
500만 원 이상	(845)	2.45	8.8	35.7	47.3	8.2	100.0
모름/무응답	(132)	2.24	3.4	32.8	48.2	15.6	100.0

다음으로,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핵심적인 개념과 기술로서 인공지능(AI),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 블록체인에 대한 인지 정도와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주목받았던 주요 이슈로서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일자리 대체 및 감소’,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기본소득 도입’에 대한 인식 수준을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먼저 인공지능에 대해 전혀 모른다는 응답이 3.9%에 불과할 정도였다. 우리 사회의 다양한 분야와 일상생활 속에서 인공지능에 대한 정보와 활용이 빠르게 확산됨에 따라 나타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4점 척도를 기준으로 평균 2.81점으로 빅데이터(2.55), 사물인터넷(2.35)에 비해 인지도가 월등히 높았으며, 최근 비트코인을 중심으로 소개되고 있는 블록체인 관련 인지도(2.06)는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4〉 4차 산업혁명 관련 주요 개념과 이슈에 대한 인지 정도

(단위: %)

구분	평균 (1~4점)	④ 잘 알고 있다	③ 어느 정도 알고 있다	② 들어본 적은 있다	① 전혀 모른다	합계
인공지능(AI)	2.81	21.8	41.4	32.9	3.9	100.0
빅데이터	2.55	17.8	33.5	34.7	14.1	100.0
사물인터넷(IoT)	2.35	15.7	27.6	32.3	24.4	100.0
블록체인	2.06	10.5	21.2	31.9	36.4	100.0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일자리 대체·감소	2.47	14.0	31.5	41.7	12.8	100.0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기본소득 도입	1.71	5.5	12.8	28.6	53.1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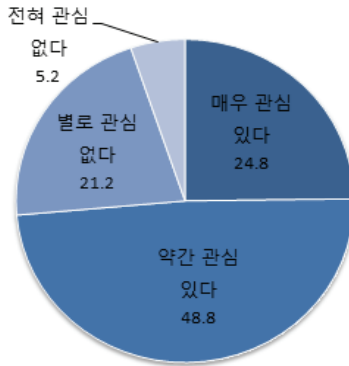
한편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관심과 함께 가장 주목받았던 이슈인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일자리 대체 및 감소’,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기본소득 도입’에 대한 인식 수준은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일자리 대체나 감소에 대한 인식정도는 평균 2.47점으로 빅데이터와 유사한 수준이며 약 13%를 제외한 대부분의 국민들이 들어 보거나 알고 있었다. 반면,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한 대안적 소득보장제도 중에 하나인 기본소득(1.71)은 약 53%가 전혀 들어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우리 사회가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다양한 변화에 대해 접근할 수 있는 많은 정보와 기회가 제공된 반면, 아직까지 4차 산업혁명의 새로운 변화와 위험에 대

응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전략과 이에 대한 교육과 홍보가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4차 산업혁명과 다양한 사회경제적 변화에 대한 관심 정도를 살펴보면, 평균은 2.93점으로 인지 정도(2.32)에 비해 높은 편이며, 대략 4분의 1 정도는 매우 관심을 가진 반면 4분의 1 정도는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나머지 절반 정도는 어느 정도의 관심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4] 4차 산업혁명과 다양한 사회적 변화에 대한 관심 정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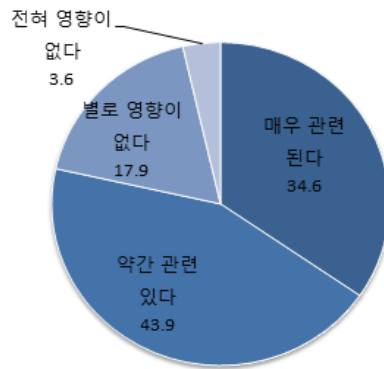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관심 정도는 남성(2.99)이 여성(2.88)에 비해 다소 높았으며, 연령집단별로 비교해 보면 인지도의 경우 60대를 제외한 전 연령대에서 유사한 수준이었으나, 관심 정도는 20~30대(2.85, 2.89)에 비해 활발하게 경제활동에 참가하고 있는 중장년층 40~50대(3.05, 3.01)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는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다양한 변화가 자신의 삶에 미칠 영향이 크다고 생각하고 이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 밖에 학력, 직업, 소득수준에 따라서는 앞서 인지 정도와 유사한 경향을 나타냈다.

3.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새로운 사회적 위험에 대한 인식

4차 산업혁명으로 예상되는 사회적 변화가 자신의 삶과 우리 사회 전반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조사한 결과를 살펴보면, 평균은 3.09점으로 관심도(2.93)에 비해 다소 높았으며, 대략 80%는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머지 약 20%는 영향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3분의 1 정도가 매우 관련성이 높다고 응답한 반면, 전혀 영향이 없다고 생각하는 응답자는 3.6%에 불과할 정도로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변화가 자신에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거나 체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5]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사회적 변화가 자신의 삶에 미치는 영향

(단위: %)



자신의 삶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는지를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남성(3.11)과 여성(3.08)은 거의 유사했으며 연령에 따라 인지도-관심도-체감도 간에 흥미로운 결과가 나타났다. 인지도의 경우 60대를 제외한 20~50대가 전반적으로 유사한 반면, 관심도에 있어서는 40~50

대가 20~30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다. 그러나 자신의 삶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체감은 20대(3.26), 30대(3.18), 40대(3.25)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50대(3.09), 60대(2.82)의 순서로 낮아졌다. 한편, 대학 이상(3.23)이 고졸 이하(2.79)에 비해 높았으며, 사무직/전문직 종사자(3.26)가 생산직 종사자(2.97) 또는 서비스업 종사자(3.03)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소득수준에 따라서는 고소득층(3.2 내외)이 저소득층(2.8 내외)보다 높았으며, 역시 소득수준이 증가할수록 높아지는 경향을 나타냈다.

다음으로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변화와 사회적 위험을 6가지(①긍정적 영향 ②부정적 영향 ③일자리 또는 근로시간 감소 ④소득 감소와 불평등 심화 ⑤소외와 윤리적 갈등 ⑥삶의 질 향상)로 구분하고, 이와 관련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1~10점 척도로 조사한 결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이번 조사는 나 자신에 대한 영향과 우리 사회 전반에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하는 영향으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는데, 먼저 긍정 또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 살펴보면,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높게 나타났으며(자신 ☞ 긍정 5.95 vs. 부정 4.25 / 사회 ☞ 긍정 6.57 vs. 부정 4.49), 자신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의 차이는 부정적 영향에서 거의 나타나지 않았으나 긍정적 영향에서는 자신 보다는 우리 사회에 미칠 영향이 더 큰 것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은 모든 질문에서 전반적으로 유사한 형태로 나타났는데, 우리 사회 전반에 나타날 가능성을 보다 크게 인식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사회적 위험 중 일자리 대체 또는 감소와 소득 감소로 인한 불평등 심화 관련 인식을 살펴보면, 일자리 대체나 감소가 자신(4.75)과 우리 사회(6.49)에 나타날 가능성이 소득 감소 또는 불평등

심화가 자신(4.50)과 우리 사회(6.06)에 나타날 가능성보다 더 높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자리와 소득의 변화에 있어서도 자신보다 우리 사회 전반에 나타날 가능성과 영향을 더 크게 인식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소외와 윤리적 갈등의 발생, 삶의 질 향상 가능성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면, 소외와 윤리적 갈등은 자신(4.54)에게 미칠 영향이 우리 사회(6.22)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으며, 자기 자신과 우리 사회 전반에 나타날 가능성에 대해서 인식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반면, 삶의 질 향상에 대한 기대는 6가지 예상되는 변화 중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삶의 질 향상은 자신(6.39)을 포함한 우리 사회 전반(6.82)에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요컨대,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변화와 사회적 위험에 대해서 국민들은 부정적 영향에 대한 걱정과 함께 우리의 삶과 사회 전반에 가져올 긍정적인 변화에 대한 기대를 동시에 가지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새로운 위험에 정책적 측면에서 대응 방안을 마련하면서 동시에 핵심적인 기술을 활용하여 우리의 삶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표 3-5〉 4차 산업혁명이 자신의 삶과 우리 사회에 미칠 것으로 예상하는 영향 정도에 대한 인식(1~10점)

구분	(1) 긍정적 영향		(2) 부정적 영향		(3) 일자리 또는 근로시간 감소		(4) 소득 감소 및 불평등 심화		(5) 소외와 윤리적 갈등		(6) 삶의 질 향상	
	자신	사회	자신	사회	자신	사회	자신	사회	자신	사회	자신	사회
전체	5.95	6.57	4.25	4.49	4.75	6.49	4.50	6.06	4.54	6.22	6.39	6.82
남자	6.22	6.87	4.05	4.12	4.65	6.26	4.38	5.80	4.34	6.01	6.63	7.00
여자	5.68	6.28	4.46	4.86	4.86	6.72	4.62	6.32	4.74	6.43	6.16	6.64
20~29세	6.26	6.73	4.23	4.49	5.04	6.43	4.28	5.50	4.12	5.97	6.90	7.16
30~39세	6.23	6.51	4.04	4.40	4.46	6.39	4.14	5.77	4.09	6.15	6.74	6.97
40~49세	6.05	6.51	4.41	4.52	5.00	6.36	4.66	6.07	4.65	6.19	6.57	6.77
50~59세	6.05	6.44	4.44	4.62	4.98	6.69	4.93	6.63	4.94	6.60	6.12	6.60
60세 이상	5.41	6.65	4.15	4.42	4.40	6.54	4.42	6.15	4.71	6.16	5.93	6.72
고졸 이하	5.27	6.43	4.29	4.55	4.53	6.49	4.53	6.28	4.68	6.09	5.89	6.51
대학 재학 이상	6.26	6.63	4.24	4.46	4.87	6.48	4.49	5.95	4.48	6.28	6.63	6.96
모름/무응답	5.54	6.69	3.48	4.16	3.28	6.94	4.01	7.10	4.20	6.31	5.13	6.61

(1) 4차 산업혁명은 전반적으로 나 자신에게(우리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2) 4차 산업혁명은 전반적으로 나 자신에게(우리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3)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나의 일자리를 잃게 되거나 근로시간이 줄어들 것이다 (우리 사회 전반에서 일자리가 대체 또는 감소될 것이다.)

(4)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나의 소득이 감소하고 소득이나 부의 불평등으로 박탈감이 심해질 것이다.

(우리 사회 전반에서 소득이 감소하고 소득이나 부의 불평등이 심해질 것이다.)

(5)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나의 삶이 외로워지고 윤리적인 갈등이나 고민을 하게 될 것이다.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소외 및 고립 또는 새로운 윤리적·사회적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6)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기술 발전으로 다양한 서비스가 증가하여 내 삶의 질이 높아질 것이다.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기술 발전으로 다양한 서비스가 증가하여 삶의 질이 높아질 것이다.)

〈표 3-5〉 4차 산업혁명이 자신의 삶과 우리 사회에 미칠 것으로 예상하는 영향 정도에 대한 인식(1~10점)(계속)

구분	(1) 긍정적 영향		(2) 부정적 영향		(3) 일자리 또는 근로시간 감소		(4) 소득 감소 및 불평등 심화		(5) 소외와 윤리적 갈등		(6) 삶의 질 향상	
	자신	사회	자신	사회	자신	사회	자신	사회	자신	사회	자신	사회
전체	5.95	6.57	4.25	4.49	4.75	6.49	4.50	6.06	4.54	6.22	6.39	6.82
농/임/어업	5.38	6.65	4.47	4.39	4.72	6.33	4.22	5.99	4.91	6.02	6.08	6.47
판매/영업/서비스직	5.82	6.36	4.49	4.63	4.89	6.66	4.93	6.34	4.79	6.17	6.17	6.65
생산/기능/노무직	5.85	6.50	4.31	4.32	4.55	6.12	4.68	5.83	4.44	5.85	6.32	6.40
사무/관리/전문직	6.28	6.67	4.15	4.45	4.83	6.41	4.41	5.97	4.45	6.30	6.68	7.04
전업주부	5.14	6.25	4.52	4.95	4.77	6.93	4.71	6.61	4.87	6.52	5.81	6.49
군인/학생	6.62	6.76	3.86	3.97	4.81	6.01	3.94	4.96	3.76	5.61	7.03	7.17
무직/퇴직/기타	5.82	6.99	3.97	4.10	4.20	6.41	4.04	5.95	4.45	6.22	6.26	6.95
99만 원 이하	5.06	6.11	4.42	4.77	4.75	6.34	4.94	6.47	4.89	6.43	5.26	6.10
100만~199만 원	5.54	6.54	3.97	4.13	4.22	5.99	4.12	5.69	4.43	5.66	6.24	6.73
200만~299만 원	5.83	6.73	4.41	4.62	4.88	6.78	4.70	6.38	4.70	6.42	6.12	6.70
300만~399만 원	6.03	6.73	4.25	4.38	4.83	6.44	4.36	5.91	4.41	5.88	6.54	6.89
400만~499만 원	5.98	6.67	4.03	4.45	5.03	6.54	4.68	6.08	4.67	6.38	6.62	6.96
500만 원 이상	6.14	6.58	4.29	4.51	4.72	6.51	4.48	6.04	4.51	6.30	6.55	6.92
모름/무응답	5.62	5.97	4.43	4.73	4.70	6.55	4.43	6.18	4.44	6.38	5.94	6.53

제2절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사회안전망 개편 필요성과 방향에 대한 인식

1.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정책 영역별 중요성 및 정책적 대응 수준에 대한 평가

먼저,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정책 영역별 중요성과 우리나라의 정책적 대응 수준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기 위해, 정책기획위원회의 ‘포용국가 비전과 전략에 제시된 사회정책 영역 가운데 6가지 정책 영역¹¹⁾을 설정하고 이를 대상으로 정책적 대응 또는 혁신적 변화가 필요한 우선순위를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3-6〉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해 혁신적 변화가 필요한 정책 우선순위

(단위: %)

구분	초중고 및 대학교육 혁신	고용서비스/평생교육 강화	기본소득 등 소득보장 강화	삶의 질을 위한 사회서비스 강화	문화여가 정책 다양성 제고	환경·안전을 위한 예방적 서비스
1순위	39.8	23.2	14.5	10.4	3.9	8.2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혁신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정책 영역으로, 전체의 약 40%가 미래 사회에 필요한 인재 양성을 위한 초·중·고·대학의 교육과정 혁신이라고 응답했다. 다음으로 우

11) ‘문제인 정부 포용국가 비전과 전략: 국민의 삶을 바꾸는 포용과 혁신의 사회정책’(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관계부처합동, 2018. 9.)에 제시된 3대 비전, 9대 전략 중에서 4차 산업혁명 대응과 관련된 “①미래사회에 필요한 인재 양성을 위한 초·중·고·대학 교육과정 혁신 ② 일자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고용서비스 및 평생 교육프로그램 혁신 ③ 소득 감소 및 불평등 대응을 위한 기본소득 등 소득보장제도 강화 ④ 가계부담 완화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일상생활 관련 다양한 사회복지서비스 확대 ⑤ 건강수명 연장과 여가시간 확대에 따른 문화여가정책의 다양성 확대 ⑥ 기술발전으로 인한 새로운 문제 해결과 일상의 안전과 생명 존중을 위한 예방적 정책 강화” 등 6가지로 구성하였다.

선순위가 높은 정책 영역은 일자리 대체나 감소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한 고용서비스 확충 및 평생 교육프로그램 혁신이었다. 이는 포용과 혁신의 사회정책 추진 방향 중에서 고용안전망 강화와 혁신 역량의 제고와 관련 되며, 4차 산업혁명의 변화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서뿐만 아니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이러한 혁신 역량 다음으로 정책적 대응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정책은 소득 감소 및 불평등에 대응하기 위한 기본소득 등 소득보장 강화와 가계부담 완화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일상생활과 관련된 사회복지서비스 확대로 각각 14.5%와 10.4%로 나타났다. 이어서, 기술발전으로 인한 새로운 문제 해결과 일상의 안전과 생명 존중을 위한 예방 정책 강화(8.2%), 건강수명 연장과 여가시간 확대에 따른 문화여가 정책의 다양성과 확대(3.9%) 순서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6가지 정책 영역별로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해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정도와 현재 우리나라의 정책적 대응 수준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미래의 인재 양성을 위한 초·중·고·대학 교육과정 혁신은 중요도가 평균 7.80으로 가장 높은 반면 대응 수준은 4.10으로 가장 낮았으며 중요도와 대응 수준의 격차는 3.70으로 가장 크게 나타났다. 이는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영역으로 교육과정 혁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반면 정책적 대응은 아직 부족하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어서, 일자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고용서비스와 평생 교육프로그램 혁신의 중요도가 7.27로 두 번째로 높은 반면 정책적 대응 정도는 4.19로 역시 낮게 나타나 혁신 역량을 갖춘 인재 양성과 일자리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고용안전망과 평생학습 지원체계와 관련된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¹²⁾

다음으로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사회안전망으로서 소득보장 강화와 사회서비스 확대의 중요도는 각각 6.68과 6.75로 유사하게 나타났으며, 정책적 대응 수준에 대한 인식과 평가는 사회서비스(4.57)의 경우 기본소득 등 소득보장 강화(4.17)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으나,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정책적 중요성에 비해서 대응 수준은 여전히 부족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사회안전망 개편을 통해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문화여가정책과 환경·안전 영역에서도 중요도와 대응 수준은 각각 6.35-4.64와 7.19-4.35로 나타나, 모든 영역에서 전반적으로 중요도에 비해 우리의 대응 수준은 여전히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
- 12) 조사 결과에서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해 우선순위가 높은 정책 영역으로 교육과정 혁신, 고용서비스와 평생교육체계 혁신이 제기되었으나, 이러한 정책 영역은 이번 연구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해당 분야와 연계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며, 본 연구에서 제안하고자 하는 정책 대안과 관련된 핵심적 부분인 4장과 5장에서는 소득보장과 복지서비스를 중심으로 혁신적 사회안전망 개편 방안을 제시하고 있음.

〈표 3-7〉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정책 영역별 중요도 및 우리나라의 정책적 대응 수준에 대한 인식(1~10점)

구분	(1) 초중고 및 대학교육 혁신		(2) 고용서비스 및 평생교육 강화		(3) 기본소득 등 소득보장 강화		(4) 삶의 질을 위한 사회서비스 강화		(5) 문화여가 정책의 다양성 제고		(6) 환경·안전을 위한 예방적 서비스	
	중요도	대응 수준	중요도	대응 수준	중요도	대응 수준	중요도	대응 수준	중요도	대응 수준	중요도	대응 수준
전체	7.80	4.10	7.27	4.19	6.68	4.17	6.75	4.57	6.35	4.64	7.19	4.35
남자	7.83	3.92	7.09	4.01	6.46	4.07	6.62	4.45	6.19	4.47	6.96	4.31
여자	7.78	4.28	7.45	4.38	6.89	4.28	6.87	4.69	6.51	4.81	7.42	4.39
20~29세	7.38	4.24	7.05	4.29	6.64	4.11	6.75	4.43	6.17	4.72	7.04	4.29
30~39세	7.79	3.86	7.41	3.85	6.88	3.86	6.84	4.06	6.27	4.13	6.97	3.74
40~49세	7.85	3.98	7.35	4.16	6.63	4.24	6.57	4.32	6.11	4.31	7.30	4.10
50~59세	7.90	4.06	7.24	4.24	6.70	4.09	6.80	4.61	6.45	4.69	7.27	4.45
60세 이상	7.97	4.31	7.29	4.35	6.59	4.45	6.77	5.17	6.63	5.18	7.29	4.92
고졸 이하	7.68	4.37	7.24	4.44	6.75	4.45	6.93	5.00	6.47	5.07	7.19	4.86
대학 이상	7.86	3.98	7.28	4.09	6.64	4.06	6.66	4.39	6.29	4.46	7.19	4.11
모름/무응답	7.51	4.75	7.64	3.92	6.69	4.04	7.02	4.44	7.00	4.92	7.11	5.41

- (1) 미래사회에 필요한 인재 양성을 위한 초·중·고·대학 교육과정 혁신
 (2) 일자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고용서비스 및 평생 교육프로그램 혁신
 (3) 소득 감소 및 불평등에 대응하기 위한 기본소득 등 소득보장제도 강화
 (4) 가계부담 완화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일상생활 관련 다양한 사회복지서비스 확대
 (5) 건강수명 연장 및 여가시간 확대에 따른 문화여가 정책의 다양성과 창의성 확대
 (6) 기술발전으로 인한 새로운 문제 해결과 일상의 안전과 생명 존중을 위한 예방적 정책 강화

(표 3-7)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정책 영역별 중요도 및 우리나라의 정책적 대응 수준에 대한 인식(1~10점)(계속)

구 분	(1) 초·중고 및 대학교육 혁신		(2) 고용서비스 및 평생교육 강화		(3) 기본소득 등 소득보장 강화		(4) 삶의 질을 위한 사회서비스 강화		(5) 문화여가 정책의 다양성 제고		(6) 환경·안전을 위한 예방적 서비스	
	중요도	대응 수준	중요도	대응 수준	중요도	대응 수준	중요도	대응 수준	중요도	대응 수준	중요도	대응 수준
전 체	7.80	4.10	7.27	4.19	6.68	4.17	6.75	4.57	6.35	4.64	7.19	4.35
농/임/어업	8.10	4.53	7.21	4.18	7.04	4.53	6.57	5.10	6.30	5.42	6.68	4.95
판매/영업/서비스직	7.90	4.26	7.47	4.41	6.93	4.32	6.90	4.74	6.43	4.85	7.10	4.57
생산/기능/노무직	7.64	3.82	7.14	4.02	6.62	3.96	6.64	4.37	6.11	4.08	6.96	4.25
사무/관리/전문직	7.78	3.99	7.24	4.08	6.61	4.02	6.59	4.31	6.24	4.41	7.25	4.03
전업주부	7.87	4.20	7.49	4.29	6.86	4.29	7.02	4.85	6.65	5.03	7.50	4.59
군인/학생	7.32	4.18	6.96	4.35	6.25	4.21	6.79	4.50	6.28	4.62	6.98	4.33
무직/퇴직/기타	8.04	4.21	7.01	4.20	6.44	4.48	6.79	5.11	6.44	4.96	7.04	4.95
99만 원 이하	6.99	4.02	6.84	4.48	6.49	4.82	6.59	4.94	6.19	5.26	6.75	5.00
100만~199만 원	7.45	4.51	7.12	4.79	6.55	4.66	7.02	5.53	6.59	5.43	7.07	5.16
200만~299만 원	7.93	4.13	7.46	4.32	7.13	4.28	7.14	4.87	6.60	4.94	7.33	4.64
300만~399만 원	7.86	4.16	7.25	4.15	6.55	4.11	6.64	4.41	6.35	4.62	7.16	4.37
400만~499만 원	7.95	3.79	7.31	3.87	6.52	3.98	6.70	4.29	6.31	4.27	7.15	3.91
500만 원 이상	7.86	4.15	7.31	4.18	6.70	4.13	6.65	4.44	6.37	4.52	7.28	4.22
모름/무응답	7.73	3.83	7.15	3.93	6.64	3.90	6.78	4.48	5.69	4.52	6.95	4.19

2.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사회안전망 개편 방향 관련 인식

먼저,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대중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일자리의 대체나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대안적 소득보장체제로 이슈가 되고 있는 기본소득의 도입, 그리고 기본소득 도입 시 기존 복지제도 조정 및 증세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일자리와 소득 감소에 대응하기 위하여 소득수준이나 근로 여부와 상관없이 노인, 장애인 등 취약집단 또는 국민 모두에게 동일한 수준의 현금을 주는 기본소득 도입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의견이 48.7%, 반대가 51.3%로 찬성이 다소 낮지만 거의 유사하게 나타났다. 과거에 급진적 대안으로서 일부에서 주장했던 기본소득이 최근 대중적인 인식 확대와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일자리 감소와 비정형 근로 증가로 기본소득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절반에 가까운 응답자가 이에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본격적으로 기본소득 도입에 대한 정치권의 논의 및 정책실험 등이 시행된다면 대중적 관심과 더불어 기본소득 도입을 지지하는 국민들의 비중은 보다 높아질 수 있을 것이다.

한편 기본소득을 도입할 경우, 대규모의 복지예산이 필요한 것을 고려하여 기존 복지제도 조정 및 축소를 통해 기본소득을 도입하는 방안과 현행 복지제도를 유지하면서 기본소득 도입과 연계하여 증세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을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기존 복지제도 축소에 반대하는 입장이 61.7%로 찬성(38.3%)보다 크게 높은 반면, 기존의 복지제도는 유지 또는 다소 조정하면서 세금 부담을 높이는 방안에 대한 찬성과 반대는 각각 48.2%와 51.8%로 양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8〉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기본소득 도입과 기존 복지제도 조정 및 증세
관련 인식(1~4점)

구분	(1) 일자리와 소득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기본소득 도입에 대한 인식		(2) 기본소득 재원 마련을 위해 기존 복지제도 축소 조정에 대한 인식		(3) 기존 복지제도 유지하면서 기본소득을 위한 증세에 대한 인식	
	찬성	반대	찬성	반대	찬성	반대
전체	48.7%	51.3%	38.3%	61.7%	48.2%	51.8%
	2.40		2.26		2.39	
남자	2.43		2.26		2.47	
여자	2.37		2.27		2.30	
20~29세	2.49		2.20		2.36	
30~39세	2.46		2.05		2.36	
40~49세	2.43		2.12		2.50	
50~59세	2.32		2.29		2.41	
60세 이상	2.34		2.53		2.31	
고졸 이하	2.44		2.40		2.37	
대학 이상	2.38		2.20		2.40	
모름/무응답	2.56		2.27		1.75	
농/임/어업	2.59		2.56		2.47	
판매/영업/서비스직	2.47		2.29		2.30	
생산/기능/노무직	2.55		2.34		2.49	
사무/관리/전문직	2.36		2.18		2.47	
전업주부	2.31		2.37		2.21	
군인/학생	2.51		2.23		2.36	
무직/퇴직/기타	2.38		2.31		2.39	
99만 원 이하	2.64		2.45		2.50	
100만~199만 원	2.54		2.37		2.44	
200만~299만 원	2.61		2.46		2.42	
300만~399만 원	2.35		2.19		2.41	
400만~499만 원	2.38		2.22		2.31	
500만 원 이상	2.34		2.22		2.41	
모름/무응답	2.27		2.19		2.14	

다음으로,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해 본 연구에서 제안하고 있는 포용
과 혁신의 사회안전망 개편 방안과 연계하여 도출한 5가지 사회안전망
개편 방향①생애주기별 기본생활보장 ②보편적 복지 확대 ③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증세 ④포용적 사회안전망의 혁신 역량 제고 가능성 ⑤수요

자 맞춤형 찾아주는 복지서비스 지원체계)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을 포함하여 모든 사람의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소득보장체계 개편에 대해 6.19점으로 응답자의 58.2%가 찬성하였다. 저소득층 중심의 선별적 복지보다 중산층을 포함하는 보편적 복지 확대 방향에 대해서도 5.95점으로 찬성한다는 응답이 54.0%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기본생활보장과 보편적 복지 확대에 대한 찬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한 사회안전망 확대를 위하여 세금 부담을 높이는 방안은 5.38점으로 찬성한다는 의견(46.2%)보다 반대하는 입장이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났다. 이는 향후 복지 확대를 위해 필요한 증세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포용적 사회안전망 강화가 우리 삶의 안정을 가져오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새로운 도전과 혁신을 가능하게 한다는 의견에 전체 응답자의 57.4%가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 정부의 포용과 혁신의 사회정책이 지향하는 방향으로서 국민의 절반 이상이 사회안전망의 포용성 제고가 혁신 역량을 제고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혁신적 사회안전망 개편 방향으로 제안하고 있는 4차 산업혁명의 기술을 활용한 수요자 중심의 찾아주는 복지서비스 패러다임 전환에 대해서 전체의 69.0%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차세대 정보시스템기반으로 혁신적 복지서비스 제공 및 복지 패러다임 전환을 통하여 사회안전망의 포용성을 제고하는 것에 대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적극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표 3-9〉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사회안전망 개편 방향에 대한 인식(1~10점)

(단위: %)

구 분	평균	매우 반대	다소 반대	다소 찬성	매우 찬성	합계
(1) 생애주기별 기본생활보장	6.19	17.6	24.3	23.3	34.9	100.0
(2) 중산층 포함한 보편적 복지 확대	5.95	20.7	25.3	22.7	31.3	100.0
(3)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증세	5.38	25.8	28.0	23.8	22.4	100.0
(4) 사회안전망 강화는 혁신에 기여	6.12	11.2	31.4	30.8	26.6	100.0
(5) 수요자 맞춤형 찾아주는 복지서비스	6.70	6.7	24.4	33.0	36.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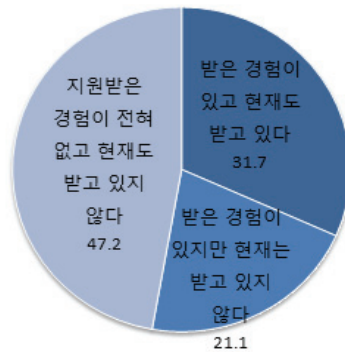
구분	(1) 생애주기별 기본생활 보장	(2) 중산층을 포함한 보편적 복지 확대	(3)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증세	(4) 포용적 사회안전망 강화는 혁신에 기여	(5) 수요자 맞춤형 찾아주는 복지서비스
전체	6.19	5.95	5.38	6.12	6.70
남자	6.34	6.04	5.57	6.32	6.81
여자	6.04	5.86	5.19	5.93	6.59
20~29세	6.53	5.77	5.22	5.94	6.52
30~39세	6.36	6.33	5.43	6.09	6.88
40~49세	6.33	6.10	5.74	6.38	6.84
50~59세	6.17	5.97	5.58	6.23	6.84
60세 이상	5.79	5.68	5.01	5.99	6.49
고졸 이하	6.07	5.69	5.07	5.90	6.42
대학 이상	6.24	6.07	5.54	6.24	6.84
모름/무응답	6.91	5.66	3.11	4.55	5.98
농/임/어업	6.59	5.89	5.45	5.71	6.36
판매/영업/서비스직	6.26	6.15	5.38	6.19	6.78
생산/기능/노무직	6.41	5.87	5.33	6.05	6.40
사무/관리/전문직	6.29	6.10	5.62	6.24	6.86
전업주부	5.65	5.68	4.84	5.74	6.44
군인/학생	6.57	5.76	5.06	6.02	6.61
무직/퇴직/기타	5.99	5.61	5.52	6.44	6.75
99만 원 이하	6.41	5.64	5.10	5.87	6.02
100만~199만 원	6.20	5.90	4.99	5.92	6.33
200만~299만 원	6.46	6.35	5.46	6.21	6.83
300만~399만 원	6.03	5.82	5.27	6.16	6.82
400만~499만 원	6.16	5.90	5.41	6.22	6.94
500만 원 이상	6.22	6.00	5.61	6.22	6.78
모름/무응답	5.82	5.60	4.62	5.49	6.10

3. 복지급여 수혜 경험 및 납세 여부에 따른 집단별 기본소득 도입과 증세 및 사회안전망 개편 방향에 대한 인식

복지급여 수혜 경험 및 납세 여부에 따른 집단별로 기본소득 도입과 증세 필요성 및 사회안전망 개편 방향에 대한 인식을 분석하기 위해 응답자들의 복지 수혜 및 납세 여부에 대해 조사한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그림 3-6] 복지급여 수혜 경험 및 현재 수혜 여부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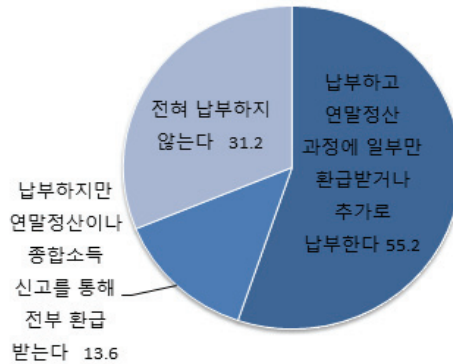
기초연금, 아동수당, 보육료 지원, 근로장려금, 국가장학금 등 각종 복지급여와 서비스를 수급한 경험과 현재 수혜 여부를 조사한 결과, 받은 경험이 있고 현재도 받고 있는 경우는 31.7%, 받았던 경험이 있지만 현재는 받고 있지 않은 응답자가 21.1%로 복지 수혜 경험을 가진 응답자는 전체의 52.8%로 절반을 다소 상회하였다. 반면 전체 응답자의 47.2%는 복지 수혜 경험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소득세 납부와 환급 여부 등을 중심으로 실질적인 납세 여부를 살펴보면, 원천징수 등으로 소득세를 납부하고 연말정산을 통해 일부

만 환급받거나 추가로 세금을 납부하는 실질적인 납세자는 전체 응답자의 55.2%로 절반을 다소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원천징수로 소득세를 납부하지만 연말정산과 종합소득 신고를 통해 전부 환급받는 경우가 13.6%, 소득세를 전혀 납부하지 않는 경우는 31.2%로 나타나, 실질적으로 면세점 이하에 해당하는 응답자는 44.8%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림 3-7] 소득세 납부 및 환급에 따른 실질적 납세 여부

(단위: %)



이러한 분포를 바탕으로 복지급여 수혜 경험 및 납세 여부에 따라 9개의 집단으로 구분하였으며 이러한 집단별 구성 비중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우리 사회에는 실질적으로 소득세를 납부하고 있지만 복지급여와 서비스 수혜 경험이 전혀 없는 집단이 27.6%로, 다양한 복지제도가 확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와는 반대로 실질적으로 소득세를 납부하면서 동시에 현재 수급(14.5%)하거나 현재 수급하지 않지만 수혜 경험이 있는 응답자(13.1%)를 합하면 27.6%로 유사한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연말정산 환급 등으로 실

질적으로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으면서 복지 수혜 경험이 있거나 현재 수급하는 응답자는 전체의 25.2%인 반면, 실질적으로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으면서 복지 수혜 경험도 전혀 없는 응답자도 19.6%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0〉 복지급여 수혜 경험 및 납세 여부에 따른 집단 유형 구분

(단위: %)

구분	복지급여 수혜 경험이 있고 현재도 수급	복지급여 수혜 경험이 있으나 현재 수급하지 않음	복지급여 수혜 경험이 없으며 현재 수급하지 않음	합 계
실질적으로 소득세 납부	14.5	13.1	27.6	55.2
소득세 원천징수 후 전액 환급	4.2	2.9	6.5	13.6
소득세를 전혀 납부하지 않음	13.0	5.1	13.1	31.2
합 계	31.7	21.1	47.2	100.0

이처럼 납세 여부와 복지 수혜 경험에 따라 집단을 구분한 이유는 이러한 집단별로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대안으로서 기본소득과 증세 필요성, 다양한 사회안전망 개편 방향에 대한 인식에 있어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복지 지위론(Welfare Status theory)에 따르면, 개인의 복지 관련 지위를 ‘복지 수혜자로서의 지위’, ‘납세자로서의 지위’, ‘복지제공자로서의 지위’라는 3가지 차원으로 구성하여 개인의 납세 및 복지 수혜 여부에 따라 집단을 구분하고, 국가 차원에서 복지 수준에 따른 복지 지위별 구성뿐만 아니라 개인 차원에서 납세 및 복지 수혜 경험에 따른 복지 및 증세 인식을 설명할 수 있다. 특히 집단별로 보편적 복지 확대에 대한 선호, 계층별 조세부담 수준에 대한 인식, 복지국가 지지 성향 및 복지 확대를 위

한 증세 필요성과 적극적 동의 관련 인식 등 다양한 복지 및 증세 인식의 차이가 존재하며 복지 수혜 경험 및 복지 지위의 변화에 따라 이러한 인식에도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 납세 및 복지수급 여부에 따른 집단별로 복지 확대 및 증세 인식의 차이를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 납세자와 복지수급자의 이중적인 지위를 동시에 가진 집단의 경우, 보편적 복지 확대 및 증세 필요성에 대해 가장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최현수 외, 2015).

이러한 연구 결과를 참고하여 본 연구에서도 납세 여부 및 복지급여 수혜 경험에 따라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해 필요한 기본소득 도입과 증세에 대한 생각, 그리고 5가지 사회안전망 개편 방향(①생애주기별 기본생활보장 ②보편적 복지 확대 ③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증세 ④포용적 사회안전망의 혁신 역량 제고 가능성 ⑤수요자 중심에서 찾아주는 복지서비스 지원체계)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다른지 분석 결과를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복지급여 수혜 경험 및 납세 여부에 따른 집단별로 소득수준이나 근로 여부와 상관없는 기본소득 도입에 대한 의견을 살펴보면, 전체 평균은 2.40이지만 복지 수혜 경험이 있는 집단, 특히 현재 복지 수혜를 받고 있는 집단에서 상대적으로 기본소득 도입에 대해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납세 여부와 연계하면 실질적으로 납세하고 추가적인 부담 능력이 있다고 볼 수 있는 집단에서 상대적으로 긍정적이었다.

〈표 3-11〉 복지급여 수혜 경험 및 납세 여부에 따른 집단별 기본소득 도입 및 기존
복지제도 조정과 증세에 대한 인식(1~4점)

(1) 일자리와 소득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기본소득 도입	복지급여 수혜 경험이 있고 현재도 수급	복지급여 수혜 경험이 있으나 현재 수급하지 않음	복지급여 수혜 경험이 없으며 현재 수급하지 않음	전체
실질적으로 소득세 납부	2.52	2.47	2.29	2.39
소득세 원천징수 후 전액 환급	2.46	2.45	2.35	2.40
소득세를 전혀 납부하지 않음	2.45	2.45	2.37	2.42
전체	2.48	2.47	2.32	2.40
(2) 기본소득 위해 기존 복지제도 축소 조정	복지급여 수혜 경험이 있고 현재도 수급	복지급여 수혜 경험이 있으나 현재 수급하지 않음	복지급여 수혜 경험이 없으며 현재 수급하지 않음	전체
실질적으로 소득세 납부	2.16	2.22	2.34	2.27
소득세 원천징수 후 전액 환급	2.01	2.29	2.14	2.13
소득세를 전혀 납부하지 않음	2.32	2.34	2.30	2.32
전체	2.20	2.26	2.30	2.26
(3) 기존 복지제도 유지 & 기본소득을 위한 증세	복지급여 수혜 경험이 있고 현재도 수급	복지급여 수혜 경험이 있으나 현재 수급하지 않음	복지급여 수혜 경험이 없으며 현재 수급하지 않음	전체
실질적으로 소득세 납부	2.48	2.43	2.30	2.38
소득세 원천징수 후 전액 환급	2.50	2.66	2.40	2.49
소득세를 전혀 납부하지 않음	2.45	2.44	2.24	2.36
전체	2.47	2.46	2.30	2.39

다음으로, 기본소득을 도입할 경우 기존 제도와의 조정 및 축소를 통해 기본소득을 도입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을 살펴보면, 실질적인 납세를 하지 않으면서 동시에 복지 수혜 경험이 없는 집단에서 높게 나타난 반면, 실질적으로 소득세를 납부하면서 복지급여를 받거나 수혜 경험이 있는

집단에서 이에 동의하는 정도가 다른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이와 관련하여 실질적으로 납세하거나 납세 후 환급을 받으면서 복지급여를 받고 있거나 수혜 경험에 있는 집단은 현행 복지제도를 유지하면서 기본소득 도입과 연계하여 증세하는 방안에 대해서 다른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실질적인 납세를 하면서도 복지 수혜 경험이 없거나 전혀 납세하지 않는 집단에서는 기존 제도를 유지하면서 기본소득 도입을 위해 증세하는 것에 상대적으로 동의 수준이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복지 수혜 경험과 납세 여부에 따른 집단별로 기본소득 도입과 기존 복지제도의 조정 및 증세에 대한 인식에 분명한 차이가 존재하고 있음으로 보여 준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복지급여 수혜 경험 및 납세 여부에 따른 집단별로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다양한 사회안전망 개편 방향 관련 인식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보장성 강화 등 사회안전망의 포용성 제고와 관련해서는 복지 수혜 경험이 있으나 현재는 수급하지 못하고 있는 집단에서 이와 같은 방향에 동의하는 정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납세 여부와 연계할 경우 실질적으로 납세하고 있으면서 복지 수혜 경험이 있는 집단, 특히 복지 수혜 경험은 있으나 현재 수급하지 못한 집단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의 기본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소득보장체계 개편 방향, 그리고 저소득층 중심의 선별적 복지보다 중산층을 포함한 보편적 복지 확대에 대해 이러한 경향이 분명하게 나타났다.

〈표 3-12〉 복지급여 수혜 및 납세 여부에 따른 집단별 사회안전망 개편 방향(기본생활 보장)에 대한 인식(1~10점)

구분	복지급여 수혜 경험이 있고 현재도 수급	복지급여 수혜 경험이 있으나 현재 수급하지 않음	복지급여 수혜 경험이 없으며 현재 수급하지 않음	전체
실질적으로 소득세 납부	6.32	6.54	6.11	6.27
소득세 원천징수 후 전액 환급	6.19	6.45	6.46	6.37
소득세를 전혀 납부하지 않음	6.12	6.08	5.79	5.98
전 체	6.22	6.42	6.07	6.19

〈표 3-13〉 복지급여 수혜 및 납세 여부에 따른 집단별 사회안전망 개편 방향(보편적 복지 확대)에 대한 인식(1~10점)

구분	복지급여 수혜 경험이 있고 현재도 수급	복지급여 수혜 경험이 있으나 현재 수급하지 않음	복지급여 수혜 경험이 없으며 현재 수급하지 않음	전체
실질적으로 소득세 납부	5.95	6.06	6.08	6.05
소득세 원천징수 후 전액 환급	5.80	6.68	5.98	6.07
소득세를 전혀 납부하지 않음	5.84	5.45	5.75	5.74
전 체	5.89	6.00	5.98	5.95

〈표 3-14〉 복지급여 수혜 및 납세 여부에 따른 집단별 사회안전망 개편 방향(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증세)에 대한 인식(1~10점)

구분	복지급여 수혜 경험이 있고 현재도 수급	복지급여 수혜 경험이 있으나 현재 수급하지 않음	복지급여 수혜 경험이 없으며 현재 수급하지 않음	전체
실질적으로 소득세 납부	5.50	5.63	5.27	5.42
소득세 원천징수 후 전액 환급	5.71	5.95	5.45	5.63
소득세를 전혀 납부하지 않음	5.45	5.43	4.87	5.20
전 체	5.51	5.63	5.19	5.38

한편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증세와 관련해서는 복지 수혜 경험에 없는 집단에서 가장 낮았으며, 특히 소득세를 전혀 납부하지 않는 집단이 동의하는 정도가 가장 낮았다. 이처럼 납세 여부와 연계해서 살펴보면, 향후 사회안전망의 강화를 위해 필요한 증세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납세하면서 복지 수혜 경험이 있는 집단의 동의 수준이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연말정산 등을 통해 소득세를 모두 환급받는 집단에서 동의하는 수준이 상대적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앞서 기존 복지제도 유지를 전제로 한 기본소득 도입과 증세 필요성에 대한 조사 결과에서도 유사한 경향을 나타냈다.

다음으로, 포용적 사회안전망 강화가 우리 삶의 안정을 가져오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새로운 도전과 혁신을 가능하게 만든다는 점에 대해서 납세 여부와 복지 수혜 경험에 따른 집단별로 살펴보면, 납세하면서 복지 수혜 경험이 있는 집단, 특히 복지제도의 경험은 있으나 현재는 수혜받지 못하고 있는 집단에서 포용적 사회안전망 강화가 새로운 도전과 혁신 역량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상대적으로 더 동의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혁신적 사회안전망 개편 방향으로 특히 강조하고 있는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4차 산업혁명의 기술을 활용한 수요자 중심의 찾아주는 복지서비스 패러다임 전환에 대해서 모든 집단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특히 납세하면서 동시에 복지 수혜 경험이 있거나 현재 복지 혜택을 받고 있는 집단에서 이러한 혁신적 서비스 제공에 대해 더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차세대 정보시스템 기반으로 4차 산업혁명의 기술을 적용하여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찾아주는 복지 패러다임 전환을 통해 포용적 사회안전망을 강화한다면, 사회보장정책 영역에서도 4차 산업혁명시대의 새로운 사회적 위험에 적절히 대응할 뿐만 아니라 수요자

의 입장에서 사각지대 문제 등 소외나 배제 없이 다양하고 편리한 복지서비스 제공할 수 있으며, 이를 토대로 혁신적 포용국가 구현을 위한 증세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사회적 합의 도출 가능성이 보다 높아질 것이다.

〈표 3-15〉 복지급여 수혜 및 납세 여부에 따른 집단별 사회안전망 개편 방향(포용적 사회안전망을 통한 혁신 가능성)에 대한 인식(1~10점)

구분	복지급여 수혜 경험이 있고 현재도 수급	복지급여 수혜 경험이 있으나 현재 수급하지 않음	복지급여 수혜 경험이 없으며 현재 수급하지 않음	전체
실질적으로 소득세 납부	6.19	6.48	5.97	6.15
소득세 원천징수 후 전액 환급	6.17	6.68	6.11	6.25
소득세를 전혀 납부하지 않음	6.14	5.97	5.92	6.02
전체	6.17	6.39	5.98	6.12

〈표 3-16〉 복지급여 수혜 및 납세 여부에 따른 집단별 사회안전망 개편 방향(찾아주는 복지서비스 지원체계)에 대한 인식(1~10점)

구분	복지급여 수혜 경험이 있고 현재도 수급	복지급여 수혜 경험이 있으나 현재 수급하지 않음	복지급여 수혜 경험이 없으며 현재 수급하지 않음	전체
실질적으로 소득세 납부	6.81	6.87	6.68	6.76
소득세 원천징수 후 전액 환급	7.29	6.99	6.62	6.91
소득세를 전혀 납부하지 않음	6.61	6.70	6.35	6.51
전체	6.79	6.85	6.58	6.70

제 4 장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데이터 기반 포용과 혁신의 소득보장체계 개편 방안

- 제1절 RTI(Real-Time Information) 시스템 기반 사회
보험 운영 패러다임 개편 및 사각지대 해소
- 제2절 정책실험 데이터 기반 대안적 소득보장제도로서의 기본
소득 도입 가능성 모색

4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 데이터 기반 포용과 혁신의 소득보장체계 개편 방안

여기서는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노동시장의 변화와 일자리 대체 및 소득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핵심적인 전략으로서, 데이터 주도의 혁신적인 소득보장체계 개편을 통한 포용적 사회안전망 구축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1절에서는 전통적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복지국가의 소득보장체계 중 핵심 정책인 사회보험제도가 지닌 사각지대 문제,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노동시장의 변화 대응의 한계를 극복하고 포용성을 제고하기 위한 혁신적 개편 대안으로 실시간 소득 파악 정보시스템(RTI: Real-time Information)을 기반으로 한 데이터 주도의 사회보험 운영체계 개편 방안을 제안한다.

2절에서는 대안적 소득보장제도로서 정책실험 데이터 기반의 기본소득 도입 가능성을 살펴본다. 이는 현행 소득보장체계 개편을 넘어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일자리 대체와 소득의 감소로 인해 심화될 소득과 부의 양극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주목받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그동안 논의된 기본소득 도입 필요성과 함께 정책실험을 통한 데이터 기반 기본소득 도입 가능성 검토를 통해 사회안전망의 포용성 강화를 위한 대안을 모색한다.

제1절 RTI(Real-Time Information) 시스템 기반 사회보험 운영 패러다임 개편 및 사각지대 해소

여기서는 최근 우리 일상생활과 밀접한 영역에서 급격하게 확산되고 있는 비정형 플랫폼 노동 증가 현상을 살펴보고, 이와 같은 4차 산업혁명의 기술 발전에 따른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두 가지 전략으로, 기존 사회안전망의 대표적인 소득보장제도인 사회보험 운영 패러다임의 혁신적 개편과 대안적 소득보장체계로서 기본소득 도입 필요성을 제시한다. 그리고 이러한 두 가지 전략 중 복지국가의 핵심 정책인 사회보험제도가 여전히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사각지대 문제와 더불어,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새로운 노동시장의 변화에 대응할 때 나타나고 있는 한계를 극복하고 사회안전망의 포용성을 제고하기 위한 혁신적인 개편 대안으로 ‘RTI(Real-time Information)’ 시스템을 기반으로 하는 데이터 주도의 사회보험 운영체계 개편 방안을 제안한다.

1. 플랫폼 노동의 증가 현상과 사회안전망 개편 필요성¹³⁾

가. 플랫폼 노동의 개념과 변화

1970년대 이후 자본주의는 제조업 중심의 산업사회에서 서비스경제사회로 변화해 왔다. 이러한 변화와 함께 노동시장의 불안정성도 확대되었다. 버락 오바마 정부 시절 미국 노동부 산하 근로기준분과 데이비드 와

13) 플랫폼 노동과 사회안전망 개편 필요성은 공동 연구자인 백승호(2018). 플랫폼 노동과 복지국가 개혁전략. 지식협동조합 좋은나라 이슈페이퍼 현안과 정책, 245.를 중심으로, 백승호, 남재욱, 이승윤(2018). 한국 플랫폼경제의 노동시장 구조와 일에 대한 질적 연구. 2018년 한국사회정책연합학술대회.; 서정희, 백승호(2018). 4차 산업혁명시대의 사회보장개혁: 플랫폼 노동에서의 사용종속관계와 기본소득. 법과사회, 56호.를 참고하여 재구성함.

일은 불안정 노동 증가의 원인을 기업구조 변화에서 찾았다. 대기업이 노동자를 직접 고용하던 시대는 끝났고, 대기업들은 핵심 역량을 제외한 부수적 기능들을 외주, 하청, 프랜차이즈의 방식으로 이전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그 결과 기업들은 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보호의 책임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었다. 반면에 노동자의 삶은 더욱 불안정해지고 있다. 질 좋은 일자리는 사라지고 특수형태고용, 파견, 용역, 프랜차이즈 가맹 고용 등 다양한 형태의 고용들이 등장했다. 이들은 고용조건, 임금, 사회적 보호 등에서 매우 불안정한 위치에 놓여 있다.

이러한 서비스 경제사회에서 불안정 노동 문제에 대한 해결방법을 찾기도 전에 플랫폼 노동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불안정 노동이 최근 이슈가 되고 있다. 플랫폼(platform)이란 재화와 서비스가 거래되고 생산이 조직되는 온라인상의 기반을 의미하며, 플랫폼 노동은 이러한 온라인 플랫폼에서 상품처럼 거래되는 노동형태를 의미한다. 플랫폼 노동은 오프라인 작업장에서 조직되었던 생산이 온라인 플랫폼으로 전환되면서 주요하게 관찰되는 노동 방식의 변화 중 하나이다. 우리 사회에서는 대표적인 플랫폼 노동 형태로 배달대행, 대리운전, 가사도우미 등이 확산되고 있으며, 이들은 애플리케이션을 매개로 소득활동을 하는 독립노동자로 간주된다. 특히 최근 플랫폼 기반 카풀, 공유 숙박에 대한 규제 완화와 관련하여 기존의 동일 산업 종사자와 대립과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까지 플랫폼 노동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정확한 실태조사는 거의 없다. 온라인 플랫폼 노동에 대한 정확한 실태가 파악되지는 않았지만,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관련 연구들에 따르면, 플랫폼 노동과 같이 모호한 고용관계에 있는 종사자의 비율이 약 9%에서 30% 수준으로 다양하게 추정되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실은 향후에 우리 사회에서 플랫폼 노동이 급속하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며, 우리의 일상에

서 누구나 체감할 수 있는 현실이 되고 있다.

나. 플랫폼 노동의 불안정성: 노동권과 사회보장권의 배제

플랫폼 노동에 종사하는 비정형 근로자의 확산이 심각한 문제가 되는 이유는 이들이 고용, 소득, 사회적 보호 등에서 불안정성을 전형적으로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플랫폼 노동자들이 노동에 대한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 이것은 일할 권리와 일하는 환경에 대한 권리로 구분될 수 있으며, 기존의 사회보장체계에 의한 사회보장의 권리에서 배제되는 부분도 플랫폼 노동의 불안정성을 심화시키는 원인이다.

플랫폼 노동은 다양한 형태로 존재한다. 주문형 앱노동, 클라우드 노동 등 하나의 범주로 묶기가 어려울 정도로 다양한 속성을 가지고 있다. 한국 사회에서는 주문형 앱노동이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데, 주문형 앱노동은 온라인 플랫폼이 수요공급의 중개 역할을 하지만, 오프라인에서 대면 접촉을 통해서 서비스가 전달되는 형태의 노동을 의미한다. 온라인상의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는 대리운전, 퀵서비스 음식배달, 가사서비스 플랫폼 노동이 대표적이다. 이와 같은 플랫폼 노동의 불안정성을 노동권과 사회보장권의 배제 관점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노동에 대한 권리와 관련해서 일할 권리란, 개인들이 일할 기회를 가질 권리, 생산적 노동에 종사할 권리, 이러한 권리를 기본권으로 보장받을 권리를 의미한다. 국제법과 우리나라의 판례들에 근거해서 보면, 그동안 일할 권리의 보장은 임금을 목적으로 하는 생산적 고용으로 제한되었다. 우리나라 근로기준법(고용노동부법, 2019)에서도 근로자를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 근로를 제공하는

자(법 제2조)”로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라 임금고용계약관계가 성립된 근로자는 임금, 근로시간, 최저임금 등 일할 권리와 일할 환경에 대한 권리를 보장받는다.

그러나 플랫폼 노동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기준을 충족시키기 어려운데, 이들이 임금고용 계약관계를 맺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플랫폼 노동자는 플랫폼 기업과는 플랫폼을 사용하는 회원과 고객관계로 계약을 맺고, 서비스를 주문한 고객과는 업무 계약관계를 맺는다. 이 경우 전형적인 삼각 계약관계가 형성된다. 한편으로는 기업, 최종사용자, 클라이언트, 작업요구자들이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 노동자가 있으며, 온라인 플랫폼이 이들을 중개함으로써 경제과정이 이루어진다. 온라인 플랫폼에 고객은 일감을 의뢰하고, 노동자는 그 일을 받아 가는데, 온라인 플랫폼의 운영자는 웹사이트를 관리하고 개발하거나, 노동자와 고객의 계약관계를 중재한다.

그런데 이러한 방식에서는 누가 이용자인지, 근로자인지 사전에 알기 어렵고, 고객이 특정인을 선택할 수 없다. 이러한 고용관계를 모호한 고용관계, 가짜 자영업관계라고 하는데, 온라인 플랫폼에서 이러한 관계가 훨씬 더 용이해진다. 고용 계약관계를 맺지 않는다는 것은 헌법 제32조와 제33조에서 보장되는 노동권의 적용을 받을 수 없다는 의미이다. 이 조항에 근거해서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의 임금, 근로시간 등에 대한 사용자의 보호 의무들을 명시하고 있고, 노동조합법에서는 근로자의 노동 3권에 대한 법적 권리를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법적인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한 플랫폼 노동자는 임금, 근로시간, 단체행동 등에서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다.

물론 온라인 플랫폼 활용의 긍정적 측면이 다양하게 언급되기도 한다. 음식 배달업의 경우 플랫폼을 활용하면서 인력 관리, 고객 관리, 광고의

효율성이 높아짐으로써 매출이 향상되었다는 것이다. 가사노동업의 경우 노무 제공자와 구매자 간 정보 비대칭을 플랫폼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자신의 선택에 따라 노동 공급을 조절하는 것이 가능해짐에 따라 전일제 노동이 어려운 이들의 노동 참여 유인을 높일 수 있다는 점도 언급된다. 플랫폼 노동자는 자신이 원할 때 일할 시간을 선택할 수 있는 근로시간의 자유와 자신이 원하는 장소에서 일할 수 있는 활동의 자유를 가질 수 있다는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 플랫폼 노동은 불안정성이라는 부정적 측면이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사회보장에 대한 권리를 살펴보면, 플랫폼 노동자들은 노동권에서 보호받지 못할 뿐 아니라 사회권에서도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사회보험법에서 자격기준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명시되어 있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은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로 구성되어 있는데, 현행 사회보험법은 근로기준법의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과 고용보험, 근로자와 자영업자를 포괄하는 국민연금과 국민건강보험으로 구분할 수 있다. 사회보험은 이처럼 경제활동을 기반으로 근로자와 사용자를 주체로 운영되는데 우리나라의 사회보험은 도입 이래 대규모 기업의 정규 근로자를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확대되어 조직화된 노동자를 중심으로 적용되고 있다.

4대 사회보험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인정 여부에 따라 자격과 보험료 수준이 다르게 규정되어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과 고용보험은 근로기준법의 근로자로 인정받을 경우에만 가입 자격이 주어진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보험료는 근로자 인정 여부에 따라 달리 책정되어 있다. 2018년 현재 고용보험료는 1.55%(근로자 부담 0.65%, 사용자 부담 0.9%), 국민연금 보험료는 9%(근로자와 사용자 각각 4.5%), 국민건강보

협료는 6.24%(근로자, 사용자 각각 3.12%)이다. 근로기준법의 근로자로 인정받을 경우 4대 사회보험료 본인 부담은 임금의 9.17%이지만,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할 경우 소득의 16.79%에 이르게 된다. 또한, 일반 근로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의 100%를 사업주가 부담하지만, 특수고용형태 근로종사자의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의 50%는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따라서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플랫폼 노동자는 4대 사회보험에 가입하기 위해 소득의 17% 이상을 보험료로 납부해야 한다. 결국 저임금 노동으로 인해 보험료 납부 여력이 부족한 플랫폼 노동자들은 상당 부분 사회보험에서 배제된 채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플랫폼 노동의 사회보험 배제 현황은 특수고용형태근로종사자들의 사회보험 배제와 사각지대를 통해 유추할 수 있다. 특히 플랫폼 노동 특성상 노후소득보장이나 실업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국민연금이나 고용보험 배제도 중요하지만 산업재해보상보험에서 배제의 문제는 심각하다. 사고 위험이 크고 사고 발생 시 책임관계가 모호한 경우가 많지만 이들은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므로 대부분 플랫폼 노동자 개인이 책임을 지게 된다.

플랫폼 업체에 따라서는 플랫폼 노동자의 업무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고 해결을 위해 민간보험을 활용하는 경우도 있다. 플랫폼 노동자들의 사고가 플랫폼 기업 이미지에 긍정적이지 못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민간보험사의 기존 보험 상품 중에 플랫폼 노동자의 업무상 사고를 보장할 수 있는 적합한 보험 상품을 찾기는 어렵다. 그러한 보험 상품을 찾는다 해도 플랫폼 노동자의 사고 위험을 민간보험을 통해 보장받는 것은 쉽지 않다. 플랫폼 노동의 사고위험률에 대한 통계가 확보되어 있지 않아서 플랫폼 노동자들에게는 높은 위험률이 적용되어 과도한 보험료를 부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국내 민간 보험사들이 유사한 상품을 취급해본 경험이 없는 상황에서 플랫폼 노동자들에게 민간보험은 과도한 비용 부담이나 불

충분한 위험 보장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으며, 이러한 비용은 서비스 이용가격에 포함되어 가계의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다. 플랫폼 노동과 사회안전망 개편전략 필요성

앞서 살펴본 것처럼 현행 노동 관련 법과 사회보장법 체계 내에서 플랫폼 노동자들의 권리는 충분히 보장되고 있지 못하다. 그렇다면 플랫폼 노동의 긍정성을 극대화하고 불안정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전략들이 검토되고 플랫폼 노동이 더욱 증가하게 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러한 개편전략이 추진되어야 한다. 우선, 플랫폼 노동의 근로자성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 플랫폼 노동자는 근로기준법뿐만 아니라 노동조합법에서도 근로자로 인정받고 있지 못하는데, 우리나라의 현실적 법체계에서 플랫폼 노동을 근로기준법의 근로자로 인정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것이 법조계의 일반적 해석이다. 플랫폼 노동의 특성상 사용자를 특정하는 것이 매우 어렵기 때문인데, 차선의 방법으로 플랫폼 노동을 노동조합법에서 근로자로 인정하는 개편을 추진할 수 있으며, 사회보험법상의 근로자에 대한 적용 기준과 관련하여 예외 기준을 개편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법적, 제도적 개편과 더불어 정부와 플랫폼 기업은 플랫폼 노동자의 보호와 권리 보장을 위하여 사회적 책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덴마크에서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온라인 플랫폼 기업 힐퍼(Hilfr.dk)는 2018년 4월 세계 최초로 덴마크 노총 소속의 최대 노동조합인 3F와 단체협약을 맺기도 했다. 힐퍼 플랫폼에 등록된 플랫폼 노동자는 스페르힐퍼(Super Hilfrs)가 되면 임금, 휴가비, 연금에서 덴마크의 일반 노동자와 같은 노동권을 보장받는다. 이것은 덴마크 정부의 공유경제 육성 계획 시

행과 플랫폼 노동을 제도권으로 편입하기 위한 노력으로 가능했다.

다음으로, 플랫폼 노동의 사회보장을 강화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 개혁이 필요하며, 본 연구에서 이를 혁신적 사회보험 운영 패러다임 개편과 연계하여 제안하고자 한다. 우선 사회보험 자격기준을 근로기준법의 근로자에서 노동조합법상의 근로자로 전환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 현행 사회보험법은 근로기준법의 근로자를 기준으로 자격을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에 근로자에서 제외되는 근로일수 및 근로시간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므로 플랫폼 노동자를 포괄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특수고용형태근로종사자를 일부 인정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보험법 조항의 개정만으로는 최근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플랫폼 노동자들의 사회보험 사각지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 현재 보험설계사 등 9개 직종 특수형태고용 문제도 최근까지 해결하지 못한 상황에서 플랫폼 노동자들의 노동권 인정 문제는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일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보험법을 개정하는 것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디지털 노동시장의 특수고용형태근로종사자인 플랫폼 노동자의 사회보험 사각지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안전망 개편전략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플랫폼 노동의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이 필요한 상황에서 현행 사회보험법 개정과 더불어 사회보험제도 운영 패러다임의 혁신적 전환과 새로운 대안적 소득보장제도의 도입을 통해 대응하는 전략들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전자는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RTI 시스템을 기반으로 소득 발생 중심의 사회보험료 부과 및 징수 통합 등 운영 패러다임의 혁신적 개편 방안이다.

또 다른 하나는 대안적 소득보장제도로서 기본소득을 도입하는 것이

다. 이러한 기본소득 전략은 노동 없는 미래에 유효한 대안이라고 할 수 있다. 플랫폼 노동의 경우 장기적으로 보면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자동화 가능성이 높은 직업군이 대부분이며 최근 빠르게 증가하는 무인화 경향은 일자리의 감소와 대체를 가속화시킴으로써 노동 없는 미래를 앞당기고 있다. 무인자동차가 일반화되면 운전기사는 줄어들게 될 것이고, 청소 로봇, 드론 배송 등이 일반화되면 가사서비스나 택배 또는 배달서비스 플랫폼 노동 역시 감소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기존의 사회보장체계 개편을 통해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사회안전망의 포용성을 강화하는 전략은 일정 기간 동안 과도기적 단계에서 유용한 전략으로 고려될 수 있다. 하지만 노동이 없는 미래에 대한 대안으로서 기본소득 도입은 필요하며 도입 가능성과 기존 사회안전망과의 연계 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필연적이다. 그러나 이러한 기본소득을 도입하는 것은 대중적 관심이나 해외의 정책실험 사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한국 사회에서 단기 기간에 실현 가능한 전략은 아닐 수 있다. 따라서 2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정책실험을 통해 기본소득 도입 가능성 또는 기존 사회안전망과의 연계 가능성에 대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데이터를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데이터 주도의 기본소득 도입 방안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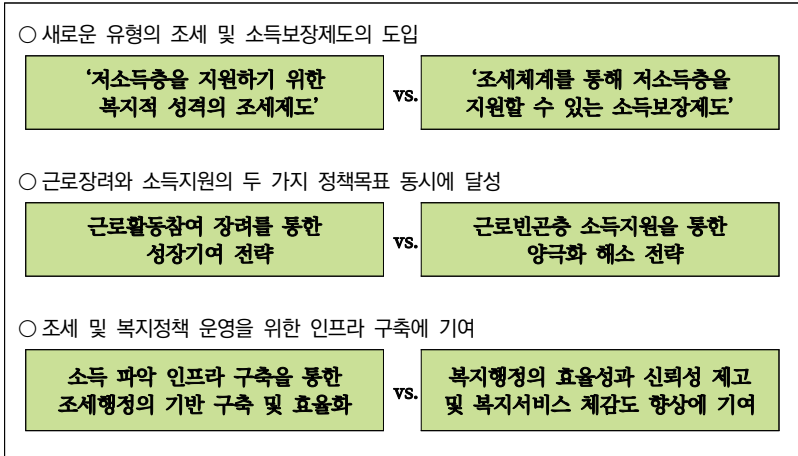
2. RTI 시스템 기반 데이터 주도의 사회보험 운영 패러다임 혁신적 개편 방안

가. 근로장려세제 도입을 통한 소득 파악 인프라 개선 노력과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의 근본적 한계

현재 사회보장제도 운영과 관련된 자산조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소득 및 재산 정보 가운데, 가장 핵심은 국세청 소득 파악 자료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노동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저소득 근로빈곤층의 불안정한 고용과 관련해서 파악하기 어려웠던 일용근로소득 신고 자료이다. 이러한 일용근로소득이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를 통해서 분기 단위로 사업주에 의해 신고가 이루어지고 데이터베이스로 구축된다. 이러한 데이터가 2019년부터 현행보다 약 3배로 규모가 확대되어 자녀장려세제를 포함할 경우 약 5조 원의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이 저소득 근로자 및 영세 자영업자에게 지원되는 데 근간이 되는 소득정보로 활용되는 것이다.

이처럼 근로장려세제 관련 정책 인프라가 구축되고 소득세체계를 통해 제도가 운영될 수 있었던 것은, 2005년 8월 참여정부의 국정과제회의에서 도입이 결정될 당시 근로장려세제 도입과 함께 추진된 소득 파악 인프라 구축이 가능했기 때문이다. 당시 소득 파악 인프라 구축과 더불어 사회보험료 통합 징수를 별도의 국정과제로 추진했다. 사회보험 사각지대 문제를 해소하고 사회보험과 공공부조 등 사회보장체계 운영을 위한 행정체계 구축에 기여함으로써 효율성과 국민의 복지 체감도를 향상시킨다는 목표를 근로장려세제 도입의 두 가지 정책목표와 더불어 별도의 세 번째 정책목표로 정리한 바 있다.

[그림 4-1] 참여정부의 근로장려세제 도입 결정 당시(2005. 8.) 제시된 근로장려세제 (EITC) 정책목표 및 기대효과



참여정부 당시 대통령 자문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를 중심으로 재정경제부 세제실, 국세청,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가 참여하여 IMF 이후 급증한 근로빈곤층 지원 대책으로 근로장려세제 도입을 결정하기 위한 국정과제회의(2005. 8.) 개최하였다. 국정과제회의의 발표자료 및 대통령 보고자료 작성을 직접 담당했던 필자의 입장에서 2005년 근로장려세제 도입 당시부터 5조 원 규모의 대표적 소득보장제도로 위상이 확대되기까지의 과정을 돌이켜보면, 당시 작성했던 근로장려세제 확대 및 파급효과와 관련된 전망들과 관련하여 매우 흥미로운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최근 4차 산업혁명과 함께 대두되고 있는 비정형 플랫폼 노동 확산과 여전히 해결하지 못하고 남아 있는 사회보험 사각지대의 문제는 포괄성과 보장성 측면에서 사회보험의 발전이 10년 정도 지체된 상황에 대해 정책연구자로서 아쉬움을 지울 수 없다.

먼저, 2005년 8월 대통령이 직접 도입을 결정한 후 법령 개정 및 소득 인프라 구축 기간을 거쳐 2008년 본격적으로 시행된 이후 10년이 지난

현시점에서 당시의 전망과 지금의 상황을 비교해 보면 대부분이 실현되거나 기대 이상으로 근로장려세제 등 소득세를 통한 비환급형 세액공제 방식의 소득지원 제도가 당시 참고한 미국이나 영국 못지않게 확대되어 있다. 예를 들면, 소득보장제도의 전달체계 측면에서 근로장려세제 도입을 계기로 세제실과 국세청이 그동안 담당해 왔던 세수 확보 목적의 징세 행정 외에 급여행정을 시행한다는 것은 의미 있는 변화였다. 그리고 현재 국세청에는 소득지원국에서 이러한 업무를 담당하며, 따뜻한 세정이라는 표현을 사용할 정도로 국세행정의 변화가 나타났다.

특히 근로장려세제가 근로빈곤층을 대상으로 하는 핵심 정책으로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와 함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중심으로 구성된 기존의 소득보장체계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전망이 있었으며, 이는 2015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별 급여체계 전환 및 확대 등 소득보장체계 개편에 실제로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당시 현재의 기본 소득만큼 사회복지학계에서 이슈가 되었고 한편에서는 부정적인 의견까지도 제시되었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의 관계 설정 및 영향에 대한 우려는 돌이켜보면 새로운 소득보장제도에 대한 두려움이나 불신으로 인한 복지 축소에 대한 걱정이었다고 할 수 있다.¹⁴⁾

또한 우리나라의 근로장려세제는 초기에 제한적인 규모로 시작되었으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상황과 국회 세법개정안 처리 과정에서 적용 대상이나 급여수준이 확대될 수 있으며 향후 제도의 확대 개편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될 수 있다는 전망이 있었다. 특히 법률체계(세법개정)나 예산구조(조세지출)의 특성과 함께, 대통령 선거 및 국회 등에서 선거공약 등으로 제시됨으로써 근로장려세제 유형의 제도 확대를 요구하는

14) 당시 근로장려세제 도입 국정과제 준비에 참여했던 필자는 근로장려세제 도입으로 인해 김대중 정부가 도입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근로무능력자 중심으로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학계 및 참여연대 등과 함께 진행된 토론회에 참여하기도 하였다.

형태로 기존의 복지프로그램에 비해 상대적으로 빠르게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었다. 지난 10년 동안 경제정책 방향의 주요대책으로 포함되거나 대통령 선거 공약 및 국정과제로 제시되어 도입 당시 계획에 비해 대폭 확대된 근로장려세제의 변화 과정을 살펴보면, 이러한 전망은 모두 현실이 되었다.

반면에 당시의 전망 중 절반은 맞고 절반은 실현되지 않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본 연구에서 혁신적인 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사회보험 운영체계 개편을 통한 사회보험 사각지대의 근본적 해소이다. 당시 일용근로자 소득 파악 인프라 구축은 조세 행정 기반 구축과 더불어 복지 행정의 효율성과 신뢰성 제고 및 복지서비스의 체감도 향상에 기여할 수 있으며, 특히 일용근로자 소득 파악 확대는 근로장려세제 도입과 함께 추진되는 사회보험 통합 징수 및 국세청 이관과 연계하여 사회보험 사각지대 문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그리고 당시 근로장려세제 도입뿐만이 아니라 사회보험 통합징수를 추진하기 위해 상당한 규모의 인력이 국세청에 충원되었다.

당시 추진된 국세청 사회보험료 통합 징수는 일용근로소득 파악 정보를 기반으로 소득 파악과 동시에 동일한 정부기관이 주체가 되어 보험료를 징수함으로써 사각지대 문제를 해소한다는 방향을 지니고 있었다. 실제로 이러한 소득 파악 자료가 현재 사회보장제도 운영의 기반으로 활용되고 있는 정보시스템(행복e음, 법 정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연계되어 자산조사에 활용되고 있으며, 2012년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도입할 당시 이러한 소득정보의 연계가 매우 중요한 기반으로 활용되었다.

이러한 일용근로소득 데이터는 행복e음과 두루누리의 도입 등 복지행정 체계의 주요 인프라로 최근 활용 범위가 확대되고 있으나 2008년 출범한 이명박 정부에서 사회보험료 통합징수 추진 관련 법 제정이 무산되

면서 이후 10년간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에 있어 더 이상 이러한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한계에 직면하고 있다. 참여정부 말에 추진된 국세청 중심의 사회보험 통합징수 업무 이관 관련 사회보험 통합징수 법안이 폐기된 이후 건강보험공단을 중심으로 외형상 통합징수체제로 추진되었다. 그러나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도입에도 불구하고 사회보험 통합징수 추진의 중단과 최근의 비정형 플랫폼 노동의 증가 현상으로 인해 근로장려세제와 연계하여 사회보험 가입을 확대하고 사회보험료 지원을 통해 획기적으로 사각지대를 해소할 가능성은 점점 더 낮아지고 있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건강보험공단 중심의 사회보험료 징수 일원화 이후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대책 마련 및 현장에서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사각지대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은 비정형 플랫폼 노동의 증가와 같은 노동시장의 급격한 변화와 함께 사회보험 운영 패러다임이 지니고 있는 근본적인 한계 때문이다.

요컨대 근로장려세제 시행을 위한 일용근로자 및 자영업자에 대한 소득 파악 인프라 구축 및 소득 파악 정보 활용을 통한 사각지대 해소 노력은, 국세청 일용근로자 소득신고 체계와 사회보험공단을 중심으로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가입 자격 확인 및 사회보험료 부과에 있어서 소득 파악 정보의 구축과 연계 강화에도 불구하고 시차 문제(분기 단위 일용근로 소득 지급조서 제출 및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에 따라 최대 5개월까지 발생)로 인해 시스템상의 한계가 있다. 또한 앞서 플랫폼 노동자 적용과 관련된 법적, 제도적 한계는 보다 근본적인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현재의 패러다임으로는 소득 파악 정보 연계에 있어 시차 문제를 단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비정형 플랫폼 노동에 대응하기 위해서 정보시스템의 개편과 함께 사회보험 운영 패러다임 개편을 위한 혁신적 변화가 필요한 상황인 것이다.

나. 비정형 플랫폼 노동과 사회보험 사각지대 발생 구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근로자에서 제외되고 있는 저소득 불안정 근로자, 특수고용형태 근로종사자, 비정형 플랫폼 노동에 대한 사회보험 사각지대 발생 구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사회보험 가입 대상 사업장 근로자의 정의(국민연금법 제3조 제1항 제1호) 및 근로자에서 제외되는 기준(동법 시행령 제2조)의 적용에 의해, 국세청에 대한 사업주의 일용근로소득신고와는 달리 근로자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특히 우리 사회의 임금근로계약이나 행정적인 측면에서 실질적으로 관리되지 않고 있으며, 관리 자체가 불가능한 근로일수 및 근로시간 기준(국민연금법 및 시행령 근로자 정의 및 근로자 제외 기준 참조)에 의해 근본적으로 제도적인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근로장려세제와 연계한 데이터 구축 활용과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도입 등으로 노력하였으나 한계에 직면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법적 근거와 제도적 한계를 개선하여 근로자의 자격 조건이 아닌 소득 발생 중심의 사회보험 운영체제로 전환해야 한다.

「국민연금법」 제3조(정의 등)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6. 7., 2015. 1. 28., 2016. 5. 29.>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가 무엇이든 사업장에서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아 생활하는 자(법인의 이사와 그 밖의 임원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외한다.
2. "사용자(使用者)"란 해당 근로자가 소속되어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를 말한다.
3. "소득"이란 일정한 기간 근로를 제공하여 얻은 수입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 또는 사업 및 자산을 운영하여 얻은 수입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조(근로자에서 제외되는 사람) 「국민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근로자에서 제외되는 사람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 8. 17., 2015. 6. 30., 2018. 7. 31.>

1. 일용근로자나 1개월 미만의 기한을 정하여 사용되는 근로자. 다만, 1개월 이상 계속 사용되면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근로자에 포함된다.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건설공사의 사업장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장에서 사용되는 경우: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인 사람

- 나. 가목 외의 사업장에서 사용되는 경우: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이거나 1개월 동안의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사람
- 2. 소재지가 일정하지 아니한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
- 3. 법인의 이사 중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소득이 없는 사람
- 4.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 다만, 해당 단시간근로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근로자에 포함된다.
 - 가. 생업을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조제3호에 따른 시간강사
 - 나. 생업을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의 동의를 받아 근로자로 적용되기를 희망하는 사람
 - 다. 둘 이상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면서 각 사업장의 1개월 소정근로시간의 합이 60시간 이상인 사람으로서 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사업장에서 근로자로 적용되기를 희망하는 사람

또 다른 한편에서는, 이러한 사회보험법상의 근로자 제외 관련 법적 한계로 인해 존재하는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정책적 방안들의 운영체계상 문제로 혁신적인 개편이 필요한 상황도 확인된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대상 범위 및 지원 방식 등 운영체계의 한계로 인해 정부의 사회보험료 지원에 대한 국민의 체감도 제고 및 사회보험료 납부로 인한 경제적 부담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개선에 실패했다고 할 수 있다. 2012년 7월에 시행된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과 지원수준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고,¹⁵⁾ 국세청 일용근로 소득 파악 정보의 연계 및 활용 강화에도 불구하고 근로자 제외 기준에 따른 사

15) 2018년 현재, 지원 대상은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 중에 월평균 보수 190만 원 미만인 근로자와 사업주로, 지원 대상 보험료의 40%부터 최대 90%까지 지원하고 있으며, 고액자산 근로자 지원 제외 기준도 적용하고 있다. 5명 미만 사업장의 신규 가입지원자 90%, 5명 이상 10명 미만 사업장 신규 가입지원자 80%, 10명 미만 사업장의 기가입지원자 40%를 지원하며, 고액자산 근로자 지원 제외 기준은 「지방세법」 제105조에 따른 전년도 재산세 과세표준액이 6억 원 이상,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1호 라목에 따른 전년도 근로소득이 연간 2508만 원 이상 또는 전년도 근로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이 2280만 원 이상인 자이다. 최근 국민연금개편 정부안에 따르면, 소득기준을 210만 원으로 조정하고 자영업자에게 대해서도 최대 1년간 사회보험료의 50%를 지원하는 것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업주와 근로자 양자의 사회보험 가입 및 보험료 납부 회피 가능성으로 인해 제도적인 사각지대가 발생하여 신규 가입 및 보험료 지원을 통한 사각지대 해소 효과에 한계가 존재한다. 국세청 일용근로소득 신고가 분기 단위마다 사업장으로부터 성실하게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의 운영체계와 보험료 지원효과에 대한 체감도 부족으로 신규 사회보험 가입 및 보험료 납부를 회피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사회보험료 지원 신청은 사업장에서 하며, 특정 월 보험료를 납부 기한(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할 경우 다음 달에 보험료 지원금을 차감한 후에 고지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사회보험료를 부담해야 하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동시에 지원을 받아 근로자의 경우 지원금만큼 실제 급여 수령액이 증가하게 되지만, 해당 사회보험료를 차감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 각 사업장별 급여명세서 표기 방식 및 안내 정도에 따라 사회보험료 지원에 대한 체감 정도나 사회보험 신규 가입에 따른 사회보험료의 발생 부담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해소하는 데 한계가 있다. 또한 현금 지원이 아니기 때문에 근로자에 대한 직접적 환급이 불가능한 방식(사업장 휴·폐업 시 지원 불가)이며 출산, 군복무 등에 대해서 가입 기간을 명목적으로 인정하는 연금 크레딧 제도와의 상이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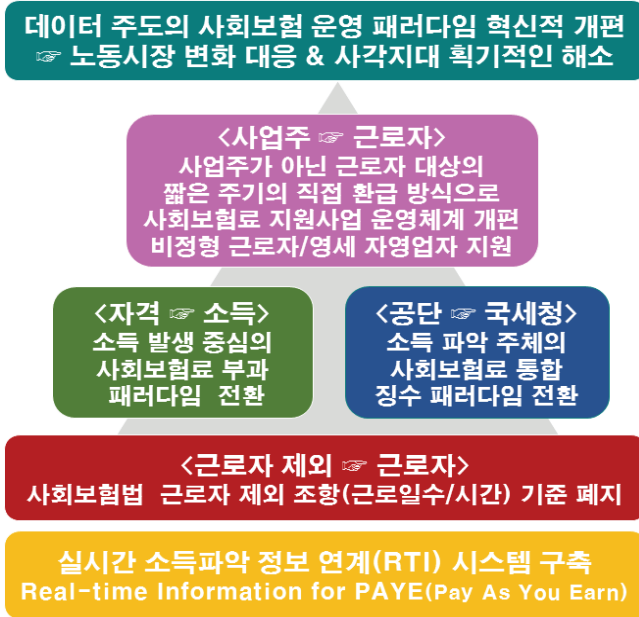
요컨대 대규모 사업장 및 정규직 상시 근로자 중심으로 사회보험 적용 대상으로 확대하는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사각지대에 남아 있는 저소득 일용근로자, 특수고용형태근로종사자, 영세 자영업자 중심의 사각지대가 상존하고 있으며, 4차 산업혁명 시대로의 급격한 변화에 따른 기술혁신 과정에서 더욱 확산되고 있는 플랫폼 노동 등 비정형 근로자에 대한 적용 가능성 및 사각지대 문제로 인해 사회보험의 포괄성 및 보장성 측면에 대한 근본적 문제제기와 함께 전통적 사회보장제도의 핵심 축인 사회보험 무용론 또는 폐지론 등 급진적인 주장까지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근로장려세제 운영 과정에 구축된 소득 파악 인프라와 일용 근로소득 자료를 활용한 사회보험료 지원과 사각지대 해소 노력에도 불구하고, 기존 특수고용형태근로종사자와 함께 최근 증가하는 비정형 플랫폼 노동으로 인한 새로운 사각지대 문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사회보험 적용 기준 중 근로일수와 근로시간 기준을 폐지하고, 단 주기의 실시간 소득 파악(RTI) 시스템을 기반으로 소득 발생 중심의 사회보험료 징수체계와 직접 환급 방식을 통한 사회보험 운영 패러다임의 혁신적 개편 방안을 제안한다.

다.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RTI 기반 사회보험 운영 패러다임 혁신적 개편 방안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혁신적 사회보험 운영 패러다임 개편 방안은 그림과 같이 5가지 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소득 파악과 사회보험료 부과 및 지원시스템과 데이터 주도로 동시에 추진되어야 한다.

[그림 4-2]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사회보험 운영 패러다임 혁신적 개편 방안



데이터 주도의 사회보험 운영 패러다임 개편 방안의 정책 목표는 불안정 고용형태의 저소득 근로자 및 영세 자영업자에게 대한 현행 사회보험 사각지대 문제를 획기적으로 해소함으로써 전통적인 사회안전망인 사회보험의 포용성 및 보장성을 제고하고,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미래 노동시장 및 사회경제적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혁신적인 사회보험 운영체계 구축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함께 추진되어야 하는 5가지 개편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는 사회보험법 근로자 제외 조항(근로일수/시간) 기준을 개정하여 이를 폐지하는 것이다. 현재 이러한 기준으로 인해 비정형 근로형태 때문이든 사회보험 회피를 위한 허위신고 때문이든 어떠한 이유로든 사

회보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불안정 근로자를 제외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근로형태별로 소득이 발생하는 것을 기준으로 근로자로서 인정하기 위한 법적 기준을 개선하는 것이다. 1개월간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이거나 근로시간이 월 60시간 이상인 경우 사업장가입자로 사업주에게 신고 의무가 있지만, 국세청 일용근로소득 신고 자료에도 불구하고 월 7일 이하 근로일수 또는 월 60시간 미만 근로시간을 이유로 사업장가입자로 신고하지 않는 부적정 사례들로 인해 신규 가입 확대에 한계가 나타나고 있으며, 사회보험 사각지대발생으로 근로자들에게는 오히려 더 많은 부담이 발생하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것이다.

요컨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근로장려세제 도입 이후 지난 10년 동안 일용근로소득지급조서 제출에 의한 소득신고 등 소득 파악 강화 및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확대에도 불구하고 신규 사회보험 가입 및 사회보험료 지원을 통한 사각지대 해소에 실패한 근본적인 원인을 혁신해야 한다.

이러한 내용은 결국 두 번째 개편 사항인 소득 중심의 사회보험료 부과로 패러다임 전환을 추진하는 것과 연결된다. 이것은 자격에서 소득 중심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것이며 일부에서는 소득 보험으로의 개편으로 표현되기도 한다. 그러나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부과한다는 과세의 기본원리처럼 경제활동을 기반으로 자격과 상관없이 소득이 발생하는 모든 경우에 사회보험이 적용되고 보험료가 부과되는 것은 기본 원리에 충실하자는 것이다.

핵심적 내용은 사회보험의 원리인 근로·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사회보험 가입 및 사회보험료 부과 원칙을 재정립하고, 사회보험 자격 및 사회보험료 부과 기반 소득 기준을 국세청의 근로소득지급조서(상시·일용근로소득 포함) 자료 및 종합소득 중 근로·사업소득에 대한 신고 자료

로 일원화하여 근로장려세제의 운영과 연계하여 파악된 소득신고 정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상시 및 일용근로소득 신고시점과 사회보험 가입 및 보험료 지원의 시차 문제 해결을 위하여 영국에서 사회보험 징수 및 저소득층 소득지원제도인 ‘Universal Credit’의 운영체계 개선을 목적으로 2013년 4월부터 도입했던 RTI시스템을 도입하여 소득 파악 정보 연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 이것이 본 연구에서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핵심 기술을 사회안전망에 활용하여 데이터 주도의 혁신적 운영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세 번째 개편 사항이다. 영국의 RTI PAYE 시스템은 유니버설 크레딧(Universal Credit) 시행과 유사한 시점에 도입된 실시간 소득 파악 시스템으로 영국 국세청(HMRC)은 노동시장의 변화에 따른 비정형 근로형태의 증가, 한 가지 이상의 단기 일자리를 가진 근로자의 증가 등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기존 시스템을 개편하여 RTI 시스템을 도입하였다. 이를 위해 사업주는 과거 1개월 또는 그 이상의 주기에 따라 연말 등 정기적인 시점에 소득세와 사회보험료 부과를 위한 임금지급 신고를 수행한 반면, RTI 시스템 도입에 따라 이를 기반으로 하여 주기에 상관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지급 직전에 시스템을 통해 임금과 다양한 필수 정보들을 제출해야 하는 의무를 부과하였다(HMRC, 2012).

이것은 마치 우리나라에서 근로장려세제 도입을 위해서 일용근로소득 지급조서 제출을 확대하거나 대부분의 국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국세청 홈텍스와 같은 시스템을 도입하고 이를 통해 사업주의 종합소득 신고 및 자료 제출, 근로자의 연말정산 등이 진행되는 것처럼 우리나라 역시 발전된 정보기술(IT)을 기반으로 도입 가능한 시스템이다. 우리 사회에서도 기술의 활용을 통해 RTI 시스템의 구축 및 활용이 필요한 이유는, 영국이

도입 목적으로 언급한 것처럼 비정형 플랫폼 노동 등 다양한 노동시장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일자리 대체 및 감소뿐만 아니라 새로운 비정형 근로형태가 확산되고 있으며, 이러한 플랫폼을 기반으로 다양한 정보가 축적되고 있으므로 디지털 플랫폼의 공공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소득 발생 중심의 과세 및 사회보험료 부과 및 징수체계로의 전환을 통해 사각지대를 해소하자는 것이다.

이러한 실시간 소득 파악 정보 구축 및 연계 시스템(Real-time Information for PAYE(Pay As You Earn))은 네 번째 개편 사항의 추진과도 연계되어 있다. 이는 RTI 시스템을 국세청 홈텍스를 확장하여 구축하고 소득 중심의 사회보험 패러다임으로 제도를 개선하는 것과 동시에 소득 파악과 사회보험료 징수 주체를 사회보험공단에서 국세청으로 통합 이관하는 징수 패러다임 전환을 검토하는 것이다. 이것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근로장려세제 도입과 함께 추진된 바 있는 사회보험료 통합징수 업무의 국세청 이관을 재추진하는 것으로 근로장려세제 등과 연계한 소득 파악 정보를 기반으로 사회보험 가입 및 사회보험료 부과 징수,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운영을 통합하여 일원화하는 방안이다. 이를 통해 사회보험 및 공공부조 등 기존의 사회안전망 운영체계의 혁신적 재구조화에 기여하고, RTI 시스템을 기반으로 소득 파악을 강화하여 정부 및 모든 공공영역에서 실시간 소득 파악 데이터 연계 및 활용 체계 구축을 통해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뿐만 아니라 행복e음 등 자산조사 기반 복지정책에 여전히 존재하는 근로소득 파악도 동시에 획기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사회안전망 운영의 정확성 및 포용성을 제고하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개편 사항은 근로자 제외 기준에 따라 사각지대

에 놓여 있던 저소득 근로자 및 이들을 고용한 영세 자영업자 대상으로 RTI 시스템을 기반으로 부과되는 보험료 환급 방식을 통해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사회보험료 지원 방식으로 운영 패러다임 개편을 추진하는 것이다. 그리고 보험료 지원수준의 확대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신규 부담하게 되는 사회보험료 수준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전환하고, 사회보험 가입에 따른 기대효과 및 편익 관련 세부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사각지대와 보험료 부담을 동시에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다.

특히 사회보험 가입 대상 확대 과정에서 불안정 근로 형태에 대한 적용 기준에 있어서 제도적으로 사각지대 발생 가능성이 존재하는 근로일수 및 시간 등 근로자 제외 기준을 완전하게 폐지하는 동시에 이들에 대해 소득 중심의 보험료 부과로 발생하는 신규 사회보험료 지원을 강화할 수 있도록 운영체계를 혁신적으로 개편하고 지원 대상 및 지원수준을 대폭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저소득 비정형 근로자는 현재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지역가입자로 사회보험료 부담이 증가하는 문제를 안고 있으므로, 이를 해결함과 동시에 근로자 및 영세 사업주에 대한 신규 사회보험료 지원 확대와 연계하여 사회보험료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인식을 확산하고 체감할 수 있도록 개편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신규 가입에 따라 사업주나 근로자 모두가 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더라도 정부의 지원을 통해 실질적으로 대부분 지원 또는 환급받고 있으므로 추가 부담이 크게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을 인식 및 체감할 수 있도록 운영 방식을 개편하는 것이 중요하다.

구체적으로, 사회보험료 징수와 사회보험료 지원 운영 방식 개편에 대한 연계를 통해 전월 납부한 보험료에 대한 지원 비율 적용에 따른 사회보험료 지원금을 다음 달 보험료에서 차감하고 부과하는 현행 방식을 전환하여, 국세청 소득신고 자료를 기반으로 사업주가 소득세와 함께 원천

징수하고 사업주와 근로자의 사회보험료 납부액 및 지원수준을 운영주체가 산출하여 분기 또는 월 단위로 단축되는 주기마다 가입자에게 직접적으로 환급하는 방식을 도입할 수 있다. 사업장의 휴·폐업의 경우도 근로자 개인에게 직접 지원이 가능하며 급증하고 있는 플랫폼 노동 등 새로운 형태의 비정형 근로자의 경우 해당 플랫폼 관리자 시스템과 RTI 시스템의 연계를 통한 사회보험 가입 및 징수, 환급 방식의 지원체계를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플랫폼 운영자와 근로자 사이에 누가 얼마나 부담하며 어떠한 방식으로 보험료를 납부하고 환급받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후속 연구를 통해 구체적으로 시행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한편 국세청의 소득신고 자료를 기반으로 연금 크레딧과 유사한 방식으로 사회보험 가입 기간을 명목적으로 반영하고 이를 사회보험 재정에 반영하며, 소득수준에 따라 사회보험료 지원수준을 산정하여 환급하거나 근로장려세제와 연계하는 방식도 고려할 수 있다.

요컨대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사회보험 운영 패러다임의 혁신적 개편 대안은, 사회보험법상 근로자 적용 기준 개정과 더불어 플랫폼 노동에 대한 사회보장제도의 포용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사회보험의 근본적 원리에 충실하도록 소득세와 동일하게 소득 발생 중심으로 사회보험 가입 자격을 적용하고, 기존 일용근로뿐만 아니라 비정형 플랫폼 노동의 임금 또는 소득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RTI)을 구축하여 활용하는 것이다. 그리고 근로자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사회보험료 지원 운영체계 개편과 연계하여 플랫폼 노동 종사자들도 사회보험료 부담이 크지 않도록 지원하면서 소득이 발생할 때마다 어떠한 근로자든지 사업주 또는 플랫폼 관리 기업에서 실시간 신고하고 이를 기반으로 사회보험의 사각지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적용하는 방안이다. 이것은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하여 사각지대 문제를 획기적

으로 해소할 수 있는 혁신적인 사회보험 운영 패러다임 개편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제2절 정책실험 데이터 기반 대안적 소득보장제도로서의 기본소득 도입 가능성 모색

2016년 이후 한국 사회에서 알파고 이후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한 대안적 제도로 기본소득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며, 기본소득은 정치인 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의 관심을 받고 있다. 세계적 차원에서 보면 2016년 1월 세계경제포럼에서 발표된 ‘The Future of Jobs’를 시작으로, 2016년 6월 스위스 기본소득 국민투표, 2017년 시작된 핀란드 기본소득 정책실험 등이 기본소득에 대한 대중적인 관심을 증폭시켰다. 기본소득 실험은 핀란드뿐만 아니라 네덜란드, 스페인, 스코틀랜드, 캐나다, 미국의 비정부기구(NGO) 등에서 시행되거나 논의 중에 있다. 한국에서는 2016년 경기 성남시 청년배당 정책의 시행과 2017년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일부 후보의 기본소득에 대한 언급은 기본소득에 대한 관심과 논의를 확산시키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이전까지의 기본소득 논의와 달리 2016년 이후 기본소득은 이제 구상의 단계를 넘어 실행과 실험을 통한 구체적인 정책 수립의 단계에서 논의되고 있다(김교성 외, 2018). 이와 함께 해외의 기본소득 정책실험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고 있다. 또한 한국에서도 기본소득에 대한 정책적 실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학자들의 이론적 모델 제안(강남훈, 2017; 김교성·백승호·서정희·이승윤, 2018)을 넘어, 일부 정치인과 정당에서 공약으로 제시하는 형태의 정책들과 성남시 청년배당과 경기도에서 예정되어

있는 청년배당 등 기본소득 유사 제도들을 찾아보는 것은 더 이상 어렵지 않다. 그러나 성남시 청년배당을 비롯하여 다양하게 시도되고 있는 기본소득들은 해외의 정책실험과 같은 데이터 기반의 정책 추진과정에 따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실증적 근거들은 축적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성남시 청년배당이나 서울시 청년수당의 경우도 사후적으로 참여자 중심으로 정책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하는 데 그치고 있다. 기본소득 형태의 정책 도입을 통해서 어떠한 효과가 있었는지를 평가할 만한 기초적이고 과학적 조사과정은 생략되어 있고 이를 통해 구축되어야 하는 데이터는 거의 존재하기 않는다. 최근 들어 행정안전부 등에서 정부 혁신의 관점에서 새로운 정책 도입을 통한 정책 혁신이 시도되고 있지만, 비단 기본소득뿐만이 아니라 데이터 구축을 위한 정책실험이나 데이터 주도의 정책 설계는 부족한 상황이다.

따라서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노동시장의 변화와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대안적인 소득보장체계로서 기본소득이 단지 대중적 관심이나 철학적 정당성을 넘어 가까운 미래에 기본생활보장을 위한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대표적 소득보장체계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정책실험을 통한 자료의 축적 과정과 데이터 주도의 평가 및 검증 과정이 필수적이다. 제도의 설계를 보다 면밀하게 구성하여 도입과 지속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정치권의 이슈나 지방정부 차원의 정치적 시도가 아니라 엄밀한 설계를 통한 정책실험과 검증 과정이 필수적이다. 기본소득 정책실험을 통해 대안적 소득보장제도로서 기대한 효과가 발생할 것인지, 왜곡된 결과는 없는지, 우연한 변화는 감지되지 않는지 등에 대한 세심한 관찰과 실험에 기초하여 데이터를 기반으로 기본소득 도입의 근거를 마련하고, 기존의 사회보장체계 내에서 연계 가능성과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선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변화와 새로운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기본소득 도입 필요성을 기초로 혁신적 또는 대안적인 소득보장제도로써 기본소득의 도입 및 연계 가능성 검증을 위해 데이터 주도의 예측과 평가를 가능하게 만들 수 있는 정책실험을 제안하고자 한다. 또한 그동안 주목받았던 해외 정책실험 사례들로부터 시사점을 도출하고 우리 사회에서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전환의 전략으로서 정책실험을 통한 데이터 주도의 기본소득 도입 및 기존 제도와의 연계 가능성 모색을 통해 포용적인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우리 사회의 삶의 안정성 제고를 통해 혁신 역량을 높이는 것이 필요함을 강조하고자 한다.

1. 기본소득의 개념과 논의의 흐름

가. 기본소득의 개념과 주요 속성

기본소득은 매우 단순명료한 제도이지만 그로 인한 다양한 해석이 존재하는 제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소득에 대한 가장 정확한 정의는 기본소득네트워크(BIEN: Basic Income Earth Network)의 정의라 할 수 있다. 기본소득을 ‘자산조사와 근로에 대한 요구 없이 모든 개인에게 무조건 지급되는 주기적 현금’¹⁶⁾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정의에 따르면 기본소득의 속성은 보편성, 무조건성, 개별성, 정기성, 현금지급으로 요약할 수 있으며, 여기에 충분성 원칙을 기본소득의 중요한 속성으로 간주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기본소득을 주장하는 학자들 사이에서도 논쟁거리이다.

16) A basic income is a periodic cash payment unconditionally delivered to all on an individual basis, without means-test or work requirement.
(Basic income Earth Network. 2019)

기본소득 속성에 대한 논쟁은 기본소득 정책실험에서도 발견된다. 세계 각국에서 기본소득이라는 이름으로 실험되고 있는 정책실험을 기본소득으로 볼 것인지의 논쟁이 그것이다. 또한 기본소득의 속성들이 구현되고 있지 않은 실험은 기본소득의 효과를 제대로 측정해 내지 못하기 때문에 증거 기반의 정책실험으로 부적절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기본소득 실현과 실험을 혼동하고 있는 과도한 주장인 경우가 많다. 이러한 혼란을 피하기 위해서 우선 기본소득의 속성들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특히 기본소득의 핵심적 속성인 보편성과 무조건성에 대한 이해는 중요하다. 여기서는 De Wispelaere(2015)를 기초로 충분성의 원칙까지 포함하여 3가지 기본소득의 속성을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기본소득은 보편성을 특징으로 한다. 보편성은 특정 정책에 포괄되는 인구 범위와 관련된다. 일반적으로 보편적 정책은 모두를 대상으로 한다, 반면에 선별적 정책은 일부 인구집단을 수급자에서 제외한다. 시민권자가 아닌 경우는 가장 보편적인 제도에서도 종종 제외되기도 한다. 그리고 선별적인 제도에서 대상 집단 내에서 일부 개인이나 집단의 자격을 제한하기 위해 선별 기준을 추가하기도 한다(Van Parijs, 2004). 보편주의와 선별성이 상호 배타적이다.

그러나 선별적 정책은 정책의 표적화(targeting)와 다르다. 비록 모든 선별적 정책은 반드시 표적화를 하지만, 보편주의 내의 표적화(targeting within universalism)도 존재한다(Skocpol, 1991). 예를 들어, 어떤 정책이 차등적인(disproportionately) 급여체계를 가지는 형태로 설계될 수도 있다. 즉, 보편적인 급여를 제공할 때, 저소득층에게 더 관대하게 지원하는 방식으로 정책이 설계될 수 있다.

또한 보편주의 내에서 동일한 급여가 지급되더라도 어떤 집단에게 더

많은 혜택이 가도록 정책이 표적화될 수 있다. 모두에게 동일한 수준의 급여가 지급되지만 부자보다는 가난한 사람에게 그 급여가 더 유용한 기본소득의 경우가 예이다(Van Parijs, 2004, p. 13). 흥미롭게도 표적화는 차등적 할당을 통해 정책의 의도(policy intention) 수준에서 실현될 수도 있고, 규칙은 동일하지만 효과는 다른, 정책의 결과(policy outcome) 수준에서 실현될 수도 있다(Van Lancker and Van Mechelen, 2015).

기본소득 옹호자들은 완전한 보편적 기본소득을 실현하고자 할 때 점진적인 접근법을 선호한다(김교성 외, 2018; Jordan, 2012). 아동 수당, 기초연금 또는 안식년 계좌와 같은 특정 영역에서 기본소득과 같은 형태의 정책을 수립하고 점차 보편적인 제도로 확장하는 것이 그 예이다(Offe, 2001; Frankel and Mulvale, 2014). 이러한 접근은 명목적 보편주의에 과도하게 집착함으로써 실질적으로 보편적 기본소득의 달성을 어렵게 하는 오류를 피하기 위한 전략이다.

둘째, 기본소득은 무조건성을 특징으로 한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 현재 사회정책의 대부분에 존재하는 조건 부과의 사례를 설명하는 것이 유용하다. 조건 부과란 특정 정책에 내재한 조건으로, 서비스에 대한 자격을 제한 할수 있는 정도를 의미한다. 대부분의 복지정책에 수급자에게는 자격을 얻거나 유지하기 위해 충족시켜야 하는 다양한 유형의 조건이 부과된다. 기본소득은 무조건적이기 때문에 제도의 포괄성을 침해하지 않는 조건들을 최소한으로 부과하는 것만을 허용한다. 외형상으로는 포괄성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조건 부과의 예는 앳킨슨(Atkinson)(1996, 2014)의 참여소득 제안이다. 앳킨슨은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참여 요건(돌봄, 자원봉사 및 교육활동 등)을 부과함으로써 정치적인 저항을 피하는 계획을 제안하였다.

조건 부과는 다양한 방식으로 구현된다(Dowding, De Wispelaere & White, 2003). Clasen과 Clegg(2007)는 정책의 조건 부과를 3가지로 분류한다. 첫 번째는 범주 조건(conditions of category)이다. 이는 사회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집단(social support group)에 속해 있는지와 관련된다. 두 번째는 환경 조건(conditions of circumstance)이다. 환경 조건은 어떤 제도의 적격성(eligibility)이나 자격(entitlement)에 대한 규정이다. 환경 조건에는 자산조사에서 얼마나 많은 소득이나 자산을 공제범위에 포괄할 것인지 같은 조건의 깊이뿐만 아니라, 자산조사에서 자산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규정할 것인지 등과 관련된 조건의 넓이에서 다양한 변형이 존재할 수 있다. 세 번째는 행동 조건(conditions of conduit)이다. 행동 조건이란 특정 제도의 지속적인 지원을 받기 위한 조건으로 규정되는 행동들을 요구하는 것이다.

이러한 조건 부과의 수단이 반드시 공식적일 필요는 없다. 숨겨진 또는 묵시적인 조건 부과가 존재할 수도 있다. 즉, 공식적으로는 동일한 기본 소득이지만 수급자의 행동을 효과적으로 유인할 수 있도록 설계할 수도 있다. 이런 의미에서 행동 조건 기준으로 보면, 보편적 기본소득은 더 조건적일 수 있다. 예를 들어, GDP나 고용률 같은 거시 경제적 성과지표와 연동하여 보편적이고 무조건적인 기본소득을 제도화한다고 가정하면, 공식 고용통계가 일정 수준 이하로 낮아지거나 생산성이 특정 수준 이하로 떨어질 때 기본소득 급여수준을 이와 연동하여 감소되도록 설계할 수 있다. 이는 사람들이 일하도록 하는 인센티브로 작동할 수 있다. 이런 기본 소득 설계는 공식적으로 기본소득에 직접 조건을 부과하지는 않지만, 경제적으로 서로 다른 상황에 있는 개인이나 집단에 서로 다른 행동유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조건 부과는 프로그램의 배타성 정도에 따라서 협소할 수

도 포괄적일 수도 있다. 예를 들면, EITC는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는 반면, 참여 소득은 더 넓은 범위의 활동을 포괄하기 때문에 광범위한 대상자를 포함한다(Atkinson, 1996). 참여 소득에서의 사회적으로 유용한 활동 조건은 정치적 이유로 보편적 기본소득에서 고려되기도 한다. 정책 결정자들은 무조건적 제도에 대한 충분한 정치적 지지가 없다고 믿기 때문이다. 기본소득을 실현할 때 강력하다고 예상되는 제약이 무엇인지에 따라 전략적으로 기본소득의 단계적 실현을 위한 조건부 기본소득이 선택될 수도 있다.

셋째, 기본소득은 충분성을 특징으로 한다. 보편적인 기본소득의 또 다른 차원은 관대함의 수준, 특히 수급자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수준과 관련이 있다. 엄밀히 말하자면, 보편적 기본 소득은 생계 수준에서 고정될 필요는 없다. 일반적으로 적절한 소득 수준으로 간주되는 기준을 초과하거나 그것에 못 미칠 수도 있다(Van Parijs, 1995). 기본소득은 공유된 부에 대한 배당의 성격을 갖기 때문에 어느 정도가 충분한지는 해당 사회의 정치경제적 맥락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Van Parijs, 1995). 공유된 부의 범위와 수준은 정치경제적 맥락에 따라 다르게 평가될 수 있고 제공 주체의 재정적 역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소득의 기본적 출발점으로 제안되고 있는 충분성의 수준은 ‘평균소득의 50%’, ‘최저생계비’, ‘상대적 빈곤선’(중위소득의 50%)이 일반적이다. 충분한 수준의 기본소득 관대성이 확보되지 못한 경우를 보통 부분(partial) 기본소득이라 명명하기도 한다(김교성 외, 2018, p. 123). 부분 기본소득은 다른 형태의 사회보장제도들로 보완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진보적인 버전의 기본소득과 부분 기본소득을 공적 지원의 유일한 수단으로 대체하여 제안하는 보수적인 기본소득 사이에 존재한다(Van Parijs, 1992, 2001; Van Parijs, Jacquette & Salinas,

2000).

이데올로기적인 입장에 따라 어떤 선택이 가장 바람직한지에 관해서는 의견이 구분된다. 제임스 뷰캐넌(1997), 밀턴 프리드먼(Milton Friedman, 1962) 또는 찰스 머레이(Charles Murray, 2006)와 같은 복지국가 비판론자들은 대부분의 복지프로그램들을 대체하는 기본소득을 지지했다. 반면에 사회민주당과 사회주의자들은 이에 반대하며 부분적인 기본 소득은 항상 다른 형태의 지원에 의해 보완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Van Parijs, 1995; Wright, 2004, 2006).

나. 한국 사회에서 기본소득 논의의 흐름¹⁷⁾

한국에서 기본소득에 대한 관심은 2000년대 초반에 시작하여 2010년 이후에 본격적인 학술 논쟁으로 이어졌다(백승호, 2010). 당시의 기본소득 논쟁은 주로 일부 좌파진영에서 제기되었으며, ‘탈노동, 노동해방’ 관점에서 기본소득을 비판하고 있다(백승호, 2017). 이후 2016년에 기본소득에 대한 학술적, 대중적 관심이 급증하였다(김교성 외, 2018; 김교성, 이지은, 2017). 2016년 1월 ‘성남시 청년배당’ 시행, 7월에 제13차 기본소득네트워크 총회, 알파고와 이세돌 바둑대국이 가져온 인공지능의 충격과 일자리 소멸에 대한 공포 등 다양한 요인이 관심을 높이는 데 작용하였다. 그리고 스위스의 기본소득 국민투표와 세계 각국의 기본소득 아이디어 정책실험들도 기본소득에 대한 관심을 확산시키는 데 기여하였다. 서구 국가들의 기본소득 아이디어 실험은 한국인들의 뇌리에 기본소득을 각인시키기에 충분했다(백승호, 이승윤, 2018).

17) 이 부분은 한국 사회에서의 기본소득 논의의 역사적 흐름에 대해 백승호, 이승윤(2018). 기본소득논쟁 제대로 하기. 한국사회정책, 25(3)의 일부를 재구성함.

2016년 이후의 기본소득 논의의 흐름은 이전과 달리 기본소득의 정책적 실현 가능성을 염두에 둔 논의가 주를 이루었다. 여기에는 2016년 1월 시행된 성남시 청년배당과 2017년 대선 경선과정에서 대통령 후보 지원자들의 기본소득 아이디어 공약이 큰 역할을 했다(김교성 외, 2018). 기본소득이 이제 구상의 수준에서 구체적 정책 실행의 단계로 구체화될 수 있다는 공감대가 확대된 것이다.

기본소득의 실행과 관련된 논쟁은 사회정책 학계를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주로 기존의 사회보장체계의 보완재로서 기본소득이 필요하다는 주장(서정희, 백승호, 2017; 이승윤, 이정아, 백승호, 2016)과 기본소득보다는 기존 사회보장제도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양재진, 2018; 김병인, 2016)이 대립하였다. 이러한 논쟁은 기본소득이 도입되었을 때 사회보장제도를 어떻게 정합적으로 재구성할지(김교성 외, 2018)에 대한 논의에서부터 기본소득 이외의 대안으로 소득보험 등을 제안(장지연, 2017)하는 논의에 이르기까지, 사회보장제도를 어떻게 재구성할지에 대한 다양한 논의들을 활성화하는 데 기여하였다(백승호, 이승윤, 2018). 이렇게 기본소득 논쟁이 기존 사회보장제도의 재편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구체적인 대안으로서 복지제도들을 논의의 공간으로 이끌어 내는 긍정적인 역할을 했던 부분도 있었다.

그러나 기본소득 논의가 소모적인 방향으로 전개되기도 하였다. 그 이유는 기본소득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측면도 있었지만 추상적인 수준에서 제기된 기본소득에 대한 우려들을 증거 기반의 정책실험을 통해 검증할 기회를 갖지 못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성남시가 청년배당이라는 이름으로 기본소득과 가장 유사한 정책을 시행하기도 했지만, 애초 정교한 증거 기반 정책 평가까지 염두에 둔 정책 시행이 아니었기 때문에, 기본소득이 가져올 사회변화를 평가할 만한 데이터를 구축하지 못했다. 사후적으로

청년배당이 청년들의 삶의 만족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 조사가 진행되긴 했지만, 정책 시행 이전에 과학적으로 설계된 사전-사후평가가 아니었기 때문에 데이터 주도의 정책실험으로서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었다.

정책 혁신은 기존 시스템에 대한 올바른 평가와 진단에서 나와야하며 실현 가능한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그리고 실현 가능한 대안에 대한 정책실험을 통해 증거 기반 자료들을 수집 평가하는 과정을 거치고 현실을 반영하는 가장 적합하고 실현 가능한 정책대안을 구체화하는 과정이 필수적이다. 한국 사회에서 기본소득 도입 가능성의 모색이 필요한 이유를 살펴보고, 기본소득 정책실험과 관련된 사례들로부터 기본소득 정책실험을 통한 데이터 주도의 대안적 소득보장체계의 모색을 위한 방향을 제시한다.

2. 기본소득 도입의 필요성¹⁸⁾

기본소득 도입의 필요성은 크게 세 가지 관점으로 요약할 수 있다. 첫 번째는 사회보험 운영 패러다임의 혁신적 개편 방안과 관련하여 앞서 살펴본 비정형 플랫폼 노동의 증가 현상과 같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노동시장의 변화에 대응하는 데 한계를 안고 있는 전통적인 사회보장제도의 부정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능적 보완재로서의 필요성이다. 두 번째는 비정형 플랫폼 노동의 증가를 넘어 최근 들어 기본소득이 대중적인 관심을 받게 된 미래 사회의 노동시장 변화에 대한 전망과 같이,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무인화와 자동화 등으로 인한 일자리 대체가 가져올 노동 없는 미래 사회의 대안적 소득보장체계로서 기본소득의 필요성이다. 마치

18) 기본소득 도입 필요성 부분은 백승호, 이승윤(2018). 기본소득논쟁 제대로 하기. 한국사회정책, 25(3)의 일부를 재구성함.

막으로 세 번째는 자본주의 축적 방식의 근본적 변화로 인해 4차 산업혁명과 함께 더욱 심화되고 있는 부의 불평등과 양극화를 해소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공유 부의 배당으로서 기본소득의 도입 필요성이다.

가. 사회보장체계의 부정합성 해소를 위한 보완적 제도로써 기본소득 도입의 필요성

전통적 산업사회에서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지탱해 왔던 표준적인 고용관계가 해체되고 새로운 고용형태들이 그 자리를 차지해 왔다는 사실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백승호, 2014; Kalleberg, 2000, 2009; Bosch, 2004). 표준적 고용관계의 해체와 관련해서는 서비스 경제로의 산업구조 변화,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기술 진보, 노조 조직률 하락 등 다양한 원인들이 주목받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들 중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지점은 기업조직의 변화이다. 시장의 변화는 기업조직의 변화를 가져오고, 이러한 변화에 기업은 수동적으로 대처하기보다는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상품의 생산 및 유통을 조율한다. 이 과정에서 기업조직은 재구조화되고, 직접적으로 노동시장에서의 고용관계, 기업 간 관계 등의 변화를 추구한다. 이러한 변화는 결국 노동시장의 고용관계에 기초하고 있는 사회보장제도에도 영향을 미친다.

그렇다면, 기업조직은 어떻게 변화해 왔는가? Weil(2015)은 기업조직 변화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산업혁명 이후 19세기 중반까지 소규모 기업들의 다단계 시장거래가 중심이었고, 이 시기 상품거래는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이 지배적이었다. 이어서 19세기 중반 이후 20세기까지 시장거래가 기업으로 내부화되는 단계로, 대기업 중심의 수직계열화가 생성되고, 대기업에 속한 노동자들의 노동력 재생산을 원활하게 하기 위

한 사회보험 중심의 복지제도들이 만들어졌다. 마지막으로 1980년대 이후 이러한 대기업 중심의 기업의 내부거래 방식은 붕괴되고, 기업의 내부 조직이 외부화되는 단계로 접어들게 되었다.

Weil(2015)은 내부의 기업조직이 외부화되는 단계를 일터 균열로 명명하였다. 일터 균열의 원인은 세계화로 인한 경쟁의 심화, 산업구조의 변화 등 노동시장 환경 변화에 직면한 기업들에 투자자와 금융자본이 핵심 역량에 집중하도록 요구하면서 비롯되었다. 이러한 자본시장의 요구는 자본시장의 작동 방식과 기업 평가 기준의 변화를 가져왔고, 기업은 회사의 경계선 자체를 재구조화했다. 기술 혁신은 이 과정에서 거래비용을 줄일 수 있게 함으로써 이전에 기업 내부에서 담당했던 실질적 업무의 상당부분을 외부화하여 털어내는 것이 가능해지면서 일터 균열은 심화되었다. 공룡기업은 해체되고, 기업 운영에 있어 지엽적인 활동들은 외부로 이전되었으며, 심지어 기업들은 핵심 역량에 속하던 활동들까지 과감하게 외부화하고 있다(Weil, 2015, pp. 68-80).

이러한 일터 균열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났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프랜차이즈이다. 프랜차이즈는 비즈니스 모델을 복제하여 다른 업체에 제공하지만, 통제는 본사가 맡는 조직형태이다. 엄격한 프랜차이즈 계약을 통해 본사는 외부업체를 통제한다(Weil, 2015, pp. 44-45). 도급(하청) 및 3자 경영도 지배적인 유형 중 하나이다. 3자 경영은 기업이 핵심 역량에만 집중하고 나머지는 도급 등의 형태로 제3자에 맡기는 형태가 보통이지만, 외부 경영진이 핵심기능까지 관장하기도 한다(Weil, 2015, p. 44). 여기에 일터 균열의 작동을 가능하게 해주는 공급체인 시스템이라는 조직형태도 중요하게 작동한다. 공급체인은 부품과 조립품을 소매업체나 제조업체에 조달하는 역할을 한다(Weil, 2015, p. 223).

이와 같은 일터의 균열은 노동조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침으로써 노

동시장의 변화와 균열을 가져온다. 근로기준 적용이 어려워지고, 고용이 여러 곳으로 분산되면서 작업장에서의 조율이 어려워진다. 결국 산업재해로 이어지는 위험의 외주화가 일상화되고, 잉여수익은 노동자에게서 투자자에게로 전이됨으로써 불평등이 심화된다고(Weil, 2015, p. 34). 사용자와 노동자 사이의 고용계약관계는 상호 독립적인 시장거래로 전환되며, 이를 통해 고용주는 실업보험, 산재보험 등의 사회적 지불의무를 회피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고용관계를 독립 계약관계로 전환함으로써 산업재해에 대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만들고, 그 결과는 불안정 노동의 일상화로 나타나고 있다.

일터와 노동의 균열이라는 노동시장 변화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등 지능정보기술 발전을 기반으로 최근에는 플랫폼 경제¹⁹⁾가 주목받고 있다. 플랫폼은 재화와 서비스가 거래되는 온라인상의 기반을 의미한다.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과 분배, 소비뿐만 아니라 고용계약관계 등의 경제활동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주문을 기반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경제시스템을 ‘플랫폼 경제(platform economy)’라 한다. 플랫폼 경제에서의 가치는 주로 빅데이터에 의해 창출되며 ‘데이터 경제’라 불리기도 한다. 이러한 플랫폼 노동 중심의 경제를 ‘긱 경제(gig economy)’²⁰⁾라고도 한다.

19) 플랫폼은 원래 물리적 구조물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기차역 플랫폼, 아이폰, 네트워크 등 하드웨어 플랫폼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최근 플랫폼의 개념은 소프트웨어 플랫폼, 특정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확장되어 사용되고 있다. 소프트웨어 플랫폼은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즈, 애플의 iOS, 구글의 안드로이드와 같이 애플리케이션들이 작동하는 기반이 되는 운영체제를 의미한다. 그리고 서비스 플랫폼은 소프트웨어 플랫폼에서 작동하던 특정 애플리케이션이 플랫폼으로 진화하여 자체 생태계를 구축하고 상품의 수요와 공급을 매개하는 시장기능을 수행한다(이성춘, 2011, p. 3).

20) 산업현장에서 필요에 따라 사람을 구해 임시로 계약을 맺고 일을 맡기는 형태의 경제 방식을 의미한다. 노동자 입장에서는 어딘가에 고용되어 있지 않고 필요할 때 일시적으로 일을 한다. 모바일 시대에 접어들면서 이런 형태의 임시직이 급증하고 있다. 택시는 물론 주차대행이나 쇼핑도우미 가사도우미 안마사 요리사까지도 모바일로 호출할 수 있는데, 이들에 의해 경제가 주도되는 것을 의미한다. 원래 ‘긱’이란 용어는 1920년대 미

플랫폼 경제에서 기업은 균열된 일터에서의 하청기업, 프랜차이즈 기업과는 또 다른 속성을 가지고 있다. 고용관계 역시 전혀 다른 방식으로 구성되는데, 플랫폼 경제의 고용관계는 기존 산업노동관계와 구분하여 ‘디지털 고용관계(박제성, 2016)’로 불리며, 플랫폼에서 상품처럼 거래되는 노동이라는 의미에서 ‘플랫폼 노동’으로 불린다(박제성, 2016). 플랫폼을 통해서 노동력이 거래되면서 모호한 고용관계(이주희, 정성진, 안민영, 유은경, 2015), 가짜 자영업관계(서정희, 박경하, 2016) 등 노동 방식에 또 다른 근본적인 변화가 생기고 있다.

이러한 노동 방식의 변화는 임금노동 계약관계의 해체를 의미한다. 결국 플랫폼 경제의 새로운 노동 방식은 임노동계약 방식을 전제로 만들어졌던 전통적인 사회보험 중심의 복지국가와의 제도적 부정합 관계를 강화시키고 있다. 사회보험에 가입되지 못하여 사각지대에 놓이거나 사회보험에 포괄된다고 하더라도 짧은 기여 기간 및 낮은 보험료 기여로 인해서 충분한 수준의 사회보험 급여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사회보험의 전통적인 소득보장 기능이 이와 같은 사각지대 문제로 약화되고 있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사회보험 중심의 복지 패러다임의 전환이 요구되고 있다. 그 중심에 기존 사회보장제도의 보완재로서 기본소득의 필요성이 부각되는 것이다.

국 재즈 공연장 주변에서 연주자를 섭외하여 짧은 시간에 공연에 투입한 데서 비롯되어 하룻밤 계약으로 연주한다는 뜻이 담겨 있다. 이후 1인 자영업자로 기업과 단기간 계약을 맺고 일한다는 의미로 확장되었다. 미국을 중심으로 ‘긱 경제’가 확산되면서 전통적 개념의 임금체계가 무너지고 근로자들에게 소득을 바로 현금으로 지급하는 ‘인스턴트(instant) 급여’ 방식이 확산되고 있다(한경 경제용어사전, 2019).

나.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노동 없는 미래 사회의 대안적인 소득보장제도로써 기본소득 도입의 필요성

다음으로 기본소득 도입의 검토가 필요한 또 다른 이유는, 플랫폼 노동을 넘어서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무인화와 자동화 등으로 인해 나타날 노동 없는 미래 사회의 대안적 소득보장제도의 필요성이다. 기본소득 중심의 대안적 소득보장체계는 노동 없는 미래에 유효한 대안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 증가하는 플랫폼 노동의 경우, 4차 산업혁명의 지능정보기술을 바탕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장기적 관점에서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전망으로서 미래 사회의 변화 시나리오에 가장 많이 제시되는 것처럼 자동화 가능성이 높은 직업군이 대부분이다. 또한 최근 빠르게 증가하는 무인화 경향은 일자리의 감소와 대체를 가속화시킴으로써 노동 없는 미래를 앞당기고 있다. 무인자동차가 일반화되면 운전기사는 줄어들 것이고, 청소 로봇, 드론 배송 등이 일반화되면 가사서비스나 택배 또는 배달서비스 플랫폼 노동 역시 감소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기존의 사회보장체계 개편을 통해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사회안전망의 포용성을 강화시키는 방안은 과도기적으로 유용한 전략으로 고려될 수 있지만, 노동 없는 미래에 대한 대안으로서 기본소득 도입은 필요하며 도입 가능성과 기존 사회안전망과의 연계 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필연적이다.

노동 없는 미래의 모습은 사람이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자유의지로 노동을 선택할 수 있는 미래를 의미한다. 기본소득은 생존을 위해 노동을 선택해야 하는 산업사회의 노동에서 벗어나는 의미에서 탈노동(de-labourization) 사회 또는 생존 노동에서 벗어나 다양한 활동을 가능하게 한다는 의미에서 다중활동(multi-action), 포스트 노동(post-labour) 사회를 지향한다. 기본소득이 지향하는 사회는 착취에 기반한 임

금노동을 선택하는 것에 자율성을 부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자신이 원하는 다중활동 기회를 보장하는 사회이다. 다중활동이라 함은 생존을 위한 노동(labour)을 넘어, 인간 실존의 조건을 확인하게 해주는 다양한 일(work)과 행위(activity)를 포괄한다. 여기에는 스타트업과 같은 혁신적인 도전과 자원봉사 활동, 정치 활동, 환경보호 활동 등이 포함된다. 이는 본 연구에서 강조하는 포용적 사회안전망이 우리 삶의 안정을 제공함으로써 자유로운 선택과 혁신의 역량과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논리와 일맥상통한다.

이러한 사회의 모습은 아주 먼 미래일 수도 있다. 그러나 2017년 기업 가치 기준으로 세계 10대 기업 중 7개가 플랫폼 기업이었고, 2016년 유니콘 기업 10개 중에 7개가 플랫폼 기업일 정도로 지난 10년간의 변화는 완전히 새로운 변화가 진행되어 왔다. 매사추세츠공과대학(MIT)의 브린 올프슨과 맥아피 교수는 ‘제2의 기계시대(The Second Machine Age)’라는 책에서 미국에서 1940년대 고용성장이 40%에 달했다면, 2000년대에는 -1%였음을 보여 주었으며, 생산성이 증가하면 고용도 증가하던 산업사회의 패턴이 2000년대 이후 변화되고 있음을 ‘탈동조화’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미국만의 현상이 아니라 자본주의의 거대한 전환이며 4차 산업혁명과 더불어 새로운 사회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거대한 자본주의 변화라는 맥락에서 플랫폼 노동을 바라볼 필요가 있으며, 앞서 제시한 사회보험 운영 패러다임의 혁신적 개편 등 사회보장의 단기적인 개혁 전략뿐만 아니라 기본소득 도입 같은 중장기적 전략도 함께 고려될 필요가 있다.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여전히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정규직 노동과 비정규직 노동에 대한 보호를 위한 기존의 사회보장체계 개혁과 함께, 새로운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제도로 기본소

득을 포함하여 복지국가를 재구성하기 위한 전략들에 대한 고민이 동시에 필요한 시점이다.

다. 공유 부의 배당을 통한 불평등 해소와 분배정의 실현을 위한 기본소득 도입의 필요성

앞서 살펴본 기본소득 도입 필요성에 대한 두 가지 논리적 근거가 기업구조 변화 및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노동시장의 변화와 관련된 것이었다면 세 번째는 심화되는 양극화와 부의 불평등 심화에 대한 분배정의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양극화와 불평등 역시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되는데, 원래 모두의 것이었던 인터넷, 축적된 지식 그리고 모두에 의해 생산되고 있는 빅데이터를 이용하여 부가 축적되고 있지만, 정의롭게 분배되고 있지 못해 발생하는 불평등의 문제 또한 심도 있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생산된 공동의 것으로 돌아가야 하는 수익(공유 부)을 모두에게 평등하게 배당하는 것에서 사회정의의 실현이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기본소득은 플랫폼 노동의 불안정성 해소와 대안적 소득보장제도라는 기능적인 측면에서만뿐만 아니라, 공유 부 배당을 통해 불평등을 해소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한다는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다.

기능적이고 실용적 관점을 넘어, 분배정의의 관점에서 기본소득의 필요성은 더욱 중요하다. 현시점에서 분배정의로서의 기본소득이 중요한 이유는 자본주의에서 부를 창출하는 방식이 변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전통적 산업사회에서 노동력은 생산의 핵심이고, 생산적 노동력은 가시적이었으며, 임금은 생산에 투입된 노동시간에 매겨진 가격이었다. 공정한 임금의 분배는 사회정의의 핵심이었기 때문에, 노동시장에서는 임금을

중심으로 분배의 갈등이 존재해왔다. 이러한 시장에서의 불공정한 분배는 복지국가의 재분배 장치들을 통해 보완되었다. 노동자들은 노동조합을 만들어 시장에서의 분배와 국가에 의한 재분배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백승호, 이승윤, 2018).

그러나 현대 자본주의에서는 가시적이지도 않고 측정 가능하지도 않은 노동에 의해 가치가 창출되는 경향이 강화되고 있다. 자유노동, 정동노동 등이 그것이다(이항우, 2017). 임금노동계약관계를 맺은 노동자들에 의해서뿐만 아니라, 자유노동이라 불리는 시민들의 활동들과 그 활동을 통해 축적된 빅데이터가 가치 창출의 핵심적 근원이다. 2018년 11월 현재 애플의 시가총액은 1120조, 마이크로소프트는 911조, 아마존은 910조 원에 달한다. 한국의 2017년 GDP는 약 1700조 원이다. 한국 사회의 GDP에 근접한 시가총액을 보여 주는 애플의 고용 인원은 고작해야 10여만 명이다.

이들 기업은 노동력 기반으로 생산성을 높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인터넷이라는 가상의 공유지에서 역사적으로 축적된 지식과 기술을 기반으로 디자인을 혁신한다든지 많은 사람의 활동 과정에서 축적된 빅데이터를 통해 가치를 생산하고 있다. 이렇게 방대한 지식과 정보를 독점한 플랫폼 기업들에 의한 가치 창출의 비중이 커져 가고 있다. 지식기반 경제론이나 인지자본주의론에서는 일반지성으로 표현되는 보통 사람들의 소비활동, 여가활동, 생산활동 등 다양한 활동들에 의해 지식과 정보가 구축되고 빅데이터화됨으로써 가치가 창출되고 있다고 본다(안현효, 2012). 기업들은 사람들이 모이고 활동하는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으로 빅데이터를 축적하고, 이를 통해 지대를 추구하고 있다(강남훈, 2017). 하지만 이렇게 생산된 지대는 현재 지대 형성에 기여한 일반 지성에게 분배되기 보다는 데이터를 소유한 기업들이 독점하고 있다. 이러한 지대는 시간이

갈수록 더욱 커지는 경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플랫폼 기업들이 지대를 독점하고 있는 것이다.

전통적 산업사회에서는 시장에서 가시적인 노동력에 의해 생산된 자원의 분배를 통해 분배정의가 달성되었다면, 현대 인지자본주의에서는 생산이 자유노동을 통한 빅데이터와 지식과 기술이 결합되는 노동력 절감을 통해 이루어지므로, 생산된 부에 대한 분배의 상대를 특정하기 어렵다. 결국 지적 자산을 통한 생산의 몫은 자본에 독점되는 경향을 보이며, 전통적인 산업사회의 분배정의와 현대 인지자본주의의 분배정의가 달라야 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현대 자본주의에서 분배정의를 달성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기되는 방법이 기본소득이다. 비가시적 자유노동, 인간의 다양한 활동들에 의해 사회적으로 창출되는 공유 부를 나누는 것이 기본소득이 추구하는 분배정의의 핵심이다. 기본소득의 도입이 단기간에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분배정의의 관점으로부터 기본소득 도입에 대한 논의 자체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현대 사회의 불평등과 양극화 문제에 대한 해결을 위해서는 어떤 제도가 사회보장제도의 ‘기능’을 충분히 할 수 있는지, 예산제약을 전제한 상태에서 어떠한 제도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하는지 등과 관련된 기능적이고 실용적인 논쟁과 더불어, 불공정한 분배정의의 문제를 시정할 방법이 무엇인지를 논의하는 것도 필요하다.

3. 기본소득 도입 가능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을 위한 데이터 주도의 정책실험의 필요성

앞서 기본소득의 필요성을 사회보장체계의 보완 또는 대안으로서 기능적 측면과 공유 부의 배당을 통한 분배정의의 실현이라는 차원에서 제시

하였다. 기본소득은 미래 사회의 변화 과정들을 고려할 때 필연적이며, 분배정의의 관점에서도 정당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소득을 짧은 시간에 도입하는 데엔 현실적 제약이 많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기본소득의 도입 가능성과 타당성을 검토하고 기존 사회안전망과의 연계 가능성을 검토하여 도입을 결정하기 위해서, 기본소득의 도입에 따른 다양한 변화들을 예측하고 문제를 최소화하며 장점을 극대화하기 위한 검증과 준비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한 혁신적 사회안전망 개편을 통한 포용성 제고를 강조함에 있어서 기본소득 도입 가능성 검토 또는 중장기적인 도입은 포용적 사회안전망 개편뿐만 아니라, 이와 동시에 데이터 주도의 혁신적 정책실험을 통한 데이터 축적의 시간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제안한다. 현재 완전한 형태의 기본소득이 실현되고 있는 국가는 없으며, 한국 사회에서 기본소득 도입은 데이터 축적에 의해 가능하며, 이를 위해 혁신적인 정책실험 과정을 통해 데이터를 축적하고 이러한 데이터 주도로 중장기적으로 도입 가능성 및 기존 제도와의 연계 가능성을 모색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현재 완전한 형태의 기본소득이 도입되어 실현되고 있는 국가는 없으며, 4차 산업혁명을 배경으로 대중적인 관심을 받도록 기여한 외국의 기본소득 정책실험 사례들 중에서도 엄격한 의미의 기본소득 실험이 진행되고 있는 사례는 없다. 대부분의 실험은 완전한 이상적 기본소득을 실험하기보다는 기본소득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의 속성들 중 일부의 작동 방식을 중심으로 설계하거나 기존 사회안전망 개선과 변형 또는 기존 사회안전망과의 비교나 연계 가능성 모색을 위한 형태로 설계되어 시행되고 있다.

각 나라마다 산업화와 복지국가 발전 수준이 다르고, 분배와 노동 윤리

에 대한 규범도 상이하다. 한국 사회에서 기본소득 도입을 통한 정책 혁신을 위해서는 기존 사회보장제도와의 정합성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하고, 시민들의 인식 등을 고려한 정책 혁신 시나리오가 필요하다. 정책 혁신은 기존 시스템에 대한 올바른 평가와 진단에서 나와야 하며, 실현 가능한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정책 혁신에 대한 과학적 시나리오에서 ‘정책실험’은 필수적이다. 엄밀한 정책실험을 거친 뒤 근거를 기반으로 하는 데이터 주도의 정책 설계는 예산의 효율성과 정책의 효과성을 담보하는 중요한 수단이다.

그동안 다양한 선행연구에서 자세하게 소개된 바와 같이 국가의 경제적 수준과 무관하게 세계 각국에서 공공 또는 민간이 주축이 되어 기본소득 또는 유사 기본소득 실험이 시도되고 있다. 이와 같은 기본소득 실험은 새로운 정책들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근거를 제공해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유용하며 이러한 데이터를 구축할 수 있는 정책실험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현재 한국 사회에서도 성남시와 경기도 청년배당이 기존의 사회보장제도와는 다른 방식으로 설계 및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례에 있어서 기존의 접근들은 데이터 주도의 정책실험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최근 들어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다양한 농민수당, 청년배당 등 기본소득과 유사한 정책들의 도입이 더욱 많이 검토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 제안하고 있는 혁신적 사회안전망의 개편을 위한 데이터 주도의 정책실험 설계가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상황이다.

데이터 주도의 정책 혁신은 새로운 정책에 대한 사회과학 실험을 통해 정책 효과성에 대한 데이터를 축적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 사회과학 실험이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조건은 다음과 같다. 첫째, 조사 참여자가 최소한 두 집단으로 무작위 배정되어야 하며, 둘째, 적어도 하나 이상의

실험집단과 최소한 하나 이상의 통제집단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마지막으로 실험집단의 경우 연구의 관심이 되는 개입을 받는 반면, 통제집단은 개입을 받지 않아야 한다(Lewis, 2017). 또한 정책실험은 실험을 주도하는 주체들의 목표와 정치적 성향 내지 이데올로기, 해당 사회가 직면한 사회경제적 문제와 도전 과제에 따라 특정 실험의 목표, 특정 실험에서 주목하는 성과변수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실험 전에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을 통해서 실험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물론 이러한 근거 기반의 정책 혁신을 위한 실험 설계가 모든 것을 해결해 주는 것은 아니지만, 이에 대해 대표적인 기본소득 연구자인 Standing(2018, pp. 343-344)은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근거 기반 정책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매우 타당한 일이지만, 실험을 설계하고 수행하며 여기서 나온 데이터를 분석하는 사람들은 겸손한 태도를 취해야 한다. 모든 파일럿은 한계가 있고, 어떤 파일럿도 이상적이지 않으며 이상적일 수도 없다. 그리고 이와 같은 파일럿이 개혁에 걸림돌이 되어도 안 된다. 파일럿은 어떤 개입이 작동하는가, 작동하지 않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그리고 왜 작동하는가, 작동하지 않는가를 알아내는 데 더 적합하다.

그리고 Standing(2018, pp. 345-358)은 기본소득 정책실험과 관련하여 다음 원칙을 고려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첫째, 기본소득 지급은 반드시 보편성, 무조건성, 충분성, 개별성 원칙이 고수되어야 한다. 파일럿 도중 이러한 원칙을 변경하는 정책변화가 없어야 하며, 자원의 제약으로 부분적인 기본소득이 실험되는 경우라면 몇 가지 측면의 유효성만을 확인하는 데 그 결과가 사용될 수 있다. 결과들을 평가할 때 연구자는 해당 설계가 충분하거나 적절한 기본소득이 아님을 인정해야 한다. 둘째, 파일

첫 설계는 명확하고 지속 가능해야 하며, 설계를 변경해서는 안 된다. 또한 표본 규모가 충분해야 하고, 실험 기간이 2년 이상으로 충분히 길어야 한다. 그리고 여러 곳에서 반복할 수 있고 규모를 확대할 수 있게 설계되어야 한다. 셋째, 무작위 통제집단을 이용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기본소득 실험이 갖는 한계가 존재한다. 무작위 할당으로 인해 가구 내에서도 기본소득을 받는 가구원과 그렇지 않은 가구원이 존재할 수 있게 되고, 공동체 내에서도 기본소득을 받는 가구와 그렇지 않은 가구가 존재함으로써 공동체 간 긴장과 가족 간 긴장의 위험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위험이 없다 하더라도 가구 내에서 기본소득을 나누어 갖게 됨으로써 무작위 원칙이 유명무실해질 가능성도 존재한다. 이것은 기본소득 실험의 결과에 대한 신뢰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인도의 실험이나 기브다이렉틀리(GiveDirectly)의 2018년 실험은 의미가 있다. 이들 실험은 마을 전체를 실험집단으로 선정함으로써 미시적 수준과 공동체 수준에서 태도 변화와 행위 변화를 포함한 효과를 탐구할 수 있게 설계되었기 때문이다. 넷째, 적절한 평가를 위해서 개인에 대한 기초선 조사(사전조사)가 필요하며, 공동체의 구조적 성격, 인프라 관련 공동체 특성조사도 필요하다. 기초선 조사의 경우 기브다이렉틀리 기본소득 실험에서와 같이 조사 대상자가 기본소득 실험계획에 대해 미리 알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초선 조사가 끝난 후에는 공공 캠페인을 통해 실험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정기적 평가 조사를 수행해야 한다. 이 경우 설문 문항은 기초선 조사와 가급적 동일해야 하며 조사 기간도 동일하도록 해야 한다. 평가조사 과정에서는 개인이 기본적인 조사 대상이지만 지역 당국, 지역의 교사와 의료인, 기타 공동체를 아는 사람들에게서 추가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섯째, 실험을 통해 개인과 가구 및 가족 공동체에 미치는 영

향 등 다층적인 효과 분석이 필요하다. 개인의 행위와 타인과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공동체 수준의 피드백 효과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일곱째, 개인 행동변화뿐만 아니라 인식이나 태도 변화 역시 평가되어야 한다. 여덟째, 기본소득 정책실험에 대한 평가조사에서 가설을 명확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

서구 국가들은 근거 기반 정책의 수립을 위한 다양한 정책실험과 학문적인 성과들이 축적되어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이러한 기반이 취약한 상황에서 4차 산업혁명 같은 새로운 시대가 다가오고 있고, 그에 따른 새로운 위험들이 확산되고 있다. 새로운 문제들에 대한 유연한 대응과 새로운 제도에 대한 효율적 정책 설계와 집행을 위한 데이터 주도의 정책 실험과 실천이 매우 중요하다.

4. 기본소득 도입 및 기존 복지제도 연계 가능성 검토를 위한 데이터 주도의 정책실험 모형 제안²¹⁾

마지막으로, 이상에서 살펴본 기본소득 정책실험 시 고려 사항을 반영하여 한국 사회에서 기본소득 도입 및 기존 복지제도와 연계 가능성에 대한 데이터 축적을 위한 기본소득 정책실험 설계모형을 제안한다. 특히 대부분의 지자체 검토 사례에서 기본소득 대상으로 언급되는 청년을 중심으로 한 정책실험 설계와 이러한 정책실험 시행을 뒷받침하기 위해 필요한 법적, 제도적 지원 방안을 제안한다.

앞서 기본소득 연구자인 스탠딩(Standing)이 정책실험과 관련하여 제시한 원칙을 요약하면, ‘정책실험은 보편적 소득을 지급받는 실험 집단과

21) 연구책임자가 공동연구진으로 참여하여 기본소득 정책실험 모형을 직접 설계하고 제안한 서울시 청년 기본소득 정책실험 연구 보고자료(2018. 9.)와 기본소득으로서 청년수당 효과성 측정을 위한 정책실험 설계 연구(구교준 외, 2018) 내용을 기초로 재구성함.

그렇지 않은 통계 집단을 최소 1000명 이상 표본으로 두고, 최소한 2년 이상 정기적으로 기본소득 급여를 지급한 뒤, 대상자들의 실행 과정, 인식과 태도에 대한 효과, 행위 변화에 대한 효과, 제도적 변화 또는 정책의 변화를 평가할 필요가 있다(Standing, 2018, pp. 343-358)'고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고려 사항을 반영하여 최근 기본소득 정책실험의 주요 대상으로 주목받고 있는 청년층 기본소득에 적용할 수 있는 모형 설계의 예시를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다수의 지자체가 청년층을 대상으로 기본소득을 검토하는 이유는 최근 청년 실업률과 니트(NEET)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불안정성과 불투명한 미래가 청년들이 혁신보다는 직업 안정성만을 추구하게 만들고 있으며, 이로 인해 청년들의 삶의 질이 상당히 낮고 기존의 사회보장제도로부터 청년층이 광범위하게 배제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청년에 대한 새로운 방식의 분배혁신은 청년의 행복 수준을 높임과 동시에 혁신성장을 위한 기반을 제공하게 될 것으로 기대되며 미래에 대한 투자적인 성격이 반영되기 때문이다(구교준 외, 2018).

먼저, 청년을 중심으로 하는 기본소득 정책실험 대상은 특정 지역 주민 등록인구 기준 만 19세 이후부터 만 29세 또는 만 34세까지로 설정할 수 있다. 고등학교 졸업 이후 대학 진학 및 사회생활을 처음 시작하는 시점을 고려하여 만 19세부터 실험 대상으로 포함하였다. 그러나 아동의 연령 기준은 만 18세 미만이므로 아동과 경제활동인구연령구분 기준인 만 18세 이상의 청년부터 기본소득 정책실험 대상으로 고려할 수 있다. 한편 정책 대상으로서 청년의 연령기준은 현재 제도별로 다양하게 적용되고 있으나 대개 20대로 한정하여 설정한 경우 만 29세까지로, 최근 노동시장 여건과 관련하여 취업 준비기간 또는 만혼의 경향 등을 고려하여 만

34세 또는 만 39세까지로 하여 30대 전체까지도 적용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18~39세 범위 내에서 청년 기본소득 정책실험 대상 연령 범위를 조정하여 설계할 수 있다. 현재 청년구직활동 촉진수당이나 서울시 청년수당의 경우 만 19세부터 34세까지에 해당한다.

다음으로 정책실험의 가장 중요한 전제조건은 무작위 통제 실험(Randomized Controlled Trial) 설계를 활용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청년대상 기본소득 정책실험에서는 전체 정책실험 참여 대상 가운데 무작위 추출을 통해서 기본소득이 지급되는 실험집단 및 현행 복지제도의 지원을 받는 통제집단으로 구분하고 정책실험을 통해 측정 및 분석하고자 하는 주요 내용에 대한 두 집단 간 차이를 비교 분석 함으로써 청년 기본소득의 효과를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이처럼 무작위 통제 실험 설계에 있어 이러한 차이를 측정하는 데 핵심적 요소는 사전-사후 조사에 의한 비교 분석으로, 이를 위해 정책실험 참여 대상에 대한 기초선 조사로서 사전 조사 및 실험 종료 시점 직후까지 지속적인 패널조사가 필수적이다.

다음으로, 정책실험 기간은 최소한 2년 이상으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기본소득 실험의 취지는 대안적 분배체계인 기본소득이 개인의 삶과 인식 및 행태를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데이터 기반으로 검증하는 데 있다. 따라서 개인의 행태 변화로 나타나는 실험효과를 측정하여 확인하기 위해서는 실험에 참가하고 있는 대상자가 이러한 기본소득을 일시적인 것으로 인식하지 않을 만큼 최소한의 기간이 확보되어야 한다. 또한 개인의 행태 변화는 일상생활의 주기 또는 계절적 주기와도 연관되므로 기본소득 지급에 따른 행태의 변화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시계열이 확보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기본소득 정책실험 기간은 최소한 2년 이상으로 설정되어야 한다. 최근 진행되고 있는 외국의 기본소득 또는 다

양한 정책실험의 경우 실험 기간은 최소 2년 이상이다.

다음으로, 본 연구에서 기본소득 정책실험을 데이터 주도의 대안적 소득보장제도로 혁신적 사회안전망 또는 삶의 안정을 통해 혁신에 기여하는 부분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단순히 기본소득 도입 가능성만이 아니라 기존 사회보장제도와의 연계 가능성을 동시에 검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이를 반영하여 기본소득 정책실험의 모형을 다음과 같이 설계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기본소득 정책실험 모형을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하는데, 기본소득 중심으로 급여 수준에 따라 시나리오를 구성하는 ‘기본 모형’과 기존 복지제도와의 급여체계 비교 또는 다양한 형태의 조건이나 서비스와 연계 가능성을 분석하기 위해서 기본소득을 근로활동 참여, 다양한 사회참여 조건, 사회서비스 제공과 연계하는 ‘결합(연계) 모형’으로 설계할 수 있다. 한국 사회에서 기본소득 정책실험 모형은 향후 도입 타당성과 지속 가능성에 대한 데이터 기반의 검증과 사회적 합의의 도출을 위해서, 기본 모형 이외에 기존 복지제도와의 연계 및 정합성 측면에서 근로활동, 사회참여, 사회서비스를 연계한 결합 모형으로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외국의 기본소득 실험의 경우, 핀란드 등이 대표적으로 단일 또는 복수의 기본소득 중심으로 설계한 기본 모형이며, 바르셀로나에서 시행 중인 기본소득 정책실험은 지역 기반의 활성화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 조건 적용 여부 및 기본소득 급여액을 소득으로 반영하는 방식 등에 따라 실험 모형별 집단을 구성한 결합 모형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기본소득 정책실험의 세부 모형을 다음과 같이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 기본 모형은 기본소득 중심으로 급여수준에 따라 차등하여 가능한 실험집단의 수만큼 구성할 수 있다. 한편 기본소득과 함께 근로활동 관련 인센티브 또는 급여수준 조정, 사회참여 관련 조건과 인센티브, 사

회서비스 지원을 다양하게 연계한 결합 모형으로 구성할 수 있다.

먼저, 기본 모형에서 실험집단에 기본소득을 차등 지급하는 것은 지급되는 기본소득 규모에 따라 개인의 행태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달라진다면 어느 정도에서 변화되는 변곡점이 존재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기본 모형에서는 급여수준에 따라 최소한 3개 이상의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을 구성하여 기본소득 수준에 따라 조건 없이 각 실험집단에 지급하며, 통제집단은 현행 복지체계에 따라 급여를 적용한다. 이러한 기본 모형 시나리오 설계의 예는 다음과 같다.

〈기본 모형〉	기본소득 급여수준 (원)	급여수준 설정 근거	급여체계
통제집단	0	-	현행 복지급여체계 적용 집단/ 미적용 집단
기본소득 실험집단 1	300,000	노인 단독가구 기초연금 급여 수준	기본소득 정액 지급
기본소득 실험집단 2	500,000	현행 청년수당 지원 수준 또는 1인 가구 생계급여 기준과 유사	기본소득 정액 지급
기본소득 실험집단 3	1,000,000	생활임금 50% 수준 또는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수준	기본소득 정액 지급

다음으로, 결합 모형은 기본소득과 함께 근로활동 관련 인센티브, 사회 참여 관련 조건 또는 인센티브, 사회서비스 지원과 연계시키는 모형으로, 다양한 형태로 시나리오 구성이 가능하다. 결합 모형은 기본 모형과 달리 기본소득 지급과 관련하여 다양한 조건들이 연계되어 기본소득 지급액이 달라지거나 지급 여부가 결정된다. 따라서 기본소득의 특성인 보편성과 무조건성 측면에서 일부 변형된 형태로 전형적인 기본소득 모형과 비교하기 위한 목적을 지닌다. 특히 근로활동과 연계되어 운영되는 현행 복지

체계에서 적용되고 있는 다양한 제도와 유사하게 설계함으로써 기본소득과 기존 복지체계의 연계 시 나타나는 변화 또는 효과를 비교 검토할 수 있도록 설정할 수 있다.

이러한 결합 모형은 크게 3가지 유형으로 설계하는데, 첫 번째는 기본소득과 근로활동에 따른 인센티브 또는 급여액이 조정되는 근로 연계모형, 두 번째는 사회참여 관련 조건 또는 인센티브가 연계되는 사회참여 연계모형, 세 번째는 다양한 사회서비스 지원을 연계하는 사회서비스 연계모형이다. 이때, 실험집단 대상으로 기본소득과 연계되는 조건에 따라 각 유형이 구성되며, 기본 모형의 비교 분석 기초선(baseline)으로 월 50만 원의 기본소득 지급모형과 결합한다.

세부적인 연계 모형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근로 연계모형은 기본소득과 함께 근로활동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따라 기본소득 급여수준의 변화가 나타날 경우 취업 등 근로활동을 포함한 다양한 측면에서 인식 또는 행태에 어떠한 변화가 나타날 것인지 실험하기 위한 모형이다. 근로활동 시간과 소득수준에 따라 기본소득에 추가적인 인센티브가 제공되는 모형과 일정 수준 이상 근로소득이 증가할수록 기본소득이 감소하는 두 가지 모형이 가장 핵심적이라고 할 수 있다. 먼저, 근로 인센티브 모형(EITC 방식의 근로 연계모형)은 기본소득 정책실험 참여 대상자의 취업과 근로를 장려하기 위하여 근로활동을 통해 근로소득을 얻는 참여자는 기본소득 수준을 초과하는 근로소득 일정 비율(50%)을 최대 50만 원까지 추가 지급하는 방식으로 최대 월 100만 원(기본소득 월 50만 원 + 인센티브 월 50만 원)까지 지원 가능하다. 이는 근로활동에 따른 임금수준에 따라 기본소득과 근로장려금(Earned Income Tax Credit)과 유사한 추가 인센티브까지 총 급여수준에 반영되므로, 기본소득 100만 원을 보장하는 모형과는 노동공급 결정 및 다양한 행태 변화에 있어 상이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며 이를 비교 분석하기 위해 설정한 모형이다.

다음으로, 기본소득 감소모형(NIT 방식 근로 연계모형)은 취업을 통해서 얻는 근로소득 발생 시 기본소득을 일정 비율로 감소시키는 기존 복지 체계의 전형적인 근로 연계모형이다. 취업을 통하여 근로소득을 획득하는 참여자의 경우 기본소득 급여인 월 50만 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의 50%를(최대 월 50만 원까지) 기본소득액에서 차감하여 지급하게 된다. 이 경우 월 근로소득이 150만 원에 이를 때까지 기본소득이 감소하여 150만 원에 이르면 기본소득이 중단된다. 이는 근로활동을 통해 일정 수준(다양한 기준 설정 가능)까지 근로소득이 발생할 때까지 기본소득을 지급하고, 그 이후부터 일정한 급여감소율(50%)을 적용하여 근로소득이 증가할수록 점차 기본소득이 감소한다, 이는 NIT(Negative Income Tax) 방식 또는 우리나라 현행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의 보충급여(급여감소율 100%) 방식을 접목시켜 근로활동에 따라 기본소득이 감소할 경우 노동공급 결정 및 다양한 인식과 행태 변화가 어떻게 나타날 것인지 비교 분석하기 위해 설정한 모형이다.

다음으로 취업 중단모형(취업준비 기간 지원 성격 근로 연계모형)은 일정한 근로조건 이상의 정규 일자리에 취업할 경우 기본소득이 중단되는 모형이다. 미취업자 대상으로 기본소득의 지급을 전제로 하여 정규직 취업 시 기본소득 지급을 중단하는 모형으로, 기본소득이 취업준비 기간을 지원하는 성격이 강하게 나타난다. 이는 한시적으로 일정기간(6개월) 동안 지원하는 현행 청년 구직촉진수당과 유사하게 운영되는 근로·취업 연계모형을 비교 분석하기 위해 설정한 모형이다. 마지막으로, 자산형성지원모형(희망키움통장·희망플러스 유형 근로 및 저축 연계모형)은 근로활동과 연계하여 일부를 저축할 경우 1:1 추가 적립 방식을 통해 실험 종료 시 축적된 모든 저축액을 수령하는 방식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모형

으로 구성할 수 있다. 이는 월 50만 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함과 동시에 참여자가 기본소득 또는 근로소득을 활용하여 20만 원 한도 내에서 저축할 경우 저축에 대해 1:1 매칭 형태로 추가 인센티브를 적립하여 자산 형성을 지원해 주는 방식으로, 예를 들어, 최대 20만 원을 저축할 경우 20만 원 추가 적립으로 인하여 매월 40만 원이 자신의 통장에 적립되고 기본소득 정책실험 기간(2년) 동안 약 1000만 원의 자산을 형성하여 종료 시 수령할 수 있으므로, 이를 통해 청년층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게 된다. 이는 70만 원을 기본소득으로 지급하는 모형과 기본소득 50만 원에 최대 20만 원을 추가하여 근로와 저축에 연계하는 모형이라는 측면에서 상이한 특성을 지니며, 이에 따른 노동공급 결정 및 다양한 인식과 행태의 변화를 비교 분석하기 위해 설정한 모형이다.

다음으로, 사회참여 연계모형은 다양한 유형의 사회참여 활동이 기본소득 지급의 전제조건으로 작용되거나 기본소득 외에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과 연계되는 방식으로 설정하는 연계모형이다. 이는 사회참여뿐만 아니라 연구주제와 관련된 다양한 인식과 행태 변화에 있어 기본모형과 비교 분석하기 위해 설정한 모형으로, 사회참여 인센티브 모형은 근로 인센티브와 유사하게 봉사활동 등 각종 사회참여를 조건으로 기본소득의 40%(20만 원)를 추가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모형이다. 이는 사회참여 활동뿐만 아니라 효과평가 관련 다양한 인식과 행태의 변화를 비교 분석하기 위해 설정한 모형이다. 또한 사회참여 의무 모형은 봉사활동 등 다양한 사회참여 활동을 기본소득 지급의 전제조건으로 제시하여 이를 이행할 경우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모형이다.

마지막으로, 사회서비스 연계모형은 다양한 유형의 사회서비스 지원을 기본소득 지급과 연계함으로써 소득보장과 사회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하는 방식으로 설정한 모형이다. 이는 기본소득뿐만 아니라 주거복지, 건강

관리, 일자리 지원 등 다양한 사회서비스 프로그램을 필요로 하는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결합하여 동시에 제공하는 경우 다양한 인식과 행태 변화에 있어 기본소득만을 지급하는 기본 모형과 달리 어떠한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는지 비교 분석하기 위해 설정한 모형이다. 이러한 사회서비스 연계모형은 기본소득과 더불어 청년의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공동생활을 위한 사회주택 등 주거서비스를 연계하여 지원함으로써 주거안정과 기본소득이 동시에 결합될 경우 어떠한 긍정적 시너지 효과를 나타내는지 분석하기 위한 모형이다. 사회적 경제 지원 모형은 일자리 지원을 위하여 기본소득과 사회적 경제 지원을 연계한 모형이다. 이는 단지 근로소득과 연계하여 추가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방식과 달리 사회적 경제 유형의 사회참여나 일자리를 제공과 기본소득을 결합할 경우 다양한 인식과 행태 변화에 있어 기본소득만 지급하는 기본 모형과 어떠한 차이가 나타나는지 비교 분석하기 위해 설정한 모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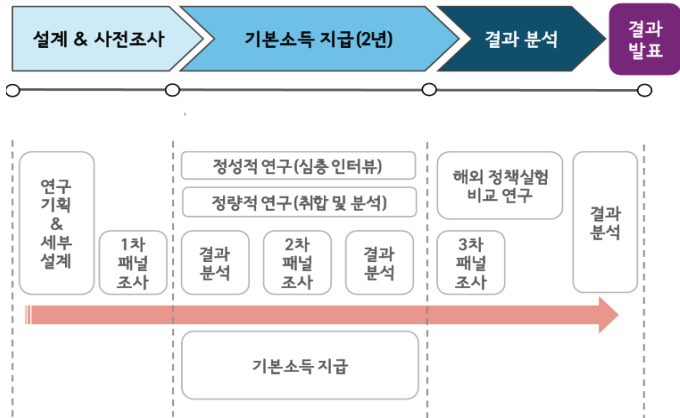
이상의 결합 모형 시나리오 설계의 예는 다음과 같다.

〈연계 모형〉	기본소득 급여수준(원)	정책실험 모형 급여체계 설계 방식	
생계급여 보장수준과 근로 연계모형	500,000	자산 형성 연계	최대 20만 원 저축 시 1:1 매칭 방식으로 추가 인센티브(최대 20만 원) 지급
		근로 인센티브	기본소득 지급액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의 50% 추가 인센티브 지급
		기본소득	기본소득 정액 지급
		급여감소를 적용	기본소득 지급액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의 50% 기본소득에서 감액 지급
		취업 시 중단	정규직 취업 시 기본소득 지급 중지
생계급여 보장수준과 사회참여 연계모형	500,000	참여 인센티브	다양한 사회활동 참여 시 기본소득 40%(20만 원) 추가 지급
		기본소득	기본소득 정액 지급
		참여 의무	사회참여 조건 이행 시 기본소득 지급

〈연계 모형〉	기본소득 급여수준(원)	정책실험 모형 급여체계 설계 방식	
생계급여 보장수준과 사회서비스 연계모형	500,000	주거서비스 지원	기본소득과 공동생활주택 지원
		기본소득	기본소득 정책 지급
		사회적 경제 지원	기본소득과 사회적 경제 참여 지원

다음으로, 기본소득 정책실험 운영 프로세스는 크게 ‘실험 설계-표본 추출-사전 기초선 조사-기본소득 지급-사후 평가조사-정책효과 분석 및 평가’라는 흐름으로 진행된다. 이러한 정책실험을 추진 주체로 참여하는 정부 및 공공 영역 또는 민간 영역의 역할은 크게 연구기획 및 기본소득 정책실험 설계, 사전 기초선 조사, 사후 패널조사, 정책효과 분석 및 평가, 기본소득 지급 업무 등으로 구성된다.

[그림 4-3] 기본소득 정책실험 운영 프로세스 개요



자료: 구교준 외(2018)

이러한 기본소득 정책실험은 최대한 무작위 통제 실험의 원칙을 준수하여 시행해야 하며, 이를 위해 기본소득 정책실험 실시 이전에 엄격한 사전조사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 실험 설계 종료 직후 기본소득 정책실험에 대한 언론홍보 및 참여자에 대한 정보 제공 등을 최소한으로 제한한 상황에서 사전 기초선 조사를 실시한다. 이러한 사전 기초선 조사 대상은 표본추출 단계부터 조사 완료까지 기본소득 정책실험의 실험집단 및 통제집단 참여를 전제로 정책실험 규모를 고려하여 무작위 선정을 통해 추출하며, 조사 과정에서 향후 패널조사 참여 및 개인정보 제공 등에 대한 동의 절차를 병행하여 진행해야 한다.

사전 기초선 조사가 완료된 후 무작위 또는 주요 특성을 고려하여 모형 시나리오 수만큼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으로 표본을 배치한다. 기본소득 정책실험이 시행된 이후에는 수시로 인터넷이나 참여 대상 플랫폼 등을 활용한 인식과 행태 변화를 측정할 수 있으며, 기본소득 정책실험의 효과 평가를 위한 패널조사는 사전조사 1회를 포함하여 정책실험 기간 중간 시점 패널조사 1회, 정책실험 종료 후 사후조사 1회 등 총 3회를 필수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한편 이러한 기본소득 정책실험 패널조사와 더불어 기본소득의 지급 등 운영 프로세스와 기존 복지정책으로부터의 수혜 여부 등에 대한 행정 데이터를 축적하여 데이터 주도의 정책실험 효과 평가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기본소득 또는 새로운 혁신적인 정책을 대상으로 한 정책 실험을 확대 시행함으로써 데이터 주도의 사회안전망 개편 또는 정책 혁신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법적, 제도적 지원이 필수적이다. 이처럼 정책실험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으로, 우선 핀란드 기본소득 정책실험 사례에서와 같이 정책실험 추진 및 지원 관련 정부 및 공공 거버넌스를 구축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 정부 내에 정책실험 전담 조직을 설치하고 전문 인력을 배치할 수 있으며, 정책실험 기반 혁신적 사회안전망 개편을 위해서 사회보장제도 신설 변경 시 협의 프로세스 과정, 주요 정책 설계 및 입안 과정에서 정책실험을 통한 데이터 주도의 평가 제도와 더불어 정책실험 확산을 위한 법적 근거 및 제도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정책실험 관련 인식 및 구성요소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관료들의 위험 회피적 성향 전환을 위하여 정책실험의 제도화와 정책 감사에 대한 인식 변화를 통해 혁신적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한편 최근 4차 산업혁명의 기술을 사회정책 및 생활 영역에 접목시키기 위하여 각 국가에서 확산되고 있는 폴리시랩의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공공 및 민간 영역 정책실험을 지원할 수 있도록 폴리시랩과의 협업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제 5 장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데이터 기반 포용과 혁신의 복지서비스 패러다임 전환

제1절 빅데이터와 위험예측 모형(PRM) 기반 정책
사각지대 발굴 및 예방적 복지서비스 제공
제2절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기반 찾아주는
복지서비스 지원체계로의 패러다임 전환

5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 데이터 기반 포용과 혁신의 복지서비스 패러다임 전환

여기서는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데이터 기반 포용과 혁신의 복지서비스 패러다임 전환’이라는 주제로 4차 산업혁명 핵심 기술을 활용하여 수요자인 국민의 삶의 영역에서 다양하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혁신적 개편 방안을 제안한다.

1절에서는 다양한 공공·민간 영역의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잠재적 위험 예측 모형(PRM: Predictive Risk Modeling)을 적용하여 정책 사각지대 발굴 및 잠재적 위험집단별 복지서비스 수요 예측을 통해 예방적 복지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제공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2절에서는 현행 행복e음을 전면 재구조화하여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전통적인 신청주의 복지 패러다임을, 수요자에게 적합한 맞춤형 서비스를 찾아 제공하고 수요자의 편의성과 선택권을 확대하는 ‘찾아주는 복지서비스 제공 패러다임’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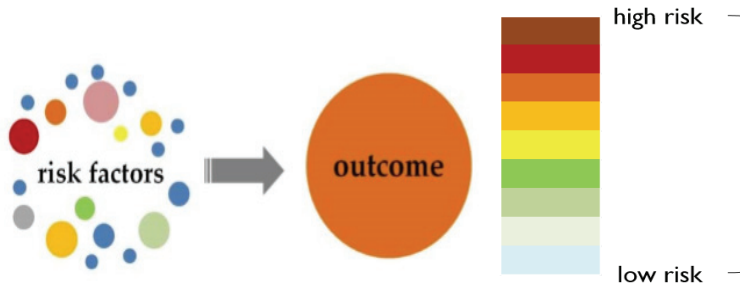
빅데이터와 위험예측 모형을 통한 정책 사각지대의 발굴 및 예방적·선제적 복지서비스 제공이 상대적으로 낮은 단계에서 4차 산업혁명 대응과 포용적 복지 구현을 위한 개편 대안이라면, 차세대 정보시스템 기반의 찾아주는 복지서비스 지원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은 우리나라 사회보장체계 전반을 포괄할 수 있는 보다 근본적이고 적극적인 개편 대안이라고 할 수 있다.

제1절 빅데이터와 위험예측 모형(PRM) 기반 정책 사각지대 발굴 및 예방적 복지서비스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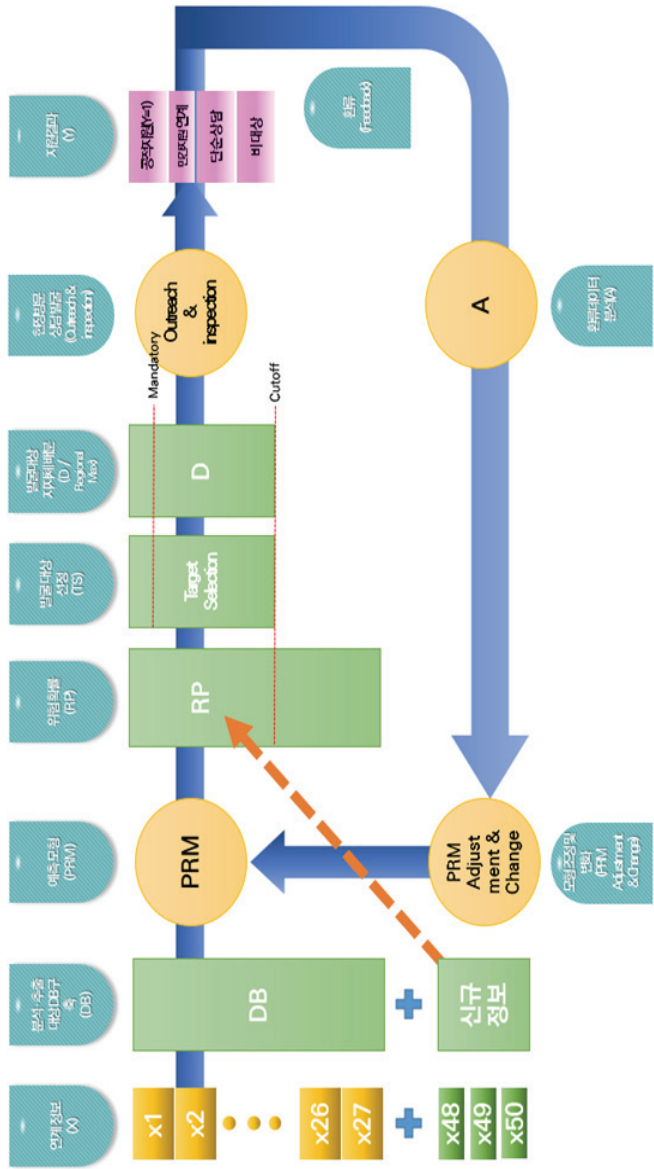
여기서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등 다양한 공공·민간 영역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분석 데이터를 구축하고 잠재적 위험예측 모형(PRM)을 적용하여 특정 가구 및 개인의 위험확률을 예측해 정책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특성별로 잠재적 위험집단 또는 복지서비스 수요를 예측함으로써 예방적 복지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제공하는 혁신적 사회안전망 강화 및 활용 방안을 제안한다.

1. 위험예측 모형(PRM)의 개요 및 정책 활용 프로세스

잠재적 위험예측 모형(PRM)은 다양한 연계 정보들을 기반으로 축적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및 활용하여 정책 대상별 위험요인 도출 및 개인 또는 가구 단위의 잠재적 위험 확률(Risk probability)에 대한 예측모형을 도출하고, 새로운 분석 및 예측 대상 상황이나 사례들로 구성된 데이터(Test data)에 이러한 모형을 적용함으로써 잠재적 위험 확률을 예측한다.



[그림 5-1] 사회보장 빅데이터 기반 잠재적 위험예측 모형(Predictive Risk Modeling) 활용 프로세스



이러한 모형을 적용함으로써 잠재적 위험 확률을 예측한다. 위험 수준에 따라 정책 대상을 분류하여 선제적으로 대상 선정, 예방, 발굴 및 서비스 지원에 활용하는 방법을 의미한다. 위험예측 모형을 정책 프로세스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최초 연계정보뿐만 아니라 정책집행 및 환류데이터 축적과 분석을 통해 모형을 반복적으로 고도화할 수 있는 순환적 연구 및 정책 프로세스 환경이 매우 중요하다.

잠재적 위험예측 모형을 적용한 정책 활용 프로세스별 주요 이슈 및 고려 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이와 같은 예측을 통한 서비스 제공 시스템 또는 플랫폼을 구축하면서 정책목표를 분명히 설정하고, 복지서비스 전달체계에서 이러한 시스템이 어떻게 활용될 것인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전자제품이나 서비스의 목적은 단순하지만, 사회정책 영역에서의 이러한 방법론을 활용하는 과정에서는 항상 사람을 중심으로 또 다른 소외, 배제, 차별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특정한 정책 대상의 다양한 위험요인과 관련된 정보 중 활용 가능한 정보와 데이터가 구축되지 않았거나 접근이 불가능한 정보의 부재를 통계적으로 어떻게 처리하고 활용할 것인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이는 빅데이터 기반의 연계정보 처리 및 활용, 상세 정보의 존재 유무와 편차, 활용 여부에 따라 저소득층 또는 특정한 취약계층(가구유형) 집단으로 집중되거나 고착되는 집단 편향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현행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역시 복지서비스 신청 및 조사의 이력 정보가 있는 기존 복지 대상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과 관련된다.

세 번째는 위험예측에 활용되는 주요 위험요인 데이터 및 연계 정보의 한계와 속성을 정확히 이해하고 다원화하여 데이터 발굴 및 연계를 통해

분석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야 한다. 이는 신규 정보 발굴 및 구축을 통한 연계 정보 확대, 기존 연계 정보 기준 조정 및 상세 정보 추가 연계, 기존 연계 정보 가공을 통한 신규 정보 생성 및 활용 등을 고려할 수 있다.

네 번째는 발굴 대상 특성을 고려한 예측모형 다양화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예측모형 적용 사례에 대한 환류데이터 분석 시 지원 결과 및 범위에 따른 집단 구분 및 다양한 환류데이터 분석을 통해 구조적인 개선 방향을 마련해야 한다. 이는 분석구조의 다양화(분석 대상, 분석 시점), 분석변수 유형의 다양화(정태적 정보 vs. 동태적 정보), 분석변수 선택 및 세부 정보의 활용 범위 등이 검토되어야 한다.

다섯 번째는 알고리즘 선택 및 시스템 적용 방안 선택 시 정책에서 설명 가능한 부분을 고려해야 한다. 최근 사회정책 영역에서 이러한 위험예측 모형을 활용함에 있어서 고도화된 기계학습 방법론 기반 위험 예측모형이 ‘블랙박스’와 같이 설명이 불가능하다는 논쟁들이 제기되었다. 이는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를 해결하고 복지서비스의 집행 현장에서 대응을 위한 설명 가능성이 고려되어야 한다.

여섯 번째는 예측된 위험을 기준으로 서비스 발굴 지원 대상 선정의 원칙과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앞서 정책 활용 프로세스상에서 예측된 위험 확률 분포를 바탕으로, Cutoff line, Grouping 및 Filtering 등 적용 원칙과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해외의 활용 사례에서도 서비스 지원 대상 범위 선정 시 예산 제약을 고려하여 위험 확률 상위에 해당하는 분위 등을 적용한 기준으로 설정(상위 × %)하는 경우가 존재한다. 이러한 기준 외에도 위험 확률 예측 결과에 근거한 필수적인 서비스 제공 대상 가구 지정(mandatory) 또는 복지서비스 대상자의 지역별 집중 현상에 따른 서비스 지원 대상 배분 및 상한 설정 범위 등을 고려해야 한다.

요컨대 잠재적 위험예측 모형은 최근 들어 광범위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기계학습 및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활용하는 방법론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민간 영역에서 금융서비스, 범죄예방, 보건의료 등의 영역에서 활발하게 진행되어 점차 공공 영역의 다양한 사회서비스 영역으로 확장되고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포용적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서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등 다양한 공공 및 민간 영역의 빅데이터 기반으로 분석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잠재적 위험예측 모형(PRM)을 적용하는 것이 더욱 필요하다. 이를 통해 특정 집단, 가구 및 개인의 위험확률 예측 결과를 활용하여 그동안 해결되지 않은 정책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잠재적 위험집단 특성 분석을 통해 복지서비스의 수요를 예측함으로써 예방적 복지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혁신적 사회안전망의 구축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2.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공공데이터 연계 및 활용 사례 : 복지사각지대 발굴관리시스템 및 e아동행복지원시스템²²⁾

최근 다양한 공공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앞서 살펴본 잠재적 위험예측 모형(PRM)을 활용하여 잠재적 위험집단의 특성을 예측 분석하고, 이들의 복지수요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를 선제적·예방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정책 지원 방안과 이러한 정보를 복지서비스 현장에서 직접 활용하는 사

22) 연구책임자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원과 협업을 통해 데이터 연계 및 시스템 구축 연구에 직접 참여하고 있으며, 이러한 연구 및 사업에 참여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된 최현수(2018a). 사회복지 분야의 공공데이터 연계 및 활용 사례. KIPA 조사포럼, Vol.24 Spring. 한국행정연구원과 최현수(2018b). 빅데이터를 활용한 e아동행복지원시스템 구축. 빅데이터 연구 방법론과 젠더이슈 세미나.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을 중심으로 재구성함.

례가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것은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4차 산업혁명 대응과 포용적 복지 구현을 위한 혁신적 사회안전망 개편 및 활용 방안의 전형적 사례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사회보장 영역 행정데이터를 중심으로 정책 집행이 이루어지는 복지 분야에서 4차 산업혁명의 핵심적인 기술인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보건의료 분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여러 가지 제약 조건을 고려해야 하는 상황으로 인하여 이제 시작하는 단계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공공 및 민간 영역의 빅데이터를 연계하여 다양한 기술을 활용한 예측 결과를 바탕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이를 바탕으로 복지전달체계 구축 및 복지서비스 제공 과정을 보여주는 혁신적 사례로 복지사각지대 발굴관리시스템과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을 살펴보고자 한다.

가. 사회보장 빅데이터를 활용한 복지사각지대 발굴 지원체계 : 복지사각지대 발굴관리시스템

복지정책 분야에서 처음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공공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위험예측 모형을 활용하여 복지사각지대 문제 해결을 위해 활용되고 있는 사례가 복지사각지대 발굴관리시스템이다. 이는 송파 세 모녀 사건으로 인한 사회적 관심과 기존의 제도적인 측면의 사회안전망 강화의 한계를 데이터 기반의 위험예측 및 전달체계 개편과 연계하여 혁신적인 방법으로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다양한 공공 빅데이터를 수집 및 분석하여 위기가구를 예측 발굴하고, 일선 지자체를 통해 복지지원을 연계하며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것이다. 복지 대상자의 적극적인 발굴을 위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의 시행(2015. 7.)과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사회보장급여 수급권자 발굴 의무와 복지사각지대 대상자 발굴을 위한 위험요인 관련 공공·민간의 빅데이터 연계를 통해 추진되고 있다.

[그림 5-2]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공공데이터 연계를 통한 복지사각지대 발굴관리시스템 개요 및 운영 프로세스



자료: 사회보장정보원, 내부자료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보장정보원의 협업을 통해 추진되고 있는 복지사각지대 발굴관리시스템은 사회보장 빅데이터 기반으로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활용한 복지사각지대 위험예측 모형(PRM)을 적용한다. 그리고 예측 결과와 발굴 대상 정보를 지자체와 공유함으로써 복지 전달체계에 배치된 현장 전문가(사회복지공무원 및 사례관리사)가 직접 대상 가구를 방문하여 가구의 경제적 상황과 복지서비스 수요에 대해 상담한 뒤 공적 또는 민간자원 연계를 통해 지원 가능한 복지급여와 서비스

를 연계 제공하는 것으로 찾아주는 서비스이다. 이것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기반으로 내부정보 34종과 가구의 경제적 위기 요인과 관련된 27종의 다양한 공공·민간 영역의 빅데이터를 연계하여 발굴 대상 분석용 빅데이터를 구축하고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활용한 위험예측 모형을 통해 현장 전문가의 복지 대상 발굴 및 사례관리 서비스를 지원하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나. 사회보장 빅데이터 기반 아동학대 예방과 아동복지서비스 지원체계: e아동행복지원시스템

최근 몇 년 동안 아동학대로 인한 아동의 사망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아동학대에 대한 국민의 인식과 신고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신고 접수에 의한 사후 대응 방안에 국한되어 위기 상황 발생 전에 선제적으로 아동학대 예방 및 아동복지서비스를 연계하여 지원하는 대응에는 한계가 나타났다. 이에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다양한 공공·민간의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잠재적으로 학대 위기에 놓인 아동과 및 아동보호체계를 통한 복지서비스 지원 대상 아동을 선제적으로 예측 및 발굴하는 것을 지원하는 정보시스템의 구축이 매우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8차 아동정책조정위원회(2016. 3.)에서는 앞서 언급한 복지사각지대 발굴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빅데이터를 활용한 상시적인 발굴시스템으로 e아동행복지원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게 되었다. 이를 위해 위기아동 징후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 검증 및 예측모형 개발을 통해서 데이터 기반의 분석 및 지자체와의 위험예측 결과 및 발굴 대상 아동의 조치 결과 환류 데이터 연계를 지원하는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을 구축하였다. 두 차례의 시범사업 운영(2017. 9., 2017. 12.)을 통해 빅데이터와 정보시스템을

활용한 혁신적인 위기아동 발굴 인프라와 아동복지서비스 지원체계 연계를 통해 2018년 3월부터 처음으로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그림 5-3]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공공데이터 연계를 통한 e아동행복지원시스템 개요 및 운영 프로세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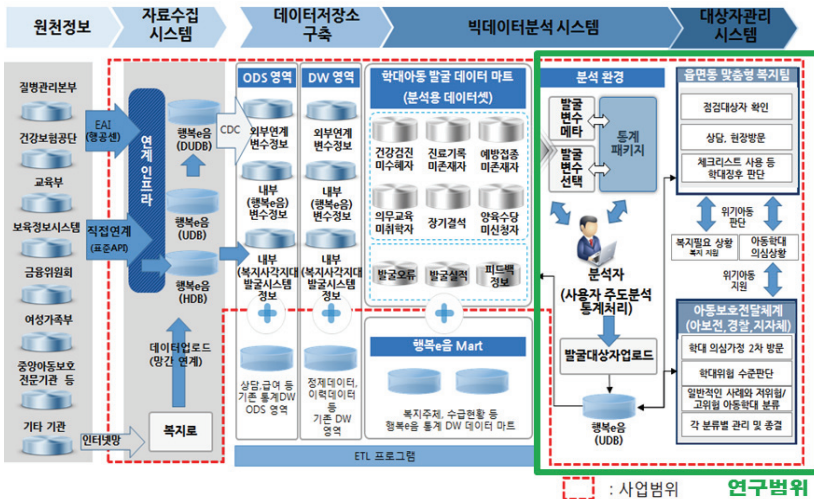


자료: 사회보장정보원, 내부자료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은 복지사각지대 발굴관리시스템과 동일한 위험 예측 모형을 기반으로 공공 및 민간 영역 빅데이터 연계정보를 더욱 확장하여 최근 심각한 이슈가 되고 있는 위기아동 조기 발견과 아동복지서비스 지원을 위해서 일선 지자체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전문가들이 현장에서 활용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는 미국, 뉴질랜드 등에서 최근 위험예측 모형을 아동학대 신고사례에 대한 위험예측 및 현장 방문서비스에 적용하고 있는 사례에 비해서 더욱 선제적이고 예방적 방법으로 활용되고 있다. 특히 아동복지서비스 관련 정책 연구 및 분석 영역과 데이

터 기반의 정보 인프라 구축 등 과학기술 영역의 전문가 집단의 협업을 통해 혁신적 대안을 정책에 활용함으로써 선제적으로 위기아동과 가구를 발굴하여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아동복지서비스를 지원하는 포용적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였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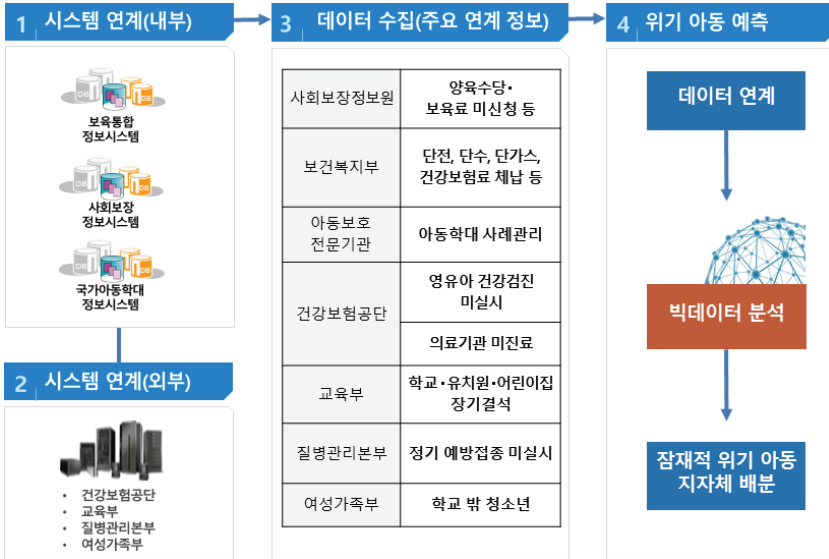
[그림 5-4] e아동행복지원시스템 운영 프로세스별 구축사업 및 연구 범위



자료: 사회보장정보원, 내부자료.

그동안 아동학대의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종합대책을 다각적으로 추진 하였으나, 상담 및 신고 접수에 의존하여 위기상황 발생 이전에 예방 및 선제적으로 발굴하는 조치는 미흡했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적인 기술을 활용하여 위기아동과 가구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혁신적인 방안으로 e 아동행복지원시스템이 추진되고 있다. 이를 통해 우리 사회에서 새로운 친밀과 돌봄의 위기에 대응하여 선제적으로 아동학대 발생을 예방하고 아동의 양육환경과 복지 수요에 대한 파악과 적절한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기 시작하였다.

[그림 5-5] e아동행복지원시스템 연계정보 및 활용 프로세스



자료: 보건복지부, 내부자료.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에서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정보를 기반으로 27종의 공공·민간 영역의 빅데이터를 연계하여 구축 운영 중인 복지사각지대 발굴관리시스템 정보를 바탕으로 아동학대 발생 사례 구축 정보 및 학대 위험아동 징후 관련 데이터를 분석하여 잠재적인 위기아동 및 가구 관련 요인 14종을 추가적으로 연계하여 발굴 대상 추출을 위한 빅데이터를 구축하였다. 이를 기초로 통계적 위험예측 모형을 적용하여 위기아동 및 잠재적인 아동복지서비스의 지원 대상 가구별 위험을 예측하고 이러한 분포로부터 발굴 대상 가구의 정보를 추출한다. 발굴 대상 정보를 시스템을 통해 공유하면 읍면동 사회복지공무원이 해당 가구를 방문하여 상담 후 위기아동에 대한 아동복지서비스를 연계하고 양육 환경에 대한 확인과 상담 과정에서 아동학대 징후를 발견할 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으

로 시스템을 통해 연계하여 직접 의뢰함으로써 예방적인 조치가 가능해지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시스템을 통해 공공과 민간에서 사례관리를 강화하고 위기아동 가구에 대한 아동복지서비스 제공에 대해 복지전달체계의 각 주체별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수행하게 된다.

3.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공공데이터 연계 및 활용을 통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예방적 복지서비스 제공 방안

본 연구에서는 사회보장 빅데이터 기반 데이터 주도의 혁신적인 정보 시스템 구축 및 활용 통해 우리 사회의 포용성을 제고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 앞서 제시한 사례와 같이 위험예측 모형(PRM)을 활용한 복지수요 예측 및 전달체계와 연계한 발굴지원시스템뿐만 아니라, 최근 들어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넷플릭스나 아마존 등에서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주목받고 있는 추천시스템을 활용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사회서비스 제공 방안에 대해서 제안한다.

먼저, 사회보장 빅데이터 기반으로 이를 연계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 후 위험예측 모형(PRM)을 적용하여 잠재적인 위험 및 복지수요를 예측하고 이를 활용하여 위기가구 발굴 및 예방적 복지서비스 지원에 활용하는 프로세스는 다양한 정책 영역에서 활용 가능하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하여 빅데이터 구축 및 인공지능을 활용한 복지급여 및 서비스 수급 대상의 판별, 잠재적인 위험요인과 특성에 근거한 고위험 집단 도출 및 예방적 정책의 선제적 지원, 잠재적인 복지 수요의 예측 결과를 활용하여 다양한 복지서비스 추천 시스템과 신청을 연계한 수요자 맞춤형 사회서비스 제공 등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적인 기술을 활용한 혁신적 사회안전망 개편 및 강화 전략으로 다양한 사회서비스 정책 영역에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서비스 패러다임의 전환은, 비즈니스 모델을 추구하는 민간 영역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보건의료 영역과 달리 공공성 측면을 고려하여 정부의 R&D를 기반으로 공공과 민간의 협업체계를 통해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공공·민간의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데이터 주도의 위험예측 모형 활용을 통한 선제적·예방적 서비스의 제공은 고독사 위험집단 분석을 통한 예방적인 정책 지원체계 구축, 노숙인 복지서비스 지원 대상 발굴 지원 방안 마련, 정신건강서비스 지원 대상 발굴 및 지원체계 구축, 의료급여 수급자 등 만성질환 관련 예측 및 사례관리 서비스 제공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 영역에서 활용 가능하며, 이와 같은 혁신적 사회안전망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서비스 지원을 위한 예산뿐만 아니라 공공·민간의 빅데이터 연계 및 활용을 지원할 수 있는 데이터 거버넌스 구축 및 지원이 필수적이다.

다음으로, 위험예측 모형을 활용한 복지수요 예측 및 위기가구의 발굴 지원과 더불어 보다 혁신적인 대안으로, 추천 시스템을 활용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사회서비스 제공 및 이용자의 선택 확대 방안으로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사업 운영체계의 개편을 제안한다.

지자체의 다양한 서비스 개발을 통해 이루어지는 현행 지역투자형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사업의 경우, 수많은 다양한 서비스 유형과 아이디어가 발굴되고 민간 시장의 서비스 제공과 연계되어 실질적인 지원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서비스는 거주하고 있는 지역(시군구)의 예산을 기반으로 지원되고 해당 지자체에서 발굴한 서비스만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되고 있으므로 동일한 재원으로 다양한 서비스 이용을 통한 수요자의 선택 및 공공과 민간의 서비스 발굴 및 제공 기회를 제한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이러한 예산의 집행 및 서비스 이용 범위에서 행

정구역 단위의 운영 패러다임 개편이 이루어진다면 보다 혁신적인 방법으로 다양한 복지서비스가 제공되고 우리 일상생활의 서비스 선택 기회의 다양성과 체감도가 높아지면서 사회안전망의 포용성이 제고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기술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것이 위험예측 모형(PRM)과 더불어 최근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다양한 콘텐츠 서비스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기술인 추천 시스템(recommendation system)이다. 인터넷의 등장 및 네트워크 보급은 수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나 사용자들은 모든 정보들의 가치 및 유용성을 판단할 수 없는 상태가 되고 있다. 다양한 소스로부터 생산되는 모든 정보를 검색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생산되는 모든 정보들의 가치 유무를 파악하는 활동이 불가능하다. 또한 선호하는 서비스의 유형이 개인의 특성과 새로운 트렌드에 따라 다양화됨에 따라 수많은 정보들 가운데 사용자들이 확인할 필요가 있거나, 관심을 가질 만한 정보를 찾고 이를 제공하여 활용하는 것이 중요한 활동이 되면서 서비스 시장의 비즈니스 모델로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무한한 정보로부터 선호하는 정보들을 추출하여 제공하는 기술(Information filtering)²³⁾이 주목받고 있으며, 대표적인 것이 정보 검색과 추천이라고 할 수 있다. 검색 기술은 이용자가 검색어를 지정하여 모든 정보로부터 원하는 정보를 찾아내는 방식으로, 이용자의 요청에 대해 반응하는 반응형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에 추천 기술은 보다 능동적인 방식으로 이용자의 명시적인 검색이나 지정이 없이도 평상시 이용자의 사용 패턴이나 선호, 이용자와 유사한 특성을 가진 사람들의 정보를 바탕으로 이용자가 선호할 만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정보 검색어 사용 패턴, 서비스 사용 패턴, 검색된 자료의 패턴, 물품 구

23) '필터링(filtering)'은 전체 항목 중 적당한 항목을 선택하는 기술을 일컫는 IT 용어임.

매 패턴 등 인터넷 사용 이력으로부터 추출될 수 있거나 정책 운영 과정에서 축적된 데이터를 통해 추출이 가능한 행동 및 선호하는 서비스 패턴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이러한 추천시스템은 아마존의 서적 및 상품 추천 서비스, 유튜브의 동영상 추천 서비스, 넷플릭스의 영화 및 드라마 추천 서비스 등을 통해 이미 우리의 삶에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

이처럼 4차 산업혁명의 대표적인 기술인 추천 시스템을 연계하고, 앞서 언급한 예산의 집행 및 서비스 이용 범위에서 지자체 단위의 운영 패러다임의 혁신적 개편이 이루어진다면 다양한 복지서비스가 제공되고 우리 일상생활의 서비스 선택 기회의 다양성과 체감도가 높아지면서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영역에서의 포용성을 제고할 수 있는 사례가 될 것이다.

요컨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시스템 및 운영체제와 관련하여 사회서비스 예산 집행체계,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등록 및 관리체계 등의 제도적 개편을 통해 수요자 선택형 사회서비스 이용체계로의 혁신적인 사회서비스 운영 패러다임 전환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이것은 최근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와 일자리 확충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시도별 사회서비스 관리원 시범사업과 연계함으로써 혁신적 운영 패러다임 개편을 위한 예산 집행체계 및 서비스 이용자 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을 추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이와 같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운영 패러다임의 혁신적 개편은 현 정부에서 새롭게 추진하고 있는 생활 SOC 확충 방안과의 연계를 통해 문화, 교육, 주거, 환경 등 다양한 정책 영역에서의 사회서비스 확대 가능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우리 사회안전망의 포용성 제고를 위한 또 다른 대안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제2절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기반 찾아주는 복지서비스 지원체계로의 패러다임 전환

여기서는 현재 복지정책 집행에서 가장 중요한 정보 인프라인 행복e음을 전면 재구조화하여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전통적인 신청주의 복지 패러다임을 전환하여 혁신적 포용 사회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한다. 이것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을 적극 활용하여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찾아 제공하고 국민의 편리성과 선택권을 확대할 수 있도록 ‘찾아주는 복지서비스 지원주의 패러다임’으로 전환함으로써 혁신적 포용국가를 실천하기 위한 혁신적 사회안전망 개편 방안으로의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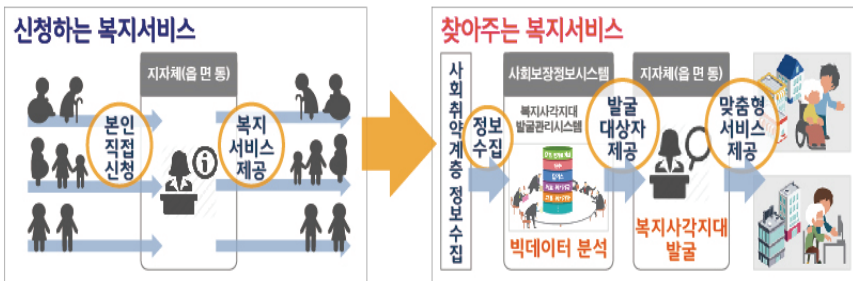
우리나라의 360여 개에 이르는 사회보장제도 중에서 재정규모가 월등히 크고 국민들에게 중요하게 인식되는 핵심적인 정책은 가장 선별적인 기초보장 생계급여부터 보편적 수준에 가까운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아동수당 등 현금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그렇지만 최근 국민의 복지 체감도 제고와 삶의 질 향상이 이슈로 제기되면서 소득보장제도 이외에 주거, 교육, 건강, 돌봄, 문화, 환경 등 국민의 삶과 밀접한 생활서비스 영역이 더욱 더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최근 들어 복지정책의 중요성이 빈곤 해소를 위한 공공부조 중심의 소득지원 정책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회서비스 제공을 통해 소외와 사회적 배제를 해소하는 방향이 강조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행정데이터를 기반으로 취약계층의 정보 및 복지자원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하고 지역사회 기반으로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연계하여 제공하기 위한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며, 진정으로 혁신적 포용국가를 실천하는 전략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기존의 사회안전망 개편 전략이 대부분 개별 소득보장 및 다양한 사회

서비스의 포괄성과 보장성 제고를 통한 제도적 사각지대 해소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찾아주는 복지서비스 지원 패러다임’은 사각지대 발생의 원인 중에 하나인 신청주의 패러다임을 극복하고 복지 수요자인 국민의 정보 비대칭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혁신적인 기술을 바탕으로 혁신적 전환을 모색함으로써 진정한 의미의 포용적 사회안전망을 구현하는 것이다.

[그림 5-6] 신청주의에서 찾아주는 복지서비스 지원 패러다임으로의 전환



자료: 최현수(2018a)

1. 찾아주는 복지서비스 지원 패러다임 구축을 위한 법령 및 제도적 개선 방안

‘찾아주는 복지서비스 지원체계’란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인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으로 복지서비스 정보시스템 및 복지전달체계를 활용하여 제도적 기준에 의해 탈락하였거나, 제도에 대한 정보를 알지 못해서 신청 및 수급하지 못하는 국민들에게 지원받을 수 있는 복지급여 및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정부가 적극적으로 사전에 확인하여 지원받을 수 있도록 찾아주는 포괄적인 맞춤형 서비스를 의미한다.

이러한 찾아주는 복지서비스 지원시스템 구축 방향은 앞서 제시한 빅

데이터 기반의 추천 시스템과 더불어 이를 보다 적극적 서비스로 연계한 찾아주는 복지서비스 지원시스템을 구현함으로써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사회안전망 운영에 있어서 사각지대 문제 또는 새로운 소외나 배제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현행 복지로 등 검색(searching) 및 단순한 정보 제공을 넘어 복지서비스에 대한 ‘Welfare Curation’²⁴⁾의 개념을 확대 적용하여 향후 2022년까지 구축될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기반으로 국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찾아주는 복지서비스 지원체계 구축을 통해 복지 패러다임을 완전히 새롭게 획기적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지원체계 구축을 통해 기존 복지 사각지대의 해소를 위한 노력과 더불어, ICT 기반의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및 다양한 데이터 인프라 기반의 서비스 제공체계를 활용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모든 복지 대상자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에게 다양한 복지급여와 서비스 관련 정보 제공, 신청 및 수혜 이력 관리 등 다양하고 편리한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것은 복지행정체계 개선 및 혁신을 통해 국민들이 정보가 부족하거나 단순히 신청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국가가 제공하는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를 최소화하고, 나아가 국민들 스스로 자산 조사 관련 정보 및 복지 혜택 정보를 확인하고 관리 및 신청이 가능한 체계로 지원함으로써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다양한 데이터와 기술을 접목하여 복지서비스 체감도를 향상시키고 소통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찾아주는 복지서비스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관련 법령 및 제도적 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 단순히 현행 복지급여 수급희망이력

24) 여기서 Curation은 다양한 정보를 수집 및 선별하고 새로운 가치를 부여하여 전파 또는 활용한다는 개념으로 기존의 개념보다 확장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관리제도의 확대를 통해 이러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수도 있지만, 전통적인 ‘신청주의 복지 패러다임’을 ‘찾아주는 복지서비스 지원 패러다임’으로 전면 개편한다. 이와 같은 포용적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연계한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의 적극적 활용을 통해서 수요자 중심의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의 제공을 위한 찾아주는 복지서비스 지원 패러다임과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 구축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찾아주는 복지서비스 지원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서 필요한 법령 및 제도적 개선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현행 사회보장기본법과 사회보장급여법, 개별 복지사업의 법령으로 연결되는 법적 기반에서 혁신적 포용국가의 지향을 담아 포용과 혁신의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찾아주는 복지서비스 지원에 대한 방향성을 이러한 법령에 체계적으로 반영하여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첫 번째는 사회보장기본법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와 제9조(사회보장을 받을 권리)를 중심으로 포용국가 이념을 반영하여 포용적 복지 구현을 위한 찾아주는 복지서비스 지원체계의 기본원칙을 천명하는 형태로 보다 구체적인 수준에서 찾아주는 복지서비스 지원 패러다임을 통한 권리 보장을 명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두 번째는 찾아주는 복지서비스 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을 위한 핵심 법령인 현행 사회보장급여법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법 체계와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사회보장급여법 제4조(기본원칙)의 주요 내용과 제2장(사회보장급여), 제3장(사회보장정보) 전반에 걸쳐 사회보장기본법 기본원칙에 근거한 찾아주는 복지서비스 지원체계 관련 구체적인 절차 등 규정을 반영하여 법령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 특히 제2장 제3절(수급권자 등의 지원) 체계를 ‘찾아주는 복지서비스 지원체계’ 중심으로

재구성하여 보다 구체적 조항으로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개별 복지사업 법령에는 사회보장기본법에 명시되는 찾아주는 복지서비스의 기본원칙과 사회보장급여법에 규정된 법령을 준용하여 개별 복지사업별로 찾아주는 복지서비스 지원제도가 집행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주요 복지서비스의 개별 법령에 ‘찾아주는 복지서비스 지원제도(가칭)’ 등록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한 운영절차에 대한 규정을 명시하도록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 이는 기초연금 및 장애인연금 제도에 도입하여 수급률 제고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현행 ‘수급희망이력관리제도’와 관련된 조항을 바탕으로 표준적 법령과 지침(안)을 도출하여 공통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개정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수급희망이력관리제 명칭을 ‘찾아주는 복지서비스 지원제도(가칭)’로 변경하고 현행 기초연금법(제10조), 시행령(제13조의2), 시행규칙(제7조, 제7조의2)과 장애인연금법(제10조의2), 시행령(제9조의2), 시행규칙(제8조의2) 등을 비교하여 표준적인 법령을 구성하여 적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한편 사회보장급여법에서는 현행 복지급여의 신청 탈락, 탈수급 또는 수급 중지 등으로 복지체계 또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포함된 이력이 있는 복지 대상에 대한 지속적 수혜 자격관리를 통해서 수급 가능한 급여를 찾아주는 서비스로 제공하는 방안을 명시해야 한다. 또한 현행 공적체계 내에서 주기적인 자격 확인을 통해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찾아서 제공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 필요 사항으로, 그동안 정기적 또는 단주기로 시행하고 있는 확인조사를 통한 부정수급의 조치에 상응하는 복지 대상 발굴 및 사각지대 지원 측면에서의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찾아주는 복지서비스 지원의 구현을 위한 제도 및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 여기에는 현재의 수급희망이력관리제 확대 적용을 위한 찾아주는 복지급여 및 서비스 관리 대상, 실시 주기, 관리 방식 등 운영 방

안, 지자체 복지전달체계의 개선 사항 등 구체적인 ‘찾아주는 복지서비스 지원제도’ 실행 방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2.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기반 찾아주는 복지서비스 패러다임 중심의 혁신적 사회안전망 구축 방안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은 최근 변화하는 4차 산업혁명 관련 지능 정보기술들을 적용하여 2010년 구축되어 운영 중인 행복e음과 범정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2013년 부처별 복지사업으로 확장)을 전면 재구조화하여 스마트한 사회보장체계 구축을 목표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약 3년에 걸쳐 추진될 예정이다.

이는 2010년 이후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체계 확대 과정에서 정책 인프라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왔던 행복e음의 성과와 한계를 바탕으로 4차 산업혁명의 기술을 접목하여 공급자적 관점의 제도 운영 및 관리 관점에서 수요자 중심의 복지서비스 제공으로의 전환을 위해 개편을 추진하는 것이다. 지난 10여 년 동안 행복e음을 통하여 지자체로 전달하는 사회보장제도가 100여 개에서 360여 개로 확대될 만큼 우리나라의 복지급여 및 서비스의 확대 및 집행에 있어 성과가 있었으며, 최근에는 온라인 신청 확대, 복지 사각지대 등 위기가구 발굴, 부정 수급 예방 및 조치 등의 성과도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2009년 당시 보건복지부 중심으로 저소득층 지원 중심의 복지급여 및 서비스 집행을 위한 행정 인프라로서 단기간에 설계 및 구축됨에 따라 한계가 있으며, 이를 활용한 복지사업의 관리 범위가 전 부처 및 공공기관의 복지사업으로 확장된 만큼 이를 위한 전면적 확대 개편이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급변하는 ICT 환경과 최근 4차 산업혁명의 핵심적인 기술을 접목하여 더 나은 정책수립과 서

비스 제공을 위한 사람 중심의 사회정책의 핵심적 플랫폼으로 구축하는 것이 현 정부의 혁신적 포용국가의 비전과 전략을 실현하기 위해서 반드시 성공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는 대표적인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요컨대 2022년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비전 및 목표, 추진 방향과 주요 추진과제는 혁신적 포용국가의 실현을 위한 정보 인프라 또는 정보 SOC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찾아주는 복지서비스 지원 패러다임 역시 이러한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을 기반으로 향후 3년 동안 또는 그 이상의 중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혁신적인 방법으로 우리 사회안전망의 포용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제안한 것이다. 이것은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미래 사회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목표뿐만 아니라 핵심 기술을 적극 활용하여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찾아 제공하고 국민의 편리성과 선택권을 확대할 수 있도록 ‘찾아주는 복지서비스 지원주의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을 추진함으로써 혁신적 포용국가를 실천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혁신적 사회안전망 구축의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복지서비스 사전등록제도 도입을 통한 찾아주는 복지서비스 지원 및 생애주기별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 모바일, 인터넷을 활용하여 언제나 어디서나 제약 조건 없이 이용 가능한 복지서비스 제공, 최근 강조되는 커뮤니티 중심의 다양한 사회서비스와 자원의 연계를 위한 사회정책 플랫폼으로 기존 시스템과의 통합 연계 추진, 복지사각지대 발굴관리시스템 상시 운영 및 지역별 예측모형 구축과 위치 기반의 시각화 및 공간정보 제공을 통한 현장 중심 복지서비스 제공, 데이터 주도의 정책 시뮬레이션 수행을 통한 정책 집행 관련 기준 및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 구축, 추천 시스템을 활용한 수요자 맞춤형 사회서비스 제공 및 선택권 강화 등 다양한 분야별 추진과제를 실천할 수 있도록

록 노력해야 한다.

이러한 비전과 목표하에 찾아주는 복지서비스 지원체계의 구축 방향 및 데이터 주도의 수요자 중심의 복지정보 시스템을 구현하기 위한 제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최근 빅데이터의 핵심적인 기술들을 종합적으로 활용하여 단순한 정보 제공(현행 복지로 홈페이지의 검색서비스) 및 복지정책 집행을 위한 시스템의 개념을 넘어 ‘Welfare Curation’ 개념을 확대 적용하여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기반으로 어떤 환경에서나 국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찾아주는 복지서비스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이것은 지난 몇 년 동안 국세청의 차세대 정보시스템 구축을 기반으로 국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 개편된 홈텍스 또는 최근 민간 서비스 시장 영역에서 다양하게 도입 확대되고 있는 찾아주는 서비스를 벤치마킹하여 구축 방향을 설계해야 한다. 이번 연구에서 제안하는 찾아주는 복지서비스 지원 시스템으로, 복지정책 분야의 수요자 중심 정보시스템은 가칭 ‘마이웰(My Welfare 또는 My Wellbeing 의미)’ 시스템이다. 이것은 홈텍스와 마찬가지로 복지 정책 및 서비스 관련 대표적 정보 인프라로서 찾아주는 복지서비스 사전등록제도를 도입하여 쌍방향으로 이용 가능하도록 구축하고 언제 어디서나 앱을 기반으로 접근하여 활용 가능하도록 구성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그림과 같이 찾아주는 복지서비스 지원시스템의 개요 및 운영 프로세스를 제안하고 있다.

이러한 시스템은 국세청 홈텍스와 유사한 포맷으로 사전등록제도 기반으로 운영되며, 복지정책의 집행뿐만 아니라 복지서비스 관련 정보 제공 및 활용, 복지 수혜 이력 관리 및 서비스의 신청과 선택 등 다양한 콘텐츠로 구성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나의 소득재산 정보”, “나의 복지서비스”를 통한 내 정보 확인 및 신청과 급여기능, 추천시스템, 변경 알

립을 포함한 “찾아주는 복지서비스 지원 사전등록제도”를 구축한다. 특히, 개별 복지급여 신청 탈락 이력과 무관하게 찾아주는 복지서비스 복지급여 신청 또는 수급 중지 시에 찾아주는 서비스 제공을 위한 개인정보 제공 동의의사 확인만으로 다양한 복지급여를 생애주기에 맞추어 자동 추천 및 신청 가능하게 제공하는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찾아주는 복지서비스이다.

기술적으로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기반으로 다양한 하위 시스템을 연계함으로써 찾아주는 복지서비스 구축 및 제공을 위한 기술적 고려 사항 및 정보시스템 개선 사항에 반영해야 한다. 이러한 찾아주는 복지서비스 지원시스템은 이용자의 목적에 따라 가구구성 및 내 소득재산의 확인, 복지서비스의 추천 및 검색, 찾아주는 복지서비스 사전등록 신청, 본인이 신청한 서비스에 대한 조사 결과 조회 및 복지서비스에 대한 수혜 이력 관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하위 메뉴로 구성할 수 있다.

각 단계별 메뉴와 프로세스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가구정보 입력 및 확인’은 이용자가 찾아주는 복지서비스 지원 시스템을 이용하게 될 경우 가장 먼저 이루어지는 절차로, 본인의 가구정보를 불러오거나 신규로 기입하게 하는 과정이다.

둘째, ‘내 소득재산’은 소득재산 정보 입력 및 확인 절차로 기존의 공적자료 중심의 자료와 신고자료 기입 중심으로 구분이 가능하다. 공적자료 중심의 소득재산 정보 입력은 본인 및 가족 정보제공 동의하에 기존 자료를 불러오기 하여 확인하는 절차로 진행하게 되며, 신고 자료의 작성을 추가할 경우 본인이 직접 작성 후 관련 자료를 업로드하여 증빙하는 절차로 진행될 수 있다.

셋째, ‘찾아주는 복지서비스(사전등록 신청 포함)’는 시뮬레이션 및 추천서비스 등을 중심으로 찾아주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 가구 정보 및 소득재산 정보를 토대로 시스템상에서 시뮬레이션(가상 판정)을 통해서 이용자가 수급 또는 이용 가능한 복지서비스를 추천해 주는 서비스가 제공된다. 이 과정에서 본인(가구)의 표준 소득인정액을 알려주며 신청 가능한 복지서비스와 추천 복지서비스 등을 알려주어 이용자의 복지 체감도를 향상시킨다.

넷째, ‘복지서비스 신청 및 조회’는 앞서 시뮬레이션을 통해 제공된 정보를 바탕으로 추천된 다양한 서비스에 대해서 이용자가 서비스를 신청할 의사가 있을 경우 이를 지원한다. 사업별로 통합신청, 개별 신청 안내, 온라인 신청, 우편, 방문 신청 등 신청 방법에 따라 신청이 가능하며, 추후 온라인/통합 신청의 방향으로 서비스를 개편하고 일괄적으로 온라인/통합 신청 방식으로 운용한다. 신청서를 제출하는 절차와 신청 내역 조회 및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도 제공한다.

마지막으로, ‘내가 받는 복지서비스 관리’에서는 찾아주는 복지서비스

사전등록 관리와 다양한 복지서비스 수혜 이력에 대한 관리 및 정보 제공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력관리 및 사전등록 관리’ 절차는 찾아주는 복지서비스에 대한 사전등록 여부를 확인하여 이를 등록할 수 있게 지원하는 절차이다.

요컨대 이상에서 제시한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기반으로 전통적인 신청주의 복지 패러다임을 ‘찾아주는 복지서비스 지원주의 패러다임’으로 전환함으로써 혁신적 포용 사회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으며, 이것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을 적극 활용하여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찾아 제공하고 국민의 편리성과 선택권을 확대할 수 있도록 혁신적 포용국가를 실천하기 위한 혁신적 사회안전망 개편 방안으로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제 6 장

결론: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혁신적 포용 사회안전망 구축 방향

제1절 요약: 주요 연구 내용 및 연구 결과

제2절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데이터 주도의 혁신적
포용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하여

6

결론: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혁신적 포용 사회안전망 구축 방향

제1절 주요 연구 내용 및 연구 결과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우리 사회 전반의 다양한 변화 양상, 일자리 대체 및 감소 등 노동시장의 변화를 중심으로 새로운 사회적 위험들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포용적 사회안전망 강화 또는 혁신적인 개편 방안 등 다양한 전략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새로운 사회적 위험 요인을 도출하고, 기존의 사회적 위험에 대응해 왔던 기존 사회보장체계의 혁신적 변화와 개편 방안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람 중심의 4차 산업혁명을 구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국내에서도 플랫폼 기반의 카풀제도 시행을 둘러싼 택시산업 종사 노동자들과의 대립과 갈등, 정책적인 혼란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향후 우리 사회 각 분야에서 직면할 수 있고 극복해야 하는 4차 산업혁명의 기술발전과 적용으로 인한 부정적인 단면이라고 할 수 있다. 2017년 세계경제포럼에서도 2016년 이후 모든 분야에서 커다란 반향을 일으켰던 4차 산업혁명이 향후 초래할 다양한 위험(global risk)에 대한 대응 전략 모색이 강조되었다.

이러한 배경에 따라 본 연구는 ‘사람 중심의 4차 산업혁명 구현’을 위하여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사회적 위험에 대응함과 동시에 핵심 기술을 적극 활용하여 데이터 주도의 혁신적 사회안전망 개편 방안을 제안하고 이를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 가능한 ‘혁신적 포용 사회안전망’

구축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였다.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다양한 종류의 데이터를 연계 구축하여 미래를 예측함으로써 새로운 지식과 가치를 창출할 수 있으며, 과거와 전혀 다른 새로운 시장과 상품들이 최근 들어 등장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동안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보다 나은 정책이나 서비스를 국민들에게 제공하는 방식을 제안하였다. 이는 기존 근거 기반 정책 수립을 넘어서는 것으로 4차 산업혁명의 발전된 기술을 포용적 사회안전망 구축과 혁신을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식으로, 이러한 과정을 데이터 주도 혁신(Data-driven Innovation) 또는 데이터 주도 정책(Data-driven Policy)의 개념으로 본 연구에서 활용하였다.

〈연구목적〉

4차 산업혁명 대응과 동시에 지능정보기술 활용을 위한
데이터 주도의 혁신적 사회 안전망 개편방안을 통해
모두가 행복한 포용적인 사회 안전망을 구축함으로써
‘사람 중심의 4차 산업혁명 시대’와
‘다 함께 잘 사는 혁신적 포용국가’ 실현에 기여

이를 반영하여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제도적 관점에서 제시되어 왔던 사회안전망 개편 방안을 넘어서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사회적 변화와 새로운 사회적 문제에 적극 대응하면서 동시에 발전된 지능정보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데이터 주도의 정책 인프라 구축 및 활용 방안을 강조한다. 이를 기반으로 혁신적 사회안전망 개편과 운영 패러다임의 전환을 추진함으로써 보다 포용적인 사회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였다.

연구 목적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새로운 사회적 변화와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데이터 주도의 혁신적 개편 방안을 통해 기존의 사회안전망이 지닌 한계를 개선함과 동시에 대안적 소득보장체계인 기본소득과 복지서비스 패러다임의 전환 방안 제안을 통해 보다 포용적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방향을 모색하는 내용을 핵심적인 연구 범위로 설정하였다.

IMF 외환위기 이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근로장려세제 도입 등 다양한 사회안전망 확대와 더불어, 2010년 행복e음, 2013년 범정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행정데이터 구축, 정부 3.0 추진에 따른 건강보험 등 공공 영역의 다양한 빅데이터가 구축 및 활용되고 있다. 이처럼 지난 20여 년 동안 우리나라의 공공과 민간 영역에서 구축된 다양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최근 4차 산업혁명의 핵심적인 기술을 활용함으로써, 데이터 주도 또는 데이터 기반의 혁신적 사회안전망 패러다임 개편을 통해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새로운 변화와 일자리 및 소득 감소의 문제에 대응하면서 동시에 사회안전망의 포용성을 제고하기 위한 전략을 본 연구에서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특히 최근 정책기획위원회가 포용국가 전략회의(2018. 9. 6.)를 통해 발표한 ‘문재인 정부 포용국가 비전과 전략’을 중심으로 사회정책 추진 필요성 및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기존의 국정과제나 사회보장 기본계획의 포괄적이고 다양한 정책 영역별 제도 중심의 개편 방안과는 차별화하여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데이터 주도의 혁신적 사회안전망 개편 방안을 통해 포용성을 동시에 제고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요컨대 최근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거시적 관점의 비전이 ‘혁신적 포용국가’라면, 본 연구에서 제안하고자 하는 혁신적 포용 사회안전망 개편 방안은 미시적 측면에서 이러한 혁신적 포용국가를 실천하기 위한 구체

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 배경 및 목적에 따라 연구 목차를 아래와 같이 구성하였으며, 각 장에서 수행한 연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장 4차 산업혁명과 혁신적 포용 사회안전망 개편 필요성 및 추진방향

(제1절)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새로운 사회적 위험

(제2절) 데이터 주도 혁신적 포용 사회안전망 개편 필요성 및 추진방향

제3장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사회적 위험과 사회안전망 개편 관련 국민 인식조사

(제1절)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사회적 변화와 새로운 사회적 위험에 대한 인식

(제2절)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사회안전망 개편에 대한 인식

제4장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포용과 혁신의 소득보장제도 개편 방안

(제1절) RTI(Real-time Information) 시스템 기반 사회보험 운영 패러다임 개편 및 사각지대 해

(제2절) 정책 실험 데이터 기반 대안적 소득보장제도로써 기본소득 제도 도입 가능성 모색

제5장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포용과 혁신의 복지서비스 패러다임 전환 방안

(제1절) 빅데이터와 위험 예측 모형(PRM) 기반 정책 사각지대 발굴 및 예방적 복지서비스 제공

(제2절)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기반 찾아주는 복지서비스 자원체계로의 복지패러다임 전환

제6장 결 론: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혁신적 포용 사회안전망 구축방향

먼저, 2장에서는 ‘4차 산업혁명과 혁신적 포용 사회안전망 개편의 필요성 및 추진 방향’을 주제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사회적 변화 및 완전히 새로운 사회적 위험, 데이터 주도 정책 혁신 필요성, 그리고 최근 정책기

획위원회와 각 부처가 합동으로 발표한 문재인 정부의 포용국가 비전과 전략의 주요 내용을 바탕으로 포용과 혁신을 위한 사회안전망 개편 필요성 및 방향을 제시하였다.

1절에서는 다양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우리 삶의 변화와 새로운 사회적 위험을 살펴보고,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한 데이터 주도의 정책 추진과 혁신적 사회안전망 개편을 통한 포용적 복지와 사람 중심의 4차 산업혁명 구현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2절에서는 포용과 혁신을 위한 중장기 사회정책 전략 추진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포용국가 전략회의(2018. 9. 6.)를 통해 발표된 ‘문재인 정부 포용국가 비전과 전략: 국민의 삶을 바꾸는 포용과 혁신의 사회정책’의 주요 내용을 제시했다.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 위기를 거시적 차원에서 고착된 구조적 문제와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노동시장 변화 등의 새로운 위기로 구분하였으며, 미시적 차원에서 최소주의 사회정책의 한계로 인한 시장 영역의 확대와 사적 부담 증가로 인한 가계의 지속 가능성 위기를 제시하였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기존의 경제정책 중심의 패러다임을 전환하여 포용과 혁신을 위한 사회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3장에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예상되는 사회경제적 변화와 새로운 사회적 위험, 사회안전망 개편 필요성과 방향에 대한 국민 인식조사 결과를 제시하였다. 주요 조사 내용에 따라,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사회경제적 변화와 새로운 사회적 위험에 대한 인식(1절)과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사회안전망 개편의 필요성 및 방향에 대한 인식(2절)으로 구성하여 조사 결과를 제시하였다.

1절에서는 4차 산업혁명과 주요 개념에 대한 인지 여부와 4차 산업혁명과 그로 인한 다양한 변화에 대해 관심 정도, 4차 산업혁명으로 예상되는 사회적 변화 양상별로 자신의 삶과 우리 사회 전반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지(새로운 사회적 위험에 대한 인식)에 대한 조사 결과를 제시하였다.

2절에서는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사회정책 영역별 중요성 및 우리나라의 정책 대응 수준에 대한 인식,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해 사회정책 영역²⁵⁾ 중 정책 혁신 우선순위, 그리고 복지급여 수혜 경험 및 납세 여부에 따라 5가지 사회안전망 개편 방향(①생애주기별 기본생활보장 ②중산층을 포괄하는 보편적 복지의 확대 ③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증세 ④포용적 사회안전망의 혁신 역량 제고 가능성 ⑤수요자 맞춤형 찾아주는 복지서비스 지원체계)에 대한 조사 결과뿐만 아니라 납세 여부와 복지 수혜 경험에 따라 사회안전망 개편 방향 및 이를 위한 증세 인식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다음으로, 4장에서는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노동시장의 변화와 일자리 및 소득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핵심적인 전략으로서 데이터 주도의 혁신적인 소득보장체계 개편을 통한 포용적 사회안전망 구축 방안을 제안하였다.

1절에서는 전통적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복지국가의 소득보장체계 중 핵심 정책인 사회보험제도가 지닌 사각지대 문제, 4차 산업혁명

25) 문재인 정부 포용국가 비전과 전략: 국민의 삶을 바꾸는 포용과 혁신의 사회정책과 관련(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관계부처합동, 2018. 9.)하여 6가지 정책 영역을 "①미래사회에 필요한 인재 양성을 위한 초·중·고·대학 교육과정 혁신 ② 일자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고용서비스 및 평생 교육프로그램 혁신 ③ 소득 감소 및 불평등에 대응하기 위한 기본소득 등 소득보장제도 강화 ④ 가계부담 완화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일상생활 관련 다양한 사회복지서비스 확대 ⑤ 건강수명 연장과 여가시간 확대에 따른 문화여가정책 다양성 확대 ⑥ 기술발전으로 인한 새로운 문제 해결과 일상의 안전과 생명존중을 위한 예방적 정책 강화"로 구성하였다.

으로 인한 노동시장의 변화 대응의 한계를 극복하고 포용성을 제고하기 위한 혁신적 개편 대안으로 실시간 소득 파악 정보시스템(RTI: Real-time Information)을 기반으로 한 데이터 주도의 사회보험 운영 체계 개편 방안을 제안하였다. 이는 기존의 사회안전망 운영 패러다임의 혁신적 재구조화를 위한 데이터 기반의 소득 파악 정보 연계 및 사각지대 해소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근로장려세제 도입 과정에서 구축된 소득 파악 인프라와 일용근로소득 자료를 활용한 사회보험료 지원과 사각지대 해소 노력에도 불구하고, 기존 특수고용형태 근로자와 함께 최근 증가하는 비정형 플랫폼 노동자로 인한 새로운 사각지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RTI 시스템을 기반으로 사회보험의 적용 대상 기준 중에 근로일수와 근로시간 기준을 폐지하고, 소득 발생 중심의 사회보험료 징수체계와 환급 방식을 통한 사회보험 사각지대의 획기적인 해소 방안을 제시하였다.

2절에서는 대안적 소득보장제도로써 정책실험 데이터 기반의 기본소득 도입 가능성을 살펴보았다. 이는 현행 소득보장체계 개편을 넘어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일자리 대체와 소득의 감소로 인해 심화될 소득과 부의 양극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주목받고 있는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는 그동안의 기본소득 도입 필요성에 대한 논의와 더불어, 정책실험을 통한 데이터 기반의 기본소득 도입 가능성 검토를 통해 사회안전망의 포용성 강화를 위한 대안을 모색하고자 구체적으로 기본소득 정책실험 추진 방안을 설계하여 제안하였다.

5장에서는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데이터 기반 포용과 혁신의 복지서비스 패러다임 전환'이라는 주제로 4차 산업혁명 핵심 기술을 활용하여 수요자인 국민의 삶의 영역에서 다양하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혁신적인 개편대안을 제안하였다.

1절에서는 다양한 공공·민간 영역의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잠재적 위험 예측 모형(PRM: Predictive Risk Modeling)을 적용하여 다양한 정책 영역에서 정책 사각지대 발굴 및 잠재적인 위험집단별 복지서비스 수요 예측을 통해 예방적 복지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제공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2절에서는 현행 행복e음을 전면 재구조화하여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전통적인 신청주의 복지 패러다임을, 수요자에게 적합한 맞춤형 서비스를 찾아 제공하고 수요자의 편의성과 선택권을 확대하는 ‘찾아주는 복지서비스 제공 패러다임’으로 전환하는 방안으로 법률 개정 방향과 더불어 시스템 구축 방안까지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이러한 복지서비스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다양한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면서 동시에 4차 산업혁명의 핵심적인 기술인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적용한 위험예측 모형 및 추천시스템등을 적극 활용하여 혁신적으로 사회안전망을 개편하는 대안이다. 빅데이터와 위험 예측 모형을 통한 정책 사각지대의 발굴 및 예방적·선제적 복지서비스 제공이 상대적으로 낮은 단계의 4차 산업혁명 대응과 포용적 복지 구현을 위한 개편 대안이라면, 차세대 정보시스템 기반의 찾아주는 복지서비스 지원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은 우리나라 사회보장체계 전반을 포괄할 수 있는 보다 근본적이고 적극적인 개편 대안이라고 할 수 있다.

제2절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데이터 주도의 혁신적 포용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하여

그동안 우리나라의 사회정책 패러다임이라고 할 수 있는 ‘최소주의 사회정책’을 극복하고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미래 사회경제적 변화와 새로운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서 포용과 혁신의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 매우 절실한 상황이다.

미래 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혁신적 포용 사회안전망은 그 자체로 중요할 뿐만 아니라 상호 보완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더욱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다양한 사회적 위험에 대응함과 동시에 사람이 배제되지 않는 기술혁신의 결과를 활용한 ‘사람 중심의 4차 산업혁명 시대’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사회안전망은 다음과 같은 지향을 지니고 추진되어야 한다.

첫째, 사회안전망은 포용적이어야 한다. 이것은 그동안 추구해 온 전통적인 복지정책의 지향이라고 할 수 있다.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생애주기별로 단계적 기본생활보장과 연계하여 아동수당, 청년 구직촉진수당,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 보편적 소득보장체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야 한다. 특히 우리나라의 사회안전망에 항상 존재하는 구조적, 제도적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기준 중위소득 상향 조정, 국민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재산의 소득 환산제 개선, 재난적 의료비 지원 강화, 실업부조 도입 등을 추진해야 한다.

둘째, 사회안전망은 포용적이면서 동시에 혁신적인 방식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아무리 정책의 포괄성 및 보편성을 확대하고 보장수준을 높인다고 할지라도 복잡한 복지 대상자 선정기준과 자산조사, 행정 빅데이터의 연계 및 활용의 한계, 그리고 신청주의 패러다임으로 인해 전달체계상 다

양한 복지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일정 규모의 사각지대가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면 우리 사회안전망의 실질적 포용성을 제고하는 것에는 한계가 존재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안한 것처럼 데이터 주도 또는 데이터 기반의 사회안전망 혁신 및 강화를 추진해야 한다. 완전고용을 전제로 지난 20세기 동안 복지국가의 핵심 제도로 전통적인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수단이었던 사회보험과 공공부조 등 기존 사회안전망의 운영체계가 지닌 근본적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주도의 혁신적인 개편이 필수적인 상황이다. 조직화된 정규직 노동자 중심으로 제도화된 사회보험의 가입 자격, 특히 노동시장의 근로계약에 있어 그동안 행정적으로도 데이터로도 관리되지 않고 있는 근로일수 및 근로시간에 의한 가입 대상 근로자 정의 및 제외 규정은 완전히 폐지해야 한다. 기업이나 영세한 사업장에서 구인광고를 내면서 사회보험을 가입해 준다는 식의 표현은 사회보험의 기본원리에 맞지도 않으며 사업주나 근로자가 마치 선택에 의해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 사회보험 운영체계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최근 들어 국민연금 개편 대안을 논의하면서 ‘노인빈곤 해소를 위해 기초연금의 급여수준을 높이면 국민연금 가입에 대한 유인이 낮아진대거나 누가 국민연금에 가입하려고 할 것인가’라는 표현은 더 이상 적절하지 않다. 데이터 주도로 소득 중심의 사회보험 통합 징수체계 개편과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운영체계 개편을 혁신적으로 추진하여 그동안 계속해서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특수고용형태근로종사자 이외에도 최근 들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비정형 또는 플랫폼 노동자를 대상으로 사회보험의 포용성을 높여야 한다.

한편으로는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주목받고 있는 대안적 소득보장제도로서 기본소득의 정책 효과성과 파급효과에 대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기본소득 도입 타당성을 검증하고, 구체적 도입 방안을 마련

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의 협업을 기반으로 하는 중장기적인 정책실험을 추진할 것을 제안하며 적용 가능한 기본소득 정책실험 설계 사례를 제시하였다.

또한 혁신적 사회안전망 개편을 위해 수요자 중심의 찾아주는 복지서비스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을 제안하였다. 이것은 우리 사회가 지향하는 사람 중심의 지능화 사회의 핵심 지능정보기술인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데이터 주도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는 현 정부가 포용국가 비전과 전략을 통해서 제시한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와 더불어 다양한 사회서비스에 대한 수요자의 공간적 접근성과 서비스 이용의 선택권을 강화함으로써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따른 사회적 변화와 새로운 위험에 대응하는 것을 넘어 '모두가 참여하고 모두가 누리는 4차 산업혁명 구현'을 위한 포용과 혁신의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추진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셋째, 포용적 사회안전망은 삶의 안정성과 자유로운 선택을 통해 우리 사회 전반의 혁신 역량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포용적 사회안전망은 우선적으로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하여 나타날 수 있는 기술혁신에 따른 사회적 배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나아가 포용적 사회안전망은 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노동시장의 불안정으로 인한 일자리 상실과 소득 감소, 일상생활의 가계부담 증가로 인한 소비의 제약과 상대적 박탈감을 경험하게 될 국민들에게 삶의 안정성과 자유로운 선택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삶의 안정성과 선택을 바탕으로 국민들의 창의성과 다양성이 발휘되며, 민주적 의사결정과 협업을 통해 우리 사회의 혁신 역량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넷째, 혁신적 사회안전망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개인의 다양성과 선택을 존중하는 수요자 중심의 찾아주는 복지서비스 제공을 통해 포용성

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혁신적 사회안전망은 사각지대 문제를 획기적으로 해소하고 정책수요자인 국민의 관점에서 맞춤형 서비스의 제공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사회안전망 자체의 포용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개인의 다양성과 선택을 존중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포용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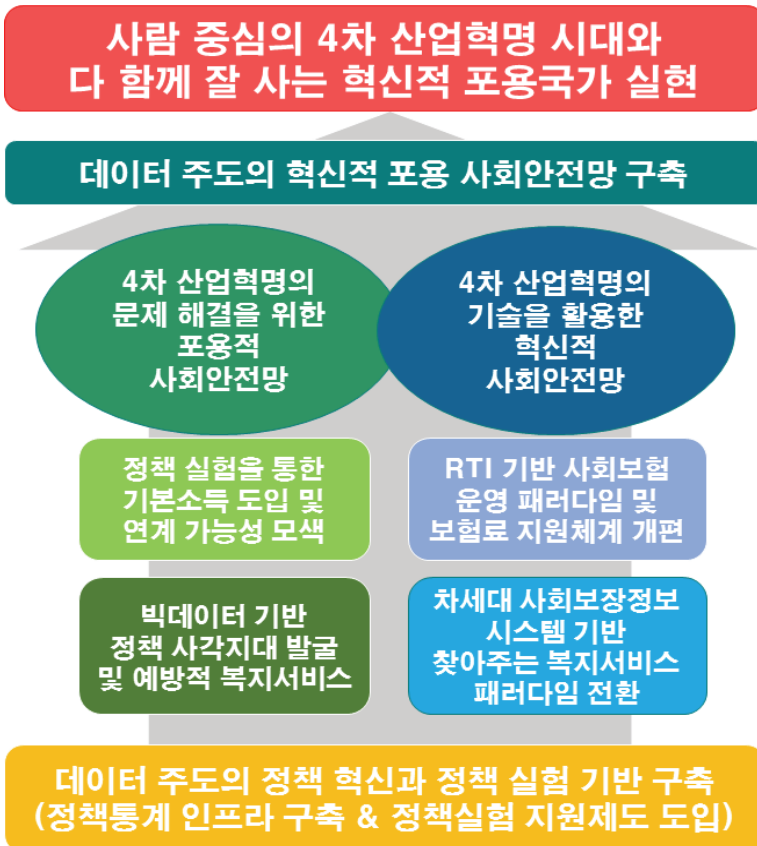
요컨대 ‘사람 중심의 포용과 혁신의 사회안전망’은 국민 모두에게 삶의 안정성과 자유로운 선택의 가능성을 제공함으로써 민주적인 의사결정과 협력적인 관계를 바탕으로 우리 사회의 혁신 역량을 제고하는 동시에, 개인의 다양성과 선택을 존중하는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포용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그동안 우리가 경제정책과 사회정책의 관계, 사회정책의 역할에 대해 거시적 차원에서 ‘성장과 분배의 이분법’ 또는 ‘성장과 분배 상호 간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선순환 구조 등으로 언급했던 것들을, 모든 국민이 자신의 일상생활에서 삶의 질과 관련된 정책을 체감할 수 있는 미시적 차원에서 강조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4장(소득보장)과 5장(사회서비스)에서 4차 산업혁명의 새로운 사회적 위험에 대한 대응과 동시에 사람 중심의 4차 산업혁명을 구현하기 위한 ‘혁신적 포용 사회안전망 개편 방안’으로 다음의 4가지 구체적 정책 추진 방안을 제안하였다.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데이터 주도의 포용과 혁신의 소득보장체계 개편을 위해서, 첫 번째로 기존 사회안전망의 혁신적 개편 방안으로 실시간 소득 파악 정보시스템(RTI) 기반의 사회보험 운영 패러다임 개편 및 사각지대 해소 방안을, 두 번째로 대안적 소득보장제도로서 정책실험 데이터 기반 기본소득 도입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안하였다.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데이터 기반 포용과 혁신의 사회서비스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서는 첫 번째로, 빅데이터와 위험예측 모형 기반 정책 사각지대 발굴 및 예방적 복지서비스 제공 방안을, 두 번째로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기반 찾아주는 복지서비스 지원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을 위한 구체적 대안을 제시하였다.

[그림 6-1] 사람 중심의 4차 산업혁명 구현을 위한 데이터 주도의 혁신적 포용 사회안전망 구축 방향



요컨대 사회정책 강화로 한국 사회의 포용성을 높이고, 혁신적인 사회로 이행하기 위한 기반 구축을 위해서 “경제정책 우선주의 & 최소주의 사회정책으로 요약할 수 있는 과거 우리나라의 국정 기조 및 경제-사회정책 또는 성장-분배 패러다임에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회정책을 경제정책과 균형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또한 이러한 사회정책 추진하에 상호작용을 바탕으로 포용과 혁신의 사회안전망은 포용과 혁신의 수준을 동시에 제고할 수 있는 방향으로 보다 강화되어야 한다.

이것은 거시적 차원에서 그동안 강조되었던 경제-사회정책 또는 성장-분배 패러다임을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포용과 혁신의 패러다임으로 전환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사회경제적 변화와 이로 인한 완전히 새로운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는 동시에 4차 산업혁명의 핵심적인 지능정보기술을 사람 중심의 관점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모든 국민이 포용적이면서 혁신적인 사회안전망을 바탕으로 삶의 안정과 자유로운 선택을 통해 소외되거나 배제되지 않고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기술발전의 성과를 모두가 참여하면서 누릴 수 있는 “사람 중심의 4차 산업혁명, 다 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를 실천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 강남훈. (2017). 한국형 기본소득 모델의 가구별 소득재분배 효과. 한국사회경제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서울: 한국사회경제학회, 1-20.
- 구교준, 최현수, 반가운, 정이윤, 장한일, 최정호. (2018). 기본소득으로서 청년 수당 효과성 측정을 위한 정책실험 설계 연구. 서울연구원, LAB2050.
- 김교성, 백승호, 서정희, 이승윤. (2018). 기본 소득이 온다. 서울: 사회평론아카데미.
- 김교성, 이지은. (2017). 기본소득의 '실현가능성'에 대한 탐색. 비판사회정책, 56, 7-57.
- 김병인. (2016). 기본소득은 사회보장을 위한 최선의 대안인가?: 사회정책의 필요(needs) 개념에 입각한 비판적 검토. 사회복지정책, 43(4), 79-107.
-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 (2017), 혁신성장을 위한 사람 중심의 4차 산업혁명 대응계획.
-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 (2018), 4차 산업혁명위원회 주요성과 및 추진방향.
-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관계부처합동. (2018. 9.). 문재인 정부 포용국가 비전과 전략: 국민의 삶을 바꾸는 포용과 혁신의 사회정책.
- 미래창조과학부. (2017),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지능정보사회 중장기 종합대책.
- 박제성. (2016). 새로운 고용관계를 규율하기 위한 노동법의 역할과 원칙: 디지털 노동관계를 중심으로. 고용관계 변화와 사회복지 패러다임 연구 (pp.11-20). 세종: 한국노동연구원.
- 백승호. (2010). 기본소득 모델들의 소득재분배 효과 비교분석. 사회복지연구, 41(3), 185-212.
- 백승호. (2014). 서비스경제와 한국사회의 계급, 그리고 불안정 노동 분석. 한국사회정책, 21(2), 57-90.

- 백승호. (2017). 기본소득 실현을 위한 기본소득 모형들. 월간 복지동향, 221, 14-21.
- 백승호. (2018). 플랫폼 노동과 복지국가 개혁전략. 지식협동조합 좋은나라 이슈페이퍼 현안과정책, 245.
- 백승호, 남재욱, 이승윤. (2018). 플랫폼 노동시장과 사회보장제의 부정합 (한국 플랫폼경제의 노동시장구조와 일에 대한 질적 연구). 2018년 한국사회정책연합학술대회, 서울: 한국사회정책학회.
- 백승호, 이승윤. (2018). 기본소득 논쟁 제대로 하기. 한국사회정책, 25(3), 37-71.
- 보건복지부법. 법률 제15876호. 2018.
- 서정희, 박경하. (2016). 한국의 가짜 자영업 추정을 통해서 본 비정규 근로자 규모의 오류. 한국사회정책, 23(3), 49-77.
- 서정희, 백승호. (2018).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사회보장 개혁 : 플랫폼 노동에서의 사용종속관계와 기본소득. 법과 사회, 56, 113-152.
- 안현효. (2012). 인지자본주의와 기본소득. 마르크스주의 연구, 9(1), 124-143.
- 양재진. (2018). 기본소득은 미래 사회보장의 대안인가? 한국사회정책, 25(1), 45-70.
- 이성춘. (2011). 플랫폼이란, https://www.digieco.co.kr/KTFront/report/report_issue_trend_view.action?board_seq=4855&board_id=issue_trend#/2019.1.4.
- 이승윤, 이정아, 백승호. (2016). 한국의 불안정 청년노동시장과 청년 기본소득 정책안. 비판사회정책(52), 365-405.
- 이주희, 정성진, 안민영, 유은경. (2015). 모호한 고용관계의 한국적 특성 및 전망. 동향과 전망. 통권(95), 252-289.
- 이향우. (2017). 정동 자본주의와 자유노동의 보상: 독점 지대, 4차 산업, 그리고 보편적 기본소득. 파주: 한울아카데미.
- 장지연. (2017). 노동시장의 변화와 사회정책적 대응. 노동리뷰, 146, 5-10.
- 정용찬. (2017).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데이터 경제 활성화 전략. KISDI Premium Report, 17(04), 1-24.

- 청와대. 대한민국 청와대 홈페이지. Retrived from <http://www.president.go.kr> ./ 2019. 1. 4.
- 최유진 외. (2016). 2016년 양성평등 실태조사 분석 연구. 서울: 여성가족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최현수. (2018a). 사회복지 분야의 공공데이터 연계 및 활용 사례. KIPA 조사포럼, Vol.24 Spring. 서울: 한국행정연구원.
- 최현수. (2018b). 빅데이터를 활용한 e아동행복지원시스템 구축. 빅데이터 연구방법론과 젠더 이슈 세미나.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최현수, 오미애. (2015). 데이터 연계방법론을 활용한 납세 및 복지수급여부에 따른 복지인식 비교 분석. 자료분석학회지, 17(4), 1983-1994.
- 최현수, 오미애. (2017a). 4차 산업혁명 및 지능정보사회의 새로운 사회적 위험과 복지 패러다임 전환 필요성. 보건복지 ISSUE & FOCUS, 333.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최현수, 오미애. (2017b). 보건복지 분야 데이터 주도 정책 추진 필요성 및 방향. 보건복지포럼, 250, 15-28.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고용노동부법. 법률 제16270호. 2019.
- 한컴 경제용어사전. 각 경제. Retrived from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3403564&cid=42107&categoryID=42107> / 2019.1.4.
- Atkinson, A. B. (1996). The case for a participation income. *The Political Quarterly*, 67(1), 67-70.
- Atkinson, A. (2014). "Inequality: What is to be done?".
- Basic income Earth Network. Retrived from <http://basicincome.org/basic-income/> 2019.1.4.
- Bosch, G. (2004). Towards a new standard employment relationship in western europe. *British Journal of Industrial Relations*, 42(4), 617-636.

- Buchanan, J. M. (1997). Can democracy promote the general welfare? *Social Philosophy and Policy*, 14(2), 165-179.
- Clasen, J., & Clegg, D. (2007). Levels and levers of conditionality: Measuring change within welfare states. *Investigating Welfare State Change. the 'Dependent Variable Problem' in Comparative Analysis. Cheltenham/Northampton. Edward Elgar*, , 166-197.
- De Wispelaere, J. (2015). An income of one's own? the political analysis of universal basic income.
- Dowding, K., De Wispelaere, J., & White, S. (2003). Stakeholding—a new paradigm in social policy. *The ethics of stakeholding* (pp. 1-28) Springer.
- Frankel, S., & Mulvale, J. P. (2014). Support and inclusion for all manitobans: Steps toward a basic income scheme. *Man. LJ*, 37, 425.
- Friedman, M. (1962). Capitalism and freedom. chicago: Univ.
- HM Revenue & Customs(2012). Real time Information for PAYE.
- Jetzek, T., Avital, M., & Bjorn-Andersen, N. (2014). Data-driven innovation through open government data. *Journal of Theoretical and Applied Electronic Commerce Research*, 9(2), 100-120.
- Jordan, B. (2012). The low road to basic income? tax-benefit integration in the UK. *Journal of Social Policy*, 41(1), 1-17.
- GiveDirectly(2018). Basic Income. Retrive from <https://www.givedirectly.org/basic-income>.
- Kalleberg, A. L. (2000). Nonstandard employment relations: Part-time, temporary and contract work. *Annual Review of Sociology*, 26(1), 341-365.
- Kalleberg, A. L. (2009). Precarious work, insecure workers: Employment relations in transition.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74(1),

1-22.

Mulvale, J. P. (2008). Basic income and the canadian welfare state: Exploring the realms of possibility. *Basic Income Studies*, 3(1)

Mulvale, J. P., & Vanderborght, Y. (2012). Canada: A guaranteed income framework to address poverty and inequality? *Basic income guarantee and politics* (pp. 177-201) Springer.

Murray, C.(2006). In our hands: *A plan to replace the welfare state* Rowman & Littlefield.

OECD. (2014). *Data-driven Innovation for Growth and Well-being*.

Retrieved

from <https://www.oecd.org/sti/inno/data-driven-innovation-in-terim-synthesis.pdf>.

OECD. (2018). Retrieved from <http://stat.oecd.org/> 2019.1.4.

Environment statistics(<https://data.oecd.org/environment.htm>.)

Educational finance

indicators(<http://www.oecd.org/education/database.htm>.)

Income Distribution and Poverty(<https://stats.oecd.org/>.)

Insurance Indicators(<https://stats.oecd.org/>.)

Social Expenditure

Database(<http://www.oecd.org/social/expenditure.htm>.)

Offe, C. (2001). *Pathways from here. What's wrong with a free lunch?*(pp.11-20). Boston: Beacon Press.

Skocpol, T. (1991). Targeting within universalism: Politically viable policies to combat poverty in the united states. *The Urban Underclass*, 411(411), 437-459.

Standing, G. (2018). 기본소득: 일과 삶의 새로운 패러다임. (안효상 옮김). 파주: 창비.

Van Lancker, W., & Van Mechelen, N. (2015). Universalism under

- siege? exploring the association between targeting, child benefits and child poverty across 26 countries. *Social Science Research*, 50, 60-75.
- Van Parijs, P. (1992). Competing justifications of basic income. *Arguing for Basic Income: Ethical Foundations for a Radical Reform*, , 3-43.
- Van Parijs, P. (1995). Real freedom for all.
- Van Parijs, P. (2001). *What's wrong with a free lunch?* Beacon Press.
- Van Parijs, P. (2004). Basic income: A simple and powerful idea for the twenty-first century. *Politics & Society*, 32(1), 7-39.
- Van Parijs, P., Jacquet, L., & Salinas, C. C. (2000). Basic income and its cognates. *Basic Income on the Agenda. Policy Objectives and Political Chances*,
- Weil, D. (2015). 균열일터: 당신들을 위한 회사는 없다.(송연수 옮김). 황소자리.
- World Economic Forum. (2015). *Navigating the next industrial revolution*. Retrieved from <https://www.weforum.org/agenda/2015/09/navigating-the-next-industrial-revolution2/>.
- World Economic Forum. (2017a). *The Global Gender Gap Report 2017*. Retrieved from http://www3.weforum.org/docs/GRR17_Report_web.pdf .
- World Economic Forum. (2017b). *The Global Risk Report*. Retrieved from <https://www.weforum.org/>.
- Wright, E. O. (2004). Basic income, stakeholder grants, and class analysis. *Politics & Society*, 32(1), 79-87.
- Wright, E. O. (2006). Basic income as a socialist project. *Basic Income Studies*, 1(1)

〈기타 참고자료〉

- 강남훈. (2018). 해외 기본소득 실험의 의의와 한계. 국제사회보장리뷰, 봄 (4), 62-70.
- 국민건강보험공단. (2018). 2017 건강보험 주요통계. 원주: 국민건강보험공단.
- 국민연금공단. (2017). 2016년 국민연금통계연보. 전주: 국민연금공단.
- 고용노동부. (2017). 2017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세종: 고용노동부
- 공무원연금공단. (2017). 공무원연금통계. 제주: 공무원연금공단
- 금융감독원 보험감리국. (2018. 4. 16.). 2017년 보험회사의 실손의료보험 손해율 등 현황.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Retrived from http://www.fss.or.kr/fss/kr/promo/bodobbbs_view.jsp?seqno=21275&no=1&s_title=2017%B3%E2%20%BA%B8%C7%E8%C8%B8%BB%E7%C0%C7&s_kind=title&page=1/ 2019. 1. 4.
- 금융감독원 연금금융실. (2017. 5. 3.). 2016년도 퇴직연금 적립 및 운용 현황.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Retrived from http://www.fss.or.kr/fss/kr/promo/bodobbbs_view.jsp?seqno=20472&no=1&s_title=2016%B3%E2%B5%B5%20%C5%F0%C1%F7%BF%AC%B1%DD&s_kind=title&page=1/ 2019. 1. 4.
- 금융감독원 연금금융실. (2018. 4. 9.). '17년 연금저축 현황 분석 결과.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Retrived from http://www.fss.or.kr/fss/kr/promo/bodobbbs_view.jsp?seqno=21243&no=1&s_title=17%B3%E2%20%BF%AC%B1%DD%C0%FA%C3%E0%20%C7%F6%C8%B2%20%BA%D0%BC%AE&s_kind=title&page=1/ 2019. 1. 4.
- 노정호. (2018). 핀란드와 네덜란드 기본소득 실험의 방법론적 의미와 한계, 그리고 시사점. 한국사회정책, 25(1), 71-96.
- 은민수. (2016). 캐나다의 기본소득보장 제도의 도입시도와 기본소득의 정치. 2016 한국사회정책연합공동학술대회. 서울: 사회복지법제학회, 한국사회정책학회, 한국사회보장학회,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비판과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한국건강형평성학회.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2017). 2016 사학연금통계연보. 나주: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 장윤중, 김석관 외. (2017). 제4차 산업혁명의 경제사회적 충격과 대응 방안: 기술과 사회의 동반 발전을 위한 정책 과제. 세종: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정형선, 신정우 외. (2018). 2016년 국민보건계정. 세종: 보건복지부, 연세대학교 의료복지연구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통계청. (2018). 장래인구추계[데이터파일]. Retrived from <http://kosis.kr/search.do/> 2019.1.4.
- 통계청 사회통계기획과. (2018. 3. 15.). 2017년 초중고 사교육비조사 결과, 통계청 보도자료. Retrived from http://www.kostat.go.kr/portal/korea/kor_nw/2/13/1/index.board?bmode=read&bSeq=&aSeq=366658&pageNo=1&rowNum=10&navCount=10&currPg=&sTarget=title&sTxt=. 2019.1.4.
- 홍민기. (2017). 보정 지니계수, 경제발전연구, 23(3), 1-22.
- Barnboorn, F.(2016). *NETHERLANDS: Design of BI Experiments Proposed*.Retrieved from <https://basicincome.org/>
- European Commission. (2013). *Social investment package: Towards Social Investment for Growth and Cohesion*. Retrieved from <https://ec.europa.eu/social/main.jsp?langId=en&catId=1044>.
- Government of Ontario. (2016). Jobs for today and tomorrow-2016 ontario budget.
- Government of Ontario. (2017). Basic Income Consultation: What We Heard. Retrieved from <https://www.ontario.ca/page/basic-income-consultations-what-we-heard> 2018.
- Haushofer, J., &Shapiro, J. (2013). Household response to income changes: Evidence from an unconditional cash transfer program

- in kenya. *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
 International Monetary Fund. (2017). *Fostering Inclusive Growth: Staff note for the discussion at the meeting of G20*. Retrieved from <https://www.imf.org/external/np/g20/pdf/2017/062617.pdf>.
- International Monetary Fund. (2018). *Republic of korea: Selected Issues(IMF Country Report No. 18-41)*. Retrieved from file:///V:/Users/User/Downloads/cr1841.pdf.
- International Monetary Fund. *IMF Data Mapper(World Economic Outlook(April 2018)-Gross Domestic Product)*. Retrieved from https://www.imf.org/external/datamapper/NGDP_RPCH@WEO/WEOWORLD.
- Ikkala, M. (2012). Finland: Institutional resistance of the welfare state against a basic income. *Basic income guarantee and politics* (pp. 63-81) Springer.
- Kela, K. (2016). From idea to experiment. report on universal basic income experiment in finland.
- Lavoie, M., & Stockhammer, E. (2013). Wage-led growth: Concept, theories and policies. *Wage-led growth* (pp. 13-39) Springer.
- Lewis, Michael (2017). "Some Thoughts on Basic Income 'Experiments'". Basic Income News. Retrieved from <http://basicincome.org/news/2017/09/thoughts-basic-income-experiments/> / 2019. 1. 4.
- OECD. (2014a). *All on Board: Making inclusive growth happen*. Retrieved from https://www.oecd-ilibrary.org/development/all-on-board_9789264218512-en. / 2019. 1. 4.
- OECD. (2014b). *"Social Expenditure Update : Social spending is falling in some countries, but in many others it remains at historically high levels"*. Retrieved from <https://www.oecd.org/els/soc/OECD2014-Social-Expenditure-Update-Nov2014-8pages.pdf>. / 2019. 1. 4.

- OECD. (2017). *How's Life? 2017 Measuring Well-being*. Retrieved from [//doi.org/10.1787/23089679](https://doi.org/10.1787/23089679).
- OECD. (2017). OECD 교육지표 2017.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옮김).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 Perkiö, J. (2012). The struggle over interpretation: Basic income in the finnish public discussion in 2006-2012. *A Paper Presented in the 14th BIEN Congress in Munich*. [Http://Www. bien2012.Org/Sites/Default/Files/paper_162_en. Pdf](http://www.bien2012.Org/Sites/Default/Files/paper_162_en.Pdf),
- Pulkka, V. (2017). *Note on the Finnish Basic Income Experiment*. Retrieved from <http://www.stopskurdas.lt/wp-content/uploads/2018/07/Ville-Veikko-Pulkka.pdf>.
- UNRISD. (2016). *Policy Innovations for Transformative Change*. Retrieved from [http://www.unrisd.org/80256B42004CCC77/\(httpInfoFiles\)/2D9B6E61A43A7E87C125804F003285F5/\\$file/Flagship2016_FullReport.pdf](http://www.unrisd.org/80256B42004CCC77/(httpInfoFiles)/2D9B6E61A43A7E87C125804F003285F5/$file/Flagship2016_FullReport.pdf). / 2019. 1. 4.
- Upstream. (2015). A basic income guarantee may be the best medicine. Retrieved from http://www.thinkupstream.net/big_medicine 2018.12.19.
- Van der Veen, R. (2017). Local Experiment with Social Assistance in the Netherlands: What Can Actually Tell Us About Basic Income? *How to experiment basic income in Europe*. Seoul, Korea: Yonsei University.
- Wikipedia. (2018). Basic income in Canada. Retrieved from https://en.wikipedia.org/wiki/Basic_income_in_Canada.
- Williamson, O. E.(1985). *The economic institutions of capitalism* Simon and Schuster.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인지여부 및 관심정도

문1. 선생님께서는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서 어느 정도 알고 계십니까?

- ① 잘 알고 있다
- ② 어느 정도 알고 있다
- ③ 들어본 적은 있다
- ④ 전혀 모른다

문2.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하여 다음의 단어를 들어보거나 알고 계십니까?

	잘 알고 있다	어느 정도 알고 있다	들어본 적은 있다	전혀 모른다
(1) 인공지능(AI : 에이아이)	①	②	③	④
(2) 빅데이터	①	②	③	④
(3) 사물인터넷(IoT : 아이오티)	①	②	③	④
(4) 블록체인	①	②	③	④
(5)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일자리 대체 감소	①	②	③	④
(6)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한 기본소득 도입	①	②	③	④

문3. 선생님께서는 4차 산업혁명과 그로 인한 다양한 변화에 대해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까?

- ① 매우 관심 있다
- ② 약간 관심 있다
- ③ 별로 관심 없다
- ④ 전혀 관심 없다

4차 산업혁명으로 예상되는 사회적 변화와 위험에 대한 인식

- ※ 전 세계적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로 사회 전반에서 커다란 변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 ※ 4차 산업혁명이란 로봇공학, 인공지능, 사물 인터넷, 3D(쓰리디)프린팅, 빅데이터 등 새로운 기술발전에 의해 경제 및 사회구조가 급격하게 변화하는 것을 뜻합니다.

4. 선생님께서는 4차 산업혁명과 그로 인한 다양한 변화가 자신의 삶과 얼마나 관련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관련 된다
- ② 약간 관련 있다
- ③ 별로 영향이 없다
- ④ 전혀 영향이 없다

5-1. 선생님께서 4차 산업혁명이 선생님 자신의 삶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영향을 거의 미치지 않을 것 같다'면 1점, '매우 큰 영향을 미칠 것 같다'면 10점으로 하여 1점부터 10점 중에 응답해주세요.

	문 5-1. 본인의 삶
(1) 4차 산업혁명은 전반적으로 나 자신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___점
(2) 4차 산업혁명은 전반적으로 나 자신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___점
(3)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나의 일자리를 잃게 되거나 근로시간이 줄어들 것이다	___점
(4)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나의 소득이 감소하고 소득이나 부의 불평등으로 박탈감이 심해질 것이다	___점
(5)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나의 삶이 외로워지고 윤리적인 갈등이나 고민을 하게 될 것이다	___점
(6)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기술 발전으로 다양한 서비스가 증가하여 내 삶의 질이 높아질 것이다	___점

5-2. 선생님께서 4차 산업혁명이 우리 사회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영향을 거의 미치지 않을 것 같다'면 1점, '매우 큰 영향을 미칠 것 같다'면 10점으로 하여 1점부터 10점 중에 응답해주세요.

	문 5-2. 우리 사회
(1) 4차 산업혁명은 전반적으로 우리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___점
(2) 4차 산업혁명은 전반적으로 우리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___점
(3)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일자리가 대체 또는 감소될 것이다	___점
(4)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소득이 감소하고 소득이나 부의 불평등이 심해질 것이다	___점
(5)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소외 및 고립 또는 새로운 윤리적·사회적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___점
(6)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기술 발전으로 다양한 서비스가 증가하여 삶의 질이 높아질 것이다	___점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기 위한 사회안전망의 중요성 및 대응 수준

6.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하기 위한 정책 대응이나 혁신적 변화가 시급한 사회 정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순위 : / 2순위 :)

- ① 미래사회에 필요한 인재 양성을 위한 초·중고 대학 교육과정 혁신
- ② 일자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고용서비스 및 평생 교육프로그램 혁신
- ③ 소득 감소 및 불평등에 대응하기 위한 기본소득 등 소득보장제도 강화
- ④ 가계부담 완화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일상생활 관련 다양한 사회복지서비스 확대
- ⑤ 건강수명 연장과 여가시간 확대에 따른 문화여가 정책의 다양성과 창의성 확대
- ⑥ 기술발전으로 인한 새로운 문제 해결과 일상의 안전과 생명 존중을 위한 예방적 정책 강화

7-1.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하기 위한 사회 정책별 중요도를 평가해 주세요. 중요도가 아주 낮으면 1점, 중요도가 매우 높으면 10점으로 하여 1점부터 10점 중에 응답해주세요.

	문7-1. 중요도
(1) 미래사회에 필요한 인재 양성을 위한 초·중·고 대학 교육과정 혁신	_____점
(2) 일자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고용서비스 및 평생 교육프로그램 혁신	_____점
(3) 소득 감소 및 불평등에 대응하기 위한 기본소득 등 소득보장제도 강화	_____점
(4) 가계부담 완화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일상생활 관련 다양한 사회복지서비스 확대	_____점
(5) 건강수명 연장 및 여가시간 확대에 따른 문화여가 정책의 다양성과 창의성 확대	_____점
(6) 기술발전으로 인한 새로운 문제 해결과 일상의 안전과 생명 존중을 위한 예방적 정책 강화	_____점

7-2.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앞서 말씀드린 사회 정책에 얼마나 잘 대응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각 정책별로 대응을 전혀 못하고 있으면 1점, 매우 잘 대응하고 있으면 10점으로 하여 1점부터 10점 중에 응답해주세요.

※ 면접원 : 잘 모르겠다는 (99) 입력

	문7-2. 대응 수준
(1) 미래사회에 필요한 인재 양성을 위한 초·중·고 대학 교육과정 혁신	_____점
(2) 일자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고용서비스 및 평생 교육프로그램 혁신	_____점
(3) 소득 감소 및 불평등에 대응하기 위한 기본소득 등 소득보장제도 강화	_____점
(4) 가계부담 완화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일상생활 관련 다양한 사회복지서비스 확대	_____점
(5) 건강수명 연장 및 여가시간 확대에 따른 문화여가 정책의 다양성과 창의성 확대	_____점
(6) 기술발전으로 인한 새로운 문제 해결과 일상의 안전과 생명 존중을 위한 예방적 정책 강화	_____점

Q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사회안전망 개편 방향 및 증세 인식

8. 귀하나 귀하의 가족은 정부의 기초연금, 아동수당, 보육료지원, 근로장려금, 국가장학금 등 다양한 사회복지정책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 ① 받은 경험이 있고 현재도 받고 있다
- ② 받은 경험이 있지만 현재는 받고 있지 않다
- ③ 지원받은 경험이 전혀 없고 현재도 받고 있지 않다

9. 귀하는 실제로 소득세를 납부하고 있습니까?

- ① 소득세를 납부하고 연말정산 과정에 일부만 환급받거나 추가로 납부한다
- ② 소득세를 원천징수로 납부하지만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 신고를 통해 전부 환급 받는다
- ③ 소득세를 전혀 납부하지 않는다

10. 귀하는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일자리와 소득 감소에 대응하여 소득수준이나 근로와 상관없이 노인, 장애인 등 집단 또는 국민 모두에게 동일한 액수의 현금을 지급하는 기본소득을 도입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찬성한다 ② 대체로 찬성한다
③ 다소 반대한다 ④ 매우 반대한다

문11.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일자리와 소득 감소에 대응하여 모든 국민에게 기본소득을 제공할 경우 보다 많은 복지 예산이 필요합니다. 귀하는 기본소득 재원 마련을 위해 기존 복지 제도를 줄이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찬성한다 ② 대체로 찬성한다
③ 다소 반대한다 ④ 매우 반대한다

12. 그렇다면 기존의 복지제도는 모두 유지하면서 세금 부담을 높여 기본소득 재원을 마련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찬성한다 ② 대체로 찬성한다
③ 다소 반대한다 ④ 매우 반대한다

13.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하기 위한 사회안전망 개편 방향에 대해 어느 정도 동의하십니까?
각 정책별로 대응을 전혀 동의하지 않으면 1점, 매우 동의하시면 10점으로 하여 1점부터 10점 중에 응답해주세요.

	동의 정도
(1)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을 포함하여 모든 사람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해야 한다	_____점
(2) 저소득층 중심의 선별적 복지보다 중산·서민층을 포함하여 보편적 복지를 지향해야 한다	_____점
(3)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한 사회안전망 확대를 위하여 세금부담을 다소 높여야 한다	_____점
(4) 사회안전망 확대는 삶의 안정을 가져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새로운 도전과 혁신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_____점
(5)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하여 수요자 맞춤형 정책을 제공해야 한다	_____점

응답자 인구학적 특성

배문1. 귀하의 최종학력은 어떻게 되십니까?

- ① 중학교 졸업 이하 ② 고등학교 졸업 ③ 대학교 재학 중
④ 대학교 졸업 ⑤ 대학원 재학 이상 ⑥ 모름/무응답(읽지 마시오)

배문2. 귀하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① 관리자	임원, 국회의원, 고위공무원, 대표이사, 행정및경영지원관리자, 교장, 원장, 학장, 총장, 생산관리자, 서비스관리자
②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전문가, 연구원, 시험원, 분석가, 개발자, 기획자, 건축기사, 의사, 교사, 간호사, 방사선사, 안경사, 의무기록사, 목사, 수녀, 강사, 교사, 회계사, 자산운용사, 홍보역가, 성악가, 작가, 디자이너, 유통전문
③ 사무종사자	사무원, 상담안내원, 전화상담원, 속기사
④ 서비스 종사자	경찰관, 소방관, 간병인, 이미용사, 관광안내원, 캐디, 승무원, 주방장, 조리사, 웨이터
⑤ 판매 종사자	영업직, 매장판매직, 방문판매직
⑥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재배종사자, 축산사육사, 감별사, 조림및벌목원, 양식원, 어부 및 해녀
⑦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제철제련원, 도색원, 식품제조원, 재단자, 재봉사, 수선원, 수리원, 조율사, 용접원, 정비원, 설치수리원, 석공, 목공, 미장공, 도배공, 배관공
⑧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기계조작원, 부품조립원, 화학발전장치 운전원, 기관사, 운전사, 갑판원, 등대원, 인쇄조작원
⑨ 단순노무 종사자	건설, 단순종사직, 택배원, 배달원, 포장원, 환경미화원, 청소원, 경비원, 기사도우미, 주유원, 경비원, 세척원, 구두미화원
⑩ 군인	
⑪ 주부	
⑫ 학생	
⑬ 무직	

선문3. 귀 가구의 가구원수는 몇 명입니까?

■ _____명

배문4. 귀하의 소득을 포함하여 귀댁의 월평균 가구소득은 어느 정도입니까? 보너스, 은행이자 등을 모두 포함하여 세전 소득을 말씀해 주십시오.

- ① 49만원 이하 ② 50~99만원
③ 100~149만원 ④ 150~199만원
⑤ 200~249만원 ⑥ 250~299만원
⑦ 300~349만원 ⑧ 350~399만원
⑨ 400~449만원 ⑩ 450~499만원
⑪ 500~549만원 ⑫ 550~599만원
⑬ 600~649만원 ⑭ 650~699만원
⑮ 700만원 이상 ⑯ 모름/무응답 (읽지 마시오)

◀ 끝까지 응답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

간행물회원제 안내

▶ 회원에 대한 특전

- 본 연구원이 발행하는 판매용 보고서는 물론 「보건복지포럼」, 「보건사회연구」도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으며 일반 서점에서 구입할 수 없는 비매용 간행물은 실비로 제공합니다.
- 가입기간 중 회비가 인상되는 경우라도 추가 부담이 없습니다.

▶ 회원종류

- 전체간행물회원 : 120,000원
- 보건분야 간행물회원 : 75,000원
- 사회분야 간행물회원 : 75,000원
- 정기간행물회원 : 35,000원

▶ 가입방법

- 홈페이지(www.kihasa.re.kr) - 발간자료 - 간행물구독안내

▶ 문의처

-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 1~5F
간행물 담당자 (Tel: 044-287-8157)

KIHASA 도서 판매처

- | | |
|---|---|
| ■ 한국경제서적(총판) 737-7498 | ■ 교보문고(광화문점) 1544-1900 |
| ■ 영풍문고(종로점) 399-5600 | ■ 서울문고(종로점) 2198-2307 |
| ■ Yes24 http://www.yes24.com | ■ 알라딘 http://www.aladdin.co.kr |